연구보고 R718 | 2014. 12.

귀농·귀촌 요인과 농촌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박 시 현 선임연구위원
최 용 욱 초청연구원

머 리 말

귀농·귀촌 가구는 2010년 4,067가구에서 2011년 10,503가구, 2012년 27,008가구, 2013년 32,424가구로 증가하였다. 귀농·귀촌 관련 뉴스가 빈번하게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TV도 귀농했다'라는 표현처럼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관한 프로그램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귀농·귀촌 관련 각종 행사에 많은 도시민들이 방문한다. 귀농·귀촌은 농업과 농촌에 국한된 현상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사가 된 것이다.

귀농·귀촌 현상은 우리 사회의 변화 모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귀농·귀촌 현상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전개 방향을 가늠해 보는 것은 귀농·귀촌 정책 수립에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향후 농촌의 변화 모습을 예측해 보는 데도 매우 필요한 과제이다.

이 연구는 귀농·귀촌의 요인과 그것이 농촌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과 귀농·귀촌 통계, 귀농·귀촌인 설문조사, 마을 이장 조사, 기타 관련자 인터뷰 등의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5개 시군의 귀농·귀촌인과 온라인 조사 응답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심층 인터뷰에 응해 주신 귀농·귀촌자 여러분과 귀농·귀촌협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모쪼록 이 연구가 귀농·귀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201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요 약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의 귀농·귀촌 가구는 2001년 880가구에서 2013년 32,424가구로 37배 증가하였다. 귀농·귀촌 현상은 농업과 농촌에 국한된 현상만이 아니며,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귀농·귀촌 관련 선행연구는 귀농·귀촌 현상을 개개인의 행태적 특징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귀농·귀촌 현상을 우리 사회의 변화 모습과 연관 지어 살펴보고자 하는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는 귀농·귀촌의 요인과 귀농·귀촌이 농촌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 사회의 변화 모습과 연계지어 거시적으로 파악하고 향후의 전개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등을 통하여 연구 과제와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통계분석과 설문조사, 심층조사를 통하여 귀농·귀촌 실태를 파악하고, 귀농·귀촌 요인과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통계분석은 인구 통계, 전국의 귀농·귀촌 현황 통계, 지역 단위의 귀농·귀촌 통계 자료에 기초한다. 인구 통계 분석으로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국내의 읍면동 인구이동 원자료(약 100만 가구 인구이동 자료)에 기초하여 동부와 읍면부 간의 인구이동 특성을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는 귀농·귀촌자 조사와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 이장 조사의 2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귀농·귀촌자 조사는 5개 지역에 대한 오프라인 조사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조사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귀농·귀촌 현상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귀농·귀촌이 향촌이도형 인구이동을 촉진하며 농촌의 인구 구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50대가 귀농·귀촌의 중심 세대이지만 40대와 30대 귀농·귀촌자도 적지 않다. 특히 농업 목적의 귀농·귀촌에서는 40대 이하의 귀농·귀촌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5개 지역 설문조사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귀촌인의 평균 영농규모는 3,048평이고 영농 소득은 연간 1,980만 원으로 나타났다. 농업소득만 가지고는 생활비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귀농·귀촌가구는 기존 주민에 비해 다양한 경제활동을 수행한다. 귀농·귀촌가구의 경제 활동은 그들의 배경이나 생활양식만큼이나 다양한 편이다.

귀농·귀촌자들이 귀농·귀촌지역을 결정할 때는 수도권과 대도시와의 거리, 지가 및 용지 확보, 농사기술 습득 및 판로, 지자체의 노력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귀농·귀촌 요인을 설명하는 틀로 구조요인, 도시의 압출요인, 농촌의 흡인요인, 정책요인과 이들 요인에 반응하는 개인의 행태요인을 설정하였다. 구조요인으로 귀농·귀촌자 수와 경제성장률, 실업률을 비교한 결과 귀농·귀촌자수는 경제성장률과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귀농·귀촌 증대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년퇴직 연령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청년층의 귀농·귀촌 현상도 에코 세대의 인구 구조와 삶에 대한 행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귀농·귀촌은 도시의 압출요인보다는 농촌의 흡인요인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요인은 귀농·귀촌 자체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어디로 귀농·귀촌할까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이 농촌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인구 변화, 지역 농업 변화, 지역 경제 변화, 지역사회 변화로 살펴보았다. 2013년까지의 동부(도시)와 읍면부(농촌)의 인구 이동 분석 결과를 귀농·귀촌 통계와 연계지어 살펴보면, 귀농·귀촌은 향촌이도 인구 이동 현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며, 농촌의 인구감소 추세를 완화해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귀농·귀촌은 농업인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노동력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작목에서는 지역 농업의 후계자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그들은 지역농업의 새로운 리더이자 변화를 이끌어 갈 세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귀농·귀촌자에 의한 농지수요는 농지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원격지로의 귀농·귀촌 현상이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귀농·귀촌은 농촌사회를 혼주화된 열린 사회로 바꾸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 한정되지만 귀농·귀촌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 지역사회에서의 귀농·귀촌자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지역의 여론 형성과 지역 정치에서 귀농·귀촌자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귀농·귀촌인의 농촌 마을 유입은 정적이고 폐쇄적인 농촌마을 공동체의 변화를 촉진한다. 아울러 귀농·귀촌자들이 마을이장을 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인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귀농·귀촌자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귀농·귀촌자들이 마을 주민에 비해 젊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고령화된 마을 주민들이 귀농·귀촌자들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에 즈음하여 귀농·귀촌 현상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수요측면과 공급 측면(농촌의 수용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수요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이 귀농·귀촌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농촌의 수용력은 농지 가격 상승과 농업 전망을 연관 지어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의 거시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귀농·귀촌 수요는 증가하겠지만 농촌 사정으로 인한 귀농·귀촌 비용의 증가와 농업의 장래 불확실성은 귀농·귀촌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귀농·귀촌의 정책 기조를 청장년층 귀농·귀촌자가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과, 50대 중반 이후 은퇴 귀농·귀촌자가 적은 비용으로 귀농·귀촌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서 청장년 귀농·귀촌자 지원 정책 내실화와 귀농·귀촌인을 위한 거주 정책 개발, 지자체의 귀농·귀촌 지원 내실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Factors for City People's Return to Rural Areas and its Impacts on Korean Rural Society and Economy

Background of Research

The number of Korean urban people who returned to rural areas increased 37 times from 880 households in 2001 to 32,424 households in 2013. The phenomenon of urban-to-rural migration is not only closely related with the agriculture sector and rural areas but also with changes in national social trends. Nevertheless, previous studies on the phenomenon have considered it as individuals' behavioral features. Few studies have examined it in connection with the society's changes.

This research aims at macroscopically identifying factors for urban people's return to rural areas and its effects on the rural society and economy in relation to Korea's social changes and predicting the direction of its future development.

The study drew research tasks and its analytic frame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examined the current state of urban-to-rural migration, its factors, and its impacts on the rural society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surveys, and in-depth investigations.

Research Results

As a frame that explains factors of the return to rural regions, we set structural factors, urban areas' push factors, rural areas' pull factors, policy factors, and factors of individual preference responding to these forementioned factors.

When the number of city people who migrated to rural areas was compared to the economic growth rate and the unemployment rate as structural factors, the figure wa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economic growth rate.

The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return to rural areas is closely related to baby boomers getting into retirement age. Young people's movement to rural regions is considered to reflect eco-generation's population structure and their behavioral preference towards life.

According to this study's analysis, the phenomenon of urban-to-rural migration is affected more by rural areas' pull factors than by urban areas' push factors. Policy factors influence the decision concerning where-to-return rather than whether-to-return.

We examined the phenomenon's impacts on the rural society and economy in the following aspects: changes in population, the regional agriculture sector, impacts on local economy and the community. The return migration to rural areas seems to mitigate rural areas' decreasing population trend.

Urban-to-rural migration pulls down the average age of national farming population, and people who move to rural areas have potential to become new leaders of local agriculture, ultimately leading to regional advancement.

These people's demand for agricultural land can be interpreted to cause increases in farmland prices. It is a factor that leads urban people's return to remote regions with relatively low land prices.

In conclusion, we looked at the development of the phenomenon of the return migration to rural areas on the demand side and the supply side (rural areas' acceptivity). Given Korean society's current circumstances, it is more probable that the demand for urban-to-rural migration would increase. However, a rise in the cost of rural migration due to recent trends in rural areas (including increasing urban-to-rural migration) and uncertainty about the agriculture sector's future can become suppressing factors for urbanites' return to rural areas.

Researchers: Park Si-hyun, Choi Yong-woog
Research Period: 2014. 1. ~ 2014. 10.
E-mail Address: shpark@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4
3. 연구 범위 및 방법 ····· 7
4. 연구 보고서 구성 및 추진 체계 ····· 11

제2장 관련 이론 및 관점 정리

1. 관련 이론 검토 ····· 13
2. 관점 정리 ····· 26

제3장 귀농·귀촌과 농촌 인구 변화

1. 귀농·귀촌 통계 분석 ····· 33
2. 도시 농촌 인구이동 분석 ····· 44
3. 귀농·귀촌과 인구이동 분석 종합 ····· 53

제4장 귀농·귀촌 실태 조사

1. 조사 개요 ····· 57
2. 조사 결과 ····· 59
3. 귀농·귀촌 실태 종합 ····· 77

제5장 귀농·귀촌 요인과 영향

1. 귀농·귀촌 요인 ····· 85
2. 귀농·귀촌이 농촌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 94

제6장 결론 및 정책 방향

1. 결론 ····· 109
2. 정책 방향 ····· 114

부록 1: 귀농·귀촌 요인 관련 선행조사 결과 ····· 121
부록 2: 귀농·귀촌자 및 이장 설문조사지 ····· 124
참고 문헌 ····· 137

표 차례

제2장

표 2- 1. Hosszu의 도시 농촌 인구이동 요인 ····· 21
표 2- 2. 귀농인의 사회·경제 활동 유형과 특징 ····· 25
표 2- 3. 귀농·귀촌 요인과 세부요소 ····· 31

제3장

표 3- 1. 연도별 귀농·귀촌가구 수 ····· 34
표 3- 2. 시도별 귀농가구 추이 ····· 35
표 3- 3. 시도별 귀촌가구 비교 ····· 36
표 3- 4. 귀농 전 거주 지역별 귀농가구 수 ····· 37
표 3- 5. 출발지 및 도착지별 귀농가구(2013년) ····· 38
표 3- 6. 귀촌 전 거주 지역별 귀촌 지역(2013년) ····· 39
표 3- 7. 연령별 귀농가구 ····· 40
표 3- 8. 연령별 귀촌가구 ····· 41
표 3- 9. 귀농·귀촌가구가 많은 상위 20개 시군(2013년) ····· 42
표 3-10. 동부와 읍면부의 지역 구분 ····· 45
표 3-11. 연도별 향촌·향도 인구이동 추이 ····· 46
표 3-12. 지역구분별 향촌·향도 인구이동 추이 ····· 47
표 3-13. 동부와 군 면부 간 인구이동 ····· 48
표 3-14. 연령별 동부와 군 면부 간 인구이동 ····· 49
표 3-15. 향촌인구(동부->읍면부)가 많은 상위 15개 시군(연도별) ·· 50
표 3-16. 수도권/광역시 동부에서 기타 시군 읍면부(수도권, 광역시 주변 제외)로 향촌인구가 많은 상위 15개 시군(연도별) · 51
표 3-17. 수도권/광역시 동부에서 군 지역 면부로 인구이동이 많은 상위 15개 시군(수도권, 광역시 주변 군 제외)(연도별) ·· 52
표 3-18. 지역별 순이동인구(전입-전출) ····· 54

표 3-19. 귀농·귀촌가구가 많은 상위 15개 시군(2013년, 경기 제외) 순인구이동 및 인구증감(주민등록 기준) ····· 55
표 3-20. 귀농·귀촌가구가 많은 상위 15개 시군(2013년, 경기/충북/강원 제외) 순인구이동 및 인구증감(주민등록 기준) ····· 56

제4장

표 4- 1. 설문조사 지역의 특징 ····· 58
표 4- 2. 귀농·귀촌자 설문조사 내용 ····· 59
표 4- 3. 설문조사 응답자 일반 특성 ····· 60
표 4- 4. 귀농·귀촌 실행 동기(지역별) ····· 61
표 4- 5. 귀농·귀촌 실행 동기(연령별) ····· 62
표 4- 6. 도시 압출요인(연령별) ····· 63
표 4- 7. 귀농·귀촌지 연고 여부(지역별) ····· 64
표 4- 8. 귀농·귀촌지 연고 여부(연령별) ····· 64
표 4- 9. 귀농·귀촌지 결정 요인(지역별) ····· 65
표 4-10. 귀농·귀촌지 결정 요인(귀농·귀촌인 구분별) ····· 66
표 4-11. 귀농·귀촌 초기 비용 ····· 67
표 4-12. 귀농·귀촌자의 경제 활동 및 소득 ····· 68
표 4-13. 지역별 영농규모 및 영농소득 ····· 69
표 4-14. 영농 규모 확대 의사(지역별) ····· 69
표 4-15. 영농 규모 확대 의사(연령별) ····· 70
표 4-16. 영농 규모 확대 의사(귀농·귀촌 연차별) ····· 70
표 4-17. 영농 규모 확대 의사(영농규모 및 전업/겸업별) ····· 71
표 4-18. 귀농·귀촌자의 사회활동 참여도(지역별) ····· 72
표 4-19. 귀농·귀촌자의 사회활동 참여도(연령별) ····· 73
표 4-20. 주민과의 관계(지역별) ····· 73
표 4-21. 생활하면서 힘든 부분(연령별) ····· 74
표 4-22. 애로 및 건의 사항 ····· 75

표 4-23. 현 거주지의 귀농·귀촌 인구 전망(지역별) ····· 76
표 4-24. 사례 지역의 연령별 귀농·귀촌 현황 ····· 78
표 4-25. 귀농 농가와 전체 농가의 농업환경 비교 ····· 79
표 4-26. 귀농·귀촌자의 농업 외 경제 활동(지역조사) ····· 80
표 4-27. 귀농·귀촌 4가구 수입 지출 비교(1년 기준) ····· 81

제5장

표 5- 1. 귀농·귀촌자가구 수와 베이비부머의 취업자 감소 ····· 87
표 5- 2. 베이비부머의 특징과 귀농·귀촌 ····· 88
표 5- 3. 에코세대의 특징과 귀농·귀촌 ····· 89
표 5- 4. 고창군 귀농·귀촌가구와 전체 가구 비교(2013년) ····· 95
표 5- 5. 상주시 지역별 귀농·귀촌인 특징(2012～2013년) ····· 97
표 5- 6.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 모임 ····· 99
표 5- 7. 귀농·귀촌자 종사 분야(서천군) ····· 100
표 5- 8. 귀농·귀촌 당시와 현재의 농지 가격 비교 ····· 100
표 5- 9. 인구 통계에 기초한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 103
표 5-10. 마을 이장의 귀농·귀촌인에 대한 인식 ····· 107

제6장

표 6- 1. 베이비부머 취업자 감소 전망 ····· 113
표 6- 2. 귀농·귀촌 정책 현황 ····· 115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 1. 연구추진체계 ····· 12

제2장

그림 2- 1. (농촌-도시) 인구이동 요인 ····· 15
그림 2- 2. 귀농·귀촌 요인 구조도 ····· 30

제5장

그림 5- 1. 귀농·귀촌자 수와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 ····· 86

서 론

제 1 장

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1.1. 귀농·귀촌인 증가와 사회적 관심 고조

우리나라의 귀농·귀촌 가구는 2001년 880가구에서 2013년 32,424가구로 37배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귀농·귀촌이 사회적인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귀농·귀촌 관련 뉴스가 빈번하게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TV도 귀농했다'라는 표현처럼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관한 프로그램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귀농·귀촌 관련 행사에 많은 도시민들이 방문한다.

귀농·귀촌 교육을 담당하는 귀농귀촌종합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귀농·귀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2012년 28,581명에서 2013년 32,165명으로 13%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 대상도 직장인, 학생, 주부, 제대 군인, 출소예정자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귀농·귀촌 교육 수강생 가운데 경제적 기반과 전문성을 갖춘 30-40대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1.1.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귀농 지원을 위한 정책 수행

2009년 구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이 수립된 이래 중앙정부 차원에서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귀농·귀촌 정보제공 및 교육,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재정 및 세제 지원 확대, 예비 귀농·귀촌인 농어촌 체험 지원 등이다.

귀농·귀촌 시책은 지자체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구감소로 고민하는 대부분의 농촌 지자체는 귀농·귀촌 시책을 인구 증대와 지역활성화 전략의 중심에 세우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농촌 지자체가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귀농·귀촌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하거나 혹은 독자적으로 농지구입비 지원, 귀농·귀촌 교육, 농기계 임대, 농지 및 주택정보 제공, 주택수리 및 신축지원, 빈집 임대, 귀농·귀촌 사무소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1.3. 최근 귀농·귀촌 현상에 대한 거시적 측면의 분석 필요

최근 귀농·귀촌 가구 수는 2010년 4,067가구에서 2011년 10,503가구로, 다시 2012년 27,008가구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2.6배 증가하였다. 2011년부터 귀농·귀촌이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였지만 연속 두 해에 걸쳐 연간 2.6배 증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의 귀농·귀촌 붐은 농업·농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 움직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의 귀농·귀촌 현상을 이해하고 향후의 방향성을 가늠해 보는 것은 귀농·귀촌 정책수립에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농촌사회 전체의 변화 모습을 예측해 보는 데도 매우 필요한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귀농·귀촌 현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이슈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귀농·귀촌 현상을 국가 전체의 인구 및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것의 지속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동시에 귀농·귀촌 현상이 농촌 사회

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한다.

1.1.4. 귀농·귀촌 관련 선행 연구 다양

귀농·귀촌이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한 이래 귀농·귀촌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귀농·귀촌자 개개인(혹은 가족)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귀농·귀촌 준비에서 정착에 이르는 과정까지 개인들이 보여주는 행태와 그것으로부터 유추되는 귀농·귀촌 유형, 귀농·귀촌자와 지역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 모색이 이루어졌다. 일종의 미시적 관점의 연구라 할 수 있다.

귀농·귀촌 현상을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와 관련지어 파악하거나 귀농·귀촌으로 인해 농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망하고자 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특히 2012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귀농·귀촌 현상을 세대별 특성이나 거시적 경제 현상과 관련지어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 시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귀농·귀촌자 개개인의 행태적 관점이 아닌 귀농·귀촌 현상이라는 거시적 관점에 기초하여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귀농·귀촌 요인을 도시민의 농촌 지향 움직임과 인구 구조, 기타 거시적인 사회·경제 변화 양상과 관련지어 규명하고 지속가능성을 타진한다.

귀농·귀촌이 농촌에 미치는 영향을 농촌의 인구 변화, 지역농업,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향후 귀농·귀촌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2. 선행연구 검토

귀농·귀촌처럼 단기간에 많은 연구가 수행된 분야도 많지 않다. 대부분의 연구는 귀농·귀촌의 실태 파악과 정책 제안을 포함하면서 귀농·귀촌의 동기 및 유형, 정착 및 적응 과정, 정책 평가 등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 연구와 관련이 깊은 귀농·귀촌 현상의 이론적인 배경, 귀농·귀촌의 요인, 귀농·귀촌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나누어 살펴본다.

2.1. 귀농·귀촌 관련 이론

귀농·귀촌은 인구이동 현상으로서 귀농·귀촌 관련 논의는 인구이동이론과 관련지어 설명될 수 있다. 서구에서는 역도시화(counterurbanization) 혹은 농촌인구회귀(rural population turnaround)라는 개념과 그 요인 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의 귀농·귀촌을 분석적으로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귀농·귀촌관련 연구에서 인구이동이론과 역도시화 현상 등과 같은 관련 개념을 연계지어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성주인(2012), 김정섭(2012) 등이 귀농·귀촌현상을 동부에서 읍면부로의 인구이동이 반대의 경우보다 많은 향촌이도 현상과 연관지어 분석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국내 연구에서 귀농·귀촌을 정의하고 있다. 귀농·귀촌 정의는 크게 직업 중심과 거주지 중심으로 나눌 수 있다. 직업 중심 개념으로, 강대구(2006)는 귀농자를 '농촌 출신으로 다른 직업을 버리고 농촌에서 농업을 직업으로 종사하는 U-turn 자'(강대구 2006)로 정의하고 있다. 거주지 중심의 개념으로는, 귀농자란 '농촌 의존형이면서 농촌 환경이 유지된 거주지역의 일상생활권 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권역 내에서 주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상시 거주자'라고 정의하고 있다(서만용·구자인 2005; 김철규 외 2011). 유정규(2011)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광의의 귀촌

에 귀농을 포함하고 있는데, 도시생활을 중단하고 농촌 지역으로 들어와 사는 것을 광의의 귀촌이라 하며, 이후 농업에 종사하느냐 여부에 따라 귀농과 협의의 귀촌으로 구분하고 있다.

귀농·귀촌 개념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귀농·귀촌 현상과 용어의 적절성에 관한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논의에 기초하기보다는 귀농·귀촌의 구분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지, 송인하(2013)는 서구의 귀농(back-to-the land) 개념을 검토한 후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생태가치 귀농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경제가치 귀농과 구분하고 있다.

2.2. 귀농 · 귀촌요인

국내에서 행해진 대부분의 귀농·귀촌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귀농·귀촌요인을 파악하고 있다.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초기에 연구를 수행한 이정관(1998)은 보령/당진 귀농자 163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귀농·귀촌요인을 은퇴 후 생활 위해(30.1%), 도시에서의 낮은 소득 및 도시생활 염증(25.2%), 영농승계(17.8%), 사업실패(12.3%), 전원생활(6.1%), 노후대비(5.5%), 건강관리(1.8%), 기타(1.2%)로 구분하고 있다. 강대구(2006)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전국 귀농인 480명(375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귀농 요인으로 경제적 이유(29.0%), 인간다운 삶 추구(18.7%), 농촌생활이 좋아서(16.8%),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13.1%), 은퇴 후 생활 위해(12.5%), 자신가족건강(5.9%), 기타(4.0%) 등의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후에 수행된 김철규 외(2011), 손상락(2012) 이정화·김백수(2012), 성주인·박문호(2013), 홍성권(2013), 김성학·서정원(2014)의 연구에서도 설문조사를 통해 비슷한 형태로 귀농·귀촌요인을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홍성권(2013)은 괴산군 귀농·귀촌인 1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귀농·귀촌요인을 농촌생활이 좋아서(38.9%), 도시생활 불편(12.1%), 추구하는 가치를 좇아(12.1%), 은퇴 후 여가생활(9.3%), 도시보다 적은 지출

(6.2%), 자신/가족건강(5.6%), 기타(15.8%)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귀농·귀촌 동기를 겉으로 드러난 개인의 의사결정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귀농·귀촌 현상을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이동 현상으로 간주하여 그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을 체계화하고 이를 개인의 의사결정 동기와 관련지어 파악함으로써 귀농·귀촌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2.3. 귀농·귀촌의 사회경제적 영향

귀농·귀촌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박문호 외(2012)는 귀농·귀촌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농촌 인구 유지와 새로운 인적자원 공급을 제시하고 있다. 김정섭(2014)은 귀농인 면접 조사를 수행한 선행 연구 8편을 분석하여 귀농인의 사회·경제 활동을 8개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김경덕 외(2012)의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에 따른 사회적 편익(농촌과 도시 각각에 대한 편익)과 비용(농촌과 도시 각각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였다.

이상의 연구 등은 귀농·귀촌이 농촌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의 범위로 하고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귀농·귀촌이 농촌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2.4. 선행 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국내의 선행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의 현상 설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귀농·귀촌을 도시민의 농촌이주 현상으로 파악하며 이와 관련된 이론적인 분석틀이나 외국의 사례 및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현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예를 들어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귀농·귀촌

동기를 개인의 의사결정과 관련지어 파악하고자 한다. 서구의 문헌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론적인 분석틀에 기초하여 귀농·귀촌 요인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인구이동, 역도시화(counter-urbanization), 땅으로 돌아가기(back-to-the-land) 등의 이론적 개념에 기초한 분석틀 속에서 귀농·귀촌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고 귀농·귀촌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귀농·귀촌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자와 지역주민 간의 관계 및 영향을 지역 사례 연구를 통해 미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귀농·귀촌이 한국의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에서 귀농·귀촌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의 방향성을 진단해 보고자 하는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의 요인 분석 결과와 향후 우리 사회의 변화 요인을 연계지어 귀농·귀촌의 전개 방향을 진단해 본다. 이 점이 기존 선행 연구와 다른 점이다.

3. 연구 범위 및 방법

3.1. 연구 범위

이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귀농과 귀촌을 일부러 구분하지 않고 귀농·귀촌이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표현한다. 개념적으로 귀농과 귀촌은 구분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양자의 구분이 모호하거나 구분의 실익이 없다.

귀농·귀촌 연구 관련 이슈는 크게 현상 분석과 정책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주요 초점은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귀농·귀촌이 발생하는 요인과 귀농·귀촌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둔다. 일종의 현상 분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현행 정책 가운데 일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나 정책 방향이 수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 부분에 별도로 언급한다.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국가 전체이지만 귀농·귀촌 현상이 발생하는 곳이 농촌이고, 전국의 농촌이 지역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 점에 비추어 분석의 주요 대상은 시군 단위 행정구역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시간적 범위를 특정하지 않지만 2012년 이후의 귀농·귀촌 현상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2012년 이후 귀농·귀촌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이에 대한 요인 분석이나 그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2012년부터 통계청에서 귀농·귀촌 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하여 보다 풍부한 실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통계분석, 설문조사, 심층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3.2.1.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선행연구,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단체의 귀농·귀촌 관련 움직임, 노후 대책 등과 관련한 사회적 움직임, 귀농·귀촌 관련 매스컴의 보도 자료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귀농·귀촌과 관련해서는 많은 선행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귀농·귀촌의 요인과 그것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귀농·귀촌과 관련한 이론적인 논의와 관련한 국내외 선행 연구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지자체나 지역사회단체의 귀농·귀촌 관련 동태를 살펴본 이유는 전국 차원의 통계 분석에서 드러나지 않은 귀농·귀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지자체나 민간단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귀농·귀촌의 정성적인 특징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3.2.2.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인구 통계, 귀농·귀촌 현황 통계, 귀농·귀촌 교육 자료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인구 통계 분석으로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국내의 읍면동 인구이동 통계 원자료(약 100만 개)에 기초하여 과거 5년간(2007-2013년) 동부와 읍면부 간의 인구 이동 특성을 파악한다. 이는 동부와 읍면부를 유형 분류하여 유형별 인구 이동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귀농·귀촌 현상과 연계하여 해석하고자 함이다. 인구 이동 통계 분석 결과는 귀농·귀촌 통계자료 분석과 연계하여 귀농·귀촌이 농촌의 인구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고자 함이다.

동부(도시)와 읍면부(농촌)를 7개의 지역으로 분류하여 지역별 인구이동 특성을 살펴본 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다. 귀농·귀촌 현상과는 별도로 그 자체만으로 향후 농촌의 인구 변화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하였다.

귀농·귀촌인 통계 자료는 통계청에서 작성한 2012년, 2013년 통계 자료에 기초하여 지역별, 연령별, 귀농·귀촌별 현상을 정리한다.

통계청의 공식통계 외에도 지역에서 작성한 귀농·귀촌 통계 및 교육 통계 등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국 모든 지역의 귀농·귀촌 통계자료의 입수가 곤란하여 이 연구에서는 일부 지자체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3.2.3.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지역조사와 온라인조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지역조사의 경우 귀농·귀촌자 조사와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 이장 조사의 2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는 통계분석 등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귀농·귀촌 요인과 그것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지역조사의 대상은 5개의 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역별로 20명 내외의 귀농·귀촌자와 5명 내외의 이장을 대상으로 한다. 총 94여 명의 귀농·귀촌자와 13명의 이장이 설문에 응하였다. 5개의 지역은 귀농·귀촌이 많은 지역 가운데 특징적인 귀농·귀촌 시책을 시행하거나 기타 지역적 특성이 비교적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충남 서천, 전북 고창·순창, 전남 강진, 경북 상주이다.

지역조사는 각 지역별로 조직된 민간 차원의 귀농·귀촌단체(귀농·귀촌협의회, 귀농·귀촌인연합회, 귀농·귀촌인지원센터 등)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지역의 귀농·귀촌자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어 비교적 객관적인 샘플 추출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 조사와 별도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조사는 지역조사가 가지는 한계를 해소하고 일반적인 특성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온라인 조사에는 전국 172명의 귀농·귀촌자들이 응답하였다.

3.2.4. 심층조사

귀농·귀촌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삶과 관련된 현상이다. 그 요인이나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계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될 수 없는 개인적인 요인과, 귀농·귀촌 지역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다. 인터뷰 대상은 앞의 설문 조사와 같은 지역의 귀농·귀촌 담당공무원, 민간단체 관련자, 귀농·귀촌자이다. 심층 인터뷰는 방문과 전화 조사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귀농·귀촌 전문가,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경험자, 기타 선행연구자를 대상으로 정책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다.

4. 연구 보고서 구성 및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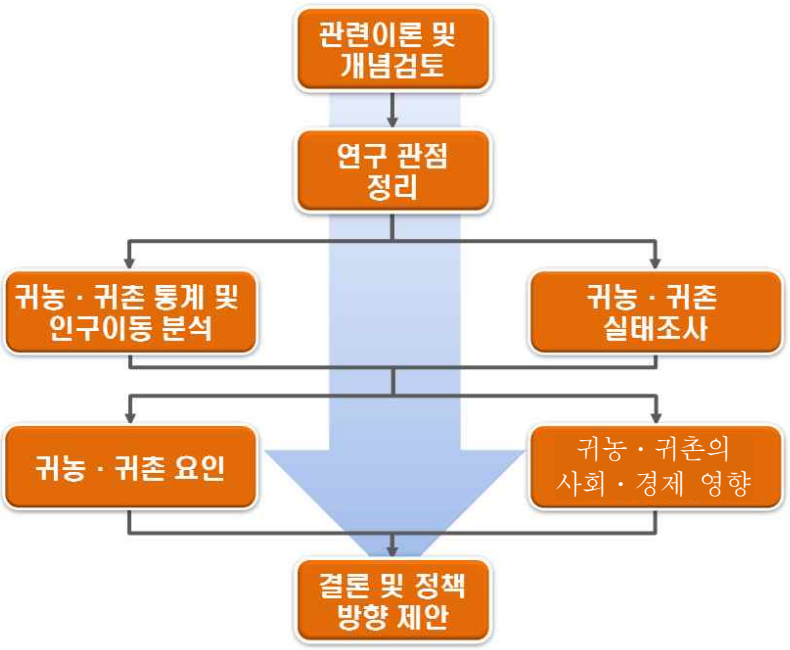
연구 보고서는 크게 6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서론에서는 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 연구 검토, 연구 범위, 연구 방법을 기술한다. 제2장에서는 이 연구의 이론 부분과 관점을 정리한다. 해외에서 이뤄진 도시민의 농촌 이주 현상과 관련된 개념을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실태파악과 귀농·귀촌 요인분석 및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관점을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귀농·귀촌 통계와 인구 이동자료를 바탕으로 귀농·귀촌과 농촌의 인구변화를 살펴본다. 제4장은 5개 시군 지역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 그리고 심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귀농·귀촌의 실태를 보완한다. 제3장과 제4장을 통해서 귀농·귀촌의 현상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은 이 연구의 핵심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농·귀촌의 요인과 그것이 농촌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5장은 이 연구가 선행 연구와 차별되는 부분으로, 귀농·귀촌 요인을 국가 전체의 사회경제적인 현상과 연관지어 파악한다. 또한 귀농·귀촌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조망한다.

제6장은 결론 부분으로 귀농·귀촌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되짚어 보고 지속가능성에 대해 전망해 본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귀농·귀촌 정책에서 수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제시한다.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관련이론 및
개념검토
연구 관점
정리
귀농 · 귀촌 통계 및
인구이동 분석
귀농 · 귀촌
실태조사
귀농 · 귀촌 요인
귀농 · 귀촌의
사회 · 경제 영향
결론 및 정책
방향 제안

제2장 관련 이론 및 관점 정리

1. 관련 이론 검토

1.1. 인구이동

1.1.1. 인구이동 법칙

19세기 영국의 학자 라벤스타인(Ravenstein 1885)은 인구이동과 관련한 유명한 법칙을 제시하고 있다. 라벤스타인에 의하면 ① 인구이동은 근거리 이동이 많다. ② 대부분의 인구이동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다. ③ 인구이동에 의해 도시가 성장하고 이후에 자연 증가가 이루어진다. ④ 인구이동은 산업, 상업, 유통을 촉진한다. ⑤ 한쪽으로의 인구이동은 반대쪽으로의 인구이동을 동반한다. ⑥ 여자가 남자보다 이동성이 낮다. ⑦ 인구이동의 주요 요인은 경제이다(King 2012).

라벤스타인의 인구이동 법칙 이후 많은 학자들이 인구이동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라벤스타인의 법칙 ①은 두 지역 간의 거리에 비례하여 인구이동의 양이 결정된다는 중력모형으로 발전되었다. 법칙 ②와 ③은 향도이촌 인구이동과 도시화 이론으로 발전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인구이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라벤스타인의 법칙 ⑤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역 인구이동 이론으로 발전하였는데 이는 후술하는 역도시화와 관련되어 있다.

1.1.2. 인구이동 요인

라벤스타인 이후 대표적인 인구이동 이론 중 하나가 신고전학파의 인구이동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개인의 선택이 자유롭고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된다면 사람들은 가장 높은 임금이 제공되는 곳으로 이동한다(Lewis 1954). 해리스와 토다로는 루이스의 이론에서 다뤄진 '임금'을 실질 임금만이 아닌 고용 기회까지를 포함하는 기대 임금으로 수정하여 유명한 해리스-토다로 모형(Harris-Todaro model)을 완성하였다(Harris and Todaro 1970).

신고전학파의 인구이동 이론은 같은 조건에서 왜 어떤 사람은 이동하고 어떤 사람을 이동하지 않는 지를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인구 이동은 기본적으로 도착지와 출발지의 공간적 특성과 그것에 반응하는 개인의 속성으로 설명된다(Haas 2009).

Lee(1966)는 19세기 Ravenstein이 제기한 인구이동 법칙을 수정한 인구이동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인구이동은 도착지의 요인(pulling factors)과 출발지의 요인(pushing factors), 거리, 제도 등과 같은 두 지점 사이의 장애요인(intervening obstacles), 그것들에 반응하는 개인적인 요인(personal factors)에 의해 결정된다(Lee 1966).

Lee는 명시적으로 압출(push), 흡입(pul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의 이론은 "push-pull" 모형으로 발전되었다(Passaris 1989). 이 이론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 요인을 설명하는데 유용하지만 동시에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을 설명하는데도 매우 유용하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 시 압출요인으로는 농촌의 과잉노동력, 자원의 고갈, 홍수 등과 같은 자연적 기상조건, 농업의 기계화 등이 작용한다. 반면 도시의 흡입요인은 고용기회, 교육기회, 다양한 경제활동기회, 전통적 규범으로부터의 자유, 풍부한 정보, 권력에의 접근성 양호 등이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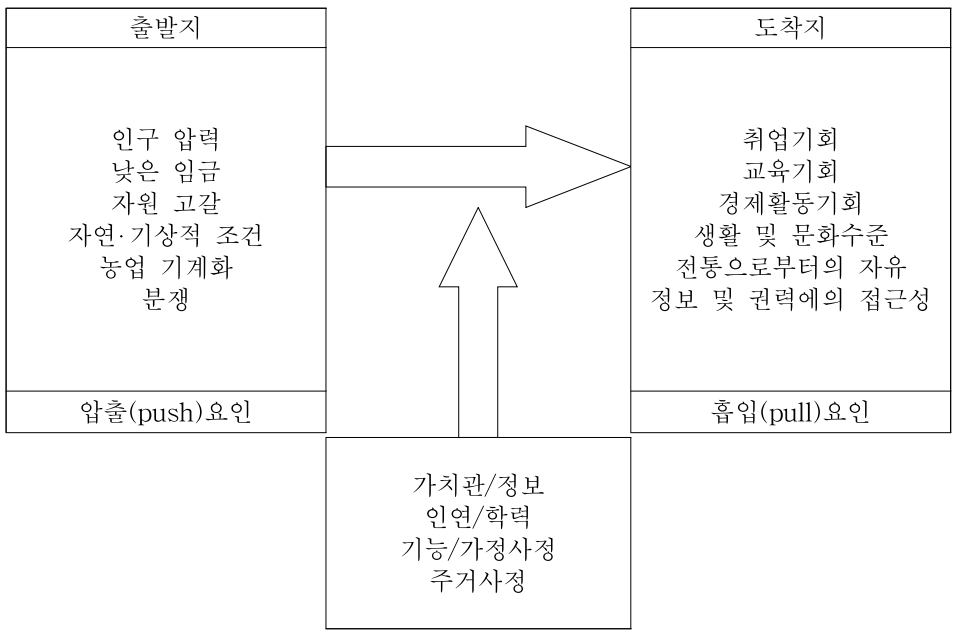
압출요인과 흡입요인은 다시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환경적 측면으로 나뉜다. 전통적으로 인구이동은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주류를 형성해 왔다. 즉, 사람들은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고용조건을 찾아 이동한다는 것이다.

인구이동에는 압출요인과 흡입요인이 작용하지만 인구이동의 결정에는 인구 이동 행위 주체인 개인의 특성이 반영된다. 인구이동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요인으로 개인의 삶의 가치관, 이동과 관련한 정보의 획득, 고용 및 주거에 관한 특별한 인연, 기능, 학력, 가정 사정, 주택 사정 등이 작용한다.

이상의 요인을 도식화하면 그림과 같다.

그림 2-1. (농촌-도시) 인구이동 요인



1.2. 역인구이동과 도시민의 농촌지향

전통적인 인구이동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이동이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비록 그 규모면에서는 크지 않지만 산업혁명 이후 일관되게 나타난 선진국의 인구이동 현상과는 다른 방향의 인구이동 현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도시의 입장에서는 이를 역도시화(counter-urbanization)로 표현하고, 농촌의 입장에서는 땅으로 돌아가기(back-to-the-land)로 표현하고 있다.

1.2.1. 역도시화

귀농·귀촌과 관련한 이론적인 개념으로 역도시화(counterurbanization)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1970년대 미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대도시권으로부터 주변 지역으로의 인구이동 현상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이라는 전통적인 인구이동현상과는 다른 현상으로 많은 학술적인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역도시화(counterurbanization) 혹은 농촌인구회귀(rural population turnaround)라 일컬어진 바 있는 관련 논의는 Berry(1976)에 의해 촉발되었다. Berry는 역도시화를 도시화의 반대 개념으로서 '인구가 더 많이 밀집된 지역에서 인구가 덜 밀집된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으로 단순하게 정의한다. 원래 Berry의 역도시화 개념은 농촌의 관점이 아닌 도시의 입장에서 도시화의 반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198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선진국의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이동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1].

---

[1]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서유럽에서 역도시화가 진행되었으나 1980년대에는 역도시화 속도가 점차 줄었다(Hosszu 2009). 하지만 역도시화 현상은 2000년대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영국은 2004년까지 대도시에서 매해 평균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출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대도시의 인구 유출과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의 폭이 감소하지만 절대인구수에서는 농촌지역의 인구는 도시지역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 도시 인구가 농촌으로 이

Champion(1989)은 역도시화는 기존 대도시권으로부터 단순하게 인구가 빠져나오는 현상이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농촌적 생활양식으로의 변화를 포함하는 개념이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또한 Enyedi(1988)는 '보내는 지역' 즉 도시 지역으로부터 기인하는 동기는 '역도시화' 요인으로 특징지을 수 있지만, '받는 지역' 즉 수용하는 농촌 지역으로부터 기인하는 동기는 '재농촌화' 요인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함으로써 역도시화 현상이 재농촌화 현상과 연계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Dahms and McComb (1999)은 역도시화의 요인을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더 좋은 삶의 조건 요인으로 살펴보고 있다. 즉, 지역간 노동시장 격차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노동 시장의 영향은 역도시화 요인에 덜 중요하게 작용하는 대신에 농촌의 환경가치와 사회적인 조건, 환경에 대한 가치 재평가, 여가 등이 역도시화에 영향을 미친다. Laoire(2007)에 의하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농촌 관련 직·간접적인 경험을 지니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최종 목적지를 정함에 있어 이러한 특정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친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할 때 역도시화는 도시에서의 압출(pushing)요인 및 농촌에서의 유인(pulling)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귀농·귀촌현상을 설명하는 개념 틀로 활용될 수 있다.

도시민의 농촌 이주와 관련해서는 역도시화(counterurbanization)라는 명칭뿐만 아니라, 탈도시화(desurbanization 혹은 disurbanization), 도농 이주(urban-rural migration), 인구 선회(population turnaround), 농촌 재인구화(rural repopulation) 등의 용어가 제시되고 있다.

주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시작된 것은 1975년부터이고 1980년대에 도시나 농촌이나 인구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상태가 10여 년간 지속되다가 1990년대부터 중소 도시가 발달한 레지옹과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인구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다(성주인 외 2012).

1.2.2. 땅으로 돌아가기(back - to - the - land)

땅으로 돌아가기(back-to-the land) 운동은 1960년대와 70년대 중반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이동 현상을 말한다(Halfacree 2007). 그 운동은 단순히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이동이 아니라, 1960년대 주류 사회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정반대되는 가치관이 응집된 문화 현상으로서 자연과 토지에 강하게 연계된 삶의 형태이다(Halfacree 2007). 땅으로 돌아가기(back-to-the land) 운동은 산업문명에 대한 반문명적(counter-cultural)인 성격을 강조한다. 이는 삶의 가치 실현으로서의 공동생활 추구, 토지경작, 자족적인(self-reliance) 삶, 그리고 생태적인 삶 등을 실천하는 특징을 보인다.

땅으로 돌아가기(back-to-the land) 운동은 미국에서 발생하였지만 1970년대 프랑스, 영국에서도 발생함으로써 보다 보편적인 현상으로 주목을 받았다(Halfacree 2007). 하지만 이 운동은 1970년 중반 이후 그 열기가 주춤하다가 2000년대 초에 퍼머컬쳐 운동과 유기 소농 조직의 탄생으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Permaculture Association 2006).

2004년 노르웨이의 트론하임에서 열린 제11차 세계농촌사회학회 대회에서는 '21세기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주제로 워킹그룹을 형성하고 땅으로 돌아가기의 특징, 동기, 농촌에서의 역할 등을 논의하였다(Halfacree 2007). 2000대 이후 땅으로 돌아가기는 반문명적(counter cultural)이고 공동체적(communal) 생활을 추구하려는 1960년대의 이념이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생태가치의 추구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여전히 토지와 자연을 중요한 행동의 동기로 삼고 있다(Halfacree 2007).

땅으로 돌아가기의 주체들은 기존 농부보다 도시와의 연계망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 집단은 그들만의 공동체를 고집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농촌주민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그들의 잠재력을 높이고자 한다. 이들이 농촌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은 반드시 순탄하지만은 않은데 농부로서 인정받기까지 많은 역경을 겪는 경우도 있다(Halfacree 2007). 2000년대 이후 서구에서 발생한 땅으로 돌아가기

(back-to-the land)의 주체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의 그들보다 훨씬 다양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농촌사회에 관여하고 있다(Halfacree 2007).

2000년대 이후 서구의 땅으로 돌아가기(back-to-the land)는 우리의 귀농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송인하(2013)는 서구의 땅으로 돌아가기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태가치 귀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경제가치 귀농'과 구분하고 있다.

1.2.3. 일본의 U, I, J 턴 이주

일본의 U, I, J 턴 이주는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지방으로 이주하는 움직임을 총칭한다. 여기에서 대도시권은 3대 도시권(동경권, 오사카권, 나고야권)을 말하며, 지방은 현청소재지인 중심도시와 주변 농촌을 포함한다. 이는 큰 틀에서는 서구의 역도시화 개념의 일본판이라 할 수 있다.

U턴이라는 용어는 1972년 일본 구 노동성(현 후생노동성)의 노동백서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I턴, J턴이란 용어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기까지 대도시 근로자의 지방 이주 경향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吉川 2010). U턴은 출신지로 다시 돌아가는 형태, J턴은 출신지 부근의 지방으로 이주하는 형태, I턴은 출신지 이외의 지방으로 이주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주자의 개인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U, I, J 턴이라는 용어가 농업·농촌 정책과 연계되어 사용된 것은 1980년 중반 이후이다. 농업·농촌 정책의 외연 확장으로서 도시농촌교류, 정년귀농이라는 용어와 함께 농업·농촌 정책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987년 농림수산성은 U턴 청년을 포함한 농업 외 분야로부터의 신규 진입 청년 등을 지역농업 후계자로 포함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영향을 받아 1991년부터 회사 등을 그만두고 농업에 진입하는 비농가 출신 젊은 층이 비록 적은 수이지만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 U, I, J 취농 촉진대책사업이 도입되어 농촌과 인연이 없는 도시민(이른바 I턴)의 취농을 촉진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신규 취농, 도농교류, 정년귀농이라는

관점에서 도시민의 농촌이주가 일본 농림수산정책의 주요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吉川 2010).

1.3. 도시 농촌 인구이동 요인

귀농·귀촌은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이동 현상이다. 따라서 귀농·귀촌 요인은 인구이동의 이론 틀 속에서 설명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압출-흡입 모형과 개인의사결정 요인을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이동에 적용할 수 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이동은 도시에서 밀어내는 압출(pushing) 요인, 농촌의 끌어당기는 흡입(pulling) 요인과 이것들에 반응하는 개인(personal)의사결정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들 요인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도시의 압출요인과 농촌의 흡입요인은 학자에 따라 국가에 따라 달리 설명되지만, 공통적으로 도시의 압출요인은 고용기회 감소, 경제활동기회 감소, 도시생활의 피로 등이다. 농촌의 흡입요인은 소득 및 고용 창출 기회, 양질의 교육 기회, 심신의 안정, 농촌의 자연환경 및 생태적 건전성 등이다.

미국의 Brown and Glasgow(2008)는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는 교통혼잡, 인구밀집, 범죄율, 세금, 공해 등과 같은 도시에서의 압출 요인과, 농촌 특성인 느린 생활 패턴, 작은 마을 규모와 분위기, 조용함, 대도시 편의성으로부터의 탈출과 같은 농촌에서의 흡입 요인을 제시하였다.

개인의사결정 요인은 귀농·귀촌 당사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직면하는 문제이다. 도시 및 농촌생활에 대한 가치관, 농촌생활에 대한 정보획득, 직장과 주거에 관한 개인적인 인연, 학력, 직력, 가족 사정, 연령 등이다. 특히 연령은 개인 요인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이를 별도의 요인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Hosszu 2009).

한편 Hosszu(2009)는 역도시화 현상을 바라보는 접근 방법과 그 이주 동기에 따라 구조 요인, 행태 요인, 연령 요인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Hosszu(2009)의 연구는 이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귀농·귀촌 요인을 설

명하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제시한다.

구조 요인은 인구 이동을 함에 있어서 개인의 필요나 희망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사회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경제 상황과 고용이다. 사람들은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경제적인 활동과 고용기회를 찾아 이동한다는 것이다.

행태 요인은 구조 요인과 달리 개인의 선호를 반영한다.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과거에는 경제적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동하였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기에는 개인의 행태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행태 요인으로 농촌의 목가적인 자연경관에 대한 가치관, 농촌에 거주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영향, 동질적인 그룹이 농촌에 모여 살고자 하는 집단 반응 등이 작용한다.

연령 요인은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동이 생애 주기(life cycle)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청장년층과 은퇴계층은 이주의 강도(거리 등), 이주 사유 및 지역이 달라진다. 청장년층은 주거시설, 전원생활, 더 나은 일자리, 삶의 가치관과 도시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피해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많고, 은퇴계층은 건강관련 서비스와 생활편의시설을 추구하여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다.

Hosszu(2009)의 도시 농촌 인구이동 요인은 유럽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정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전체 요인을 설명하는 데에는 매우 유용한 분류라고 판단된다<표 2-1>.

표 2-1. Hosszu의 도시 농촌 인구이동 요인

구조 요인	행태 요인	연령 요인

1.4. 귀농·귀촌의 사회경제적 영향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이동으로 인해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영향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 도시민의 농촌이주가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Von Reichert et al.(2014)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도시민의 농촌이주가 농촌의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장기적으로 농촌지역의 소매, 보건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건축, 수리, 보수 등의 분야에서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이는 다시 지속적인 인구유입을 불러들이게 되면서 농촌 중심지 기능 강화를 가져오게 되어 농촌경제의 다양성을 증가시킨다고 한다(Von Reichert et al. 2014).

이와는 반대로 도시민의 농촌이주는 가용 노동력의 증가를 가져와 농촌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존 농촌 노동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한 연구도 있다(Findlay et al. 2000). 비슷한 맥락으로, 생활편의성이 높으며 유입인구의 규모가 상당한 지역의 경우, 주택 시장에서의 경쟁관계로 인해 이주민들은 지역민들에게 위협요소로 여겨지기도 한다(Shucksmith 1981).

도시민의 농촌이주에 따른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촌 이주자들은 농촌의 인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농촌의 인구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구 구성을 좋게 하고 농촌의 인적 자원을 풍부하게 한다.

농촌이주자들은 농촌 경제에 활기를 가져다준다. 이는 이주자들이 집과 토지 구입을 비롯한 초기 자금 투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또한 인구증가에 따라 지역 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특히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은 농촌의 중심지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이는 다시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농촌이주자들로 인해 농촌지역의 고용기회가 확대 된다.[2] 특히 농촌이주

---

[2] Stockdale, A. et al.(2000)은 스코틀랜드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의 22%가 자영업

자들은 기존 주민에 비해 고급 기술과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인력이 많아 농촌지역에서의 창업활동과 그에 따른 고용 창출에 기여한다.

Bosworth(2008)는 영국 북동부 소규모 사업체 대상 샘플 데이터(1,294개 업체) 분석을 통해 소규모 업체를 창업하는 농촌 전입자 1명 당 추가 고용 효과는 1.9명인데, 이를 바탕으로 농촌 전입자가 창업한 소규모 업체의 고용자 수는 지역 내 전체 고용 대비 약 6.9%에 해당하며 이는 농업 부문 전체 고용 규모를 상당 정도 상당 정도 상회한다. 또한 Bosworth(2010)는 영국 북동부에서는 농촌전입자가 농촌에 위치하는 소규모 사업체(고용인 규모 10명 이하)의 절반 이상을 운영(55.4%)하며, 농촌 전입 사업주의 39%가 지역 내에서 고용을 창출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농촌이주자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면 지역의 인프라 구축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 증대와 주택, 교통, 소매점 인프라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신규 농촌 전입자는 고학력 비율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들은 지역에 혁신 역량 강화와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통해 기존 지역 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Bosworth(2010)는 영국 북동부를 사례로 토박이 사업주가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는 주로 소매업종(31%)이나 건축업종(14.8%)에 속하는 반면, 신규 농촌 전입자는 상당수가 일반서비스업종(숙박, 식당, 관광 등)(28.2%)의 사업을 운영하며 공업이나 사업체/가정 서비스업 등도 신규 농촌 전입인 사업주 비율이 높은 업종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농촌이주자들은 기존 주민과 다른 생활양식 등을 지역사회에 소개함으로써 지역을 보다 열린사회로 변모시키는 데 기여한다. 또한 농촌이주자들은

(self-employed)에 종사하는데 이들은 평균 2.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촌이주 1가구당 0.52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Stockdale & Findlay(2004)는 영국의 농촌이주자는 평균 2.4명의 풀타임 고용을 창출하며, 농촌이주자의 4분의 1은 농촌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함을 보여준다. Mitchell 등(2014)에 의하면, 캐나다 Nova Scotia 지역에서는 도시 출신 농촌 전입자의 사업체가 평균 4명(풀타임 1.9명, 파트타임 2.1명)을 고용하는 반면, 기타 사업체들은 평균 1.5명(풀타임 0.8명, 파트타임 0.7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지역에 가져옴으로써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킨다(von Reichert et al. 2014). 농촌 이주자들과 지역주민과의 통합은 이주민과 지역민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Brown and Glasgow 2008).

농촌이주자가 농촌의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농촌 이주에 의한 가용 노동력의 증가는 농촌 노동시장에서 경쟁을 증가시킴으로써 지역의 노동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Findlay, Short, and Stockdale 2000).[3] 특히 생활이 편리하여 그 결과 유입 인구 규모가 상당한 지역의 경우, 주택 시장에서의 경쟁관계로 인해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4] 이 경우 이주민들은 지역민들에게 위협요소로 여겨지기도 한다(Shucksmith 1981).

국내 선행 연구로 박문호 외(2012)는 귀농·귀촌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농촌의 인구 유지와 새로운 인적자원 공급을 들고 있다. 귀농·귀촌인의 유입은 65세 이상의 농업경영주의 9.8%만이 영농후계자가 있는 상황에서 농업 후계세대의 확보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젊은 귀농·귀촌인의 농촌거주는 농촌의 교육·문화·교통·주택 등 정주여건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킨다. 귀농·귀촌인의 인적역량은 상향식 발전을 위한 내부 동력으로 작용한다(박문호 외 2012).

한편 2006년부터 2013년 사이에 귀농인 면접 조사를 수행한 선행 연구 8편[5]을 분석한 김정섭(2014)은 귀농인의 사회·경제 활동을 8개의 범주로

---

3 이 점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견해도 존재한다. 농촌이주자와 기존 농촌주민과의 일자리 경합 관계는 미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연구에서 농촌주민들은 이주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약 18% 정도로 일자리 경쟁자로 보지 않는 것으로 분석한다(Stockdale, A. et al. 2000).

4 스코틀랜드의 조사에 의하면 농촌이주자들로 인해 집값 상승을 초래된다고 생각하는 기존 농촌주민이 6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tockdale, A. et al. 2000).

5 강대구 외(2006), 진양명숙(2008), 조은정·문정환(2011), 박성정 외(2012), 이정화·김백수(2012), 송인하(2013), 박신규 외(2013), 성지혜(2013).

분류하고 있다<표 2-2>. 김정섭의 분류는 귀농·귀촌인의 사회·경제 활동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농촌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출하고 유형화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표 2-2. 귀농인의 사회·경제 활동 유형과 특징

유형	특징
농업	- 친환경농업 및 직거래의 빈도가 높음 - 농업소득만으로 생활비 마련이 어려움 - 농지, 농기계 등을 확보하기 어려움
농산물 가공 및 농촌 관광	- 노동 특성상 여성 참여가 적합하다는 의견
농업과 무관한 직종에서의 근로	- 주로 여성 배우자가 참여 - 가계 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참여 - 방과 후 학교, 도서관, 요양보호사, 다문화가정 지도사 등과 지역사회 서비스(community service) 분야에서의 유급(有給) 활동과 건설 노동, 상점 점원 등과 같이 전적으로 소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구분
자원봉사	- 문해교육, 도서관, 방범 등 지역사회 서비스 분야의 무급(無給) 활동과 후배 귀농인 상담 및 교육 같은 귀농 관련 분야의 활동으로 구분 - 자원봉사이지만 소액의 인건비를 제공받을 경우 '지역사회 서비스 분야의 소득 활동'과 사실상 구별되지 않음
지역사회 조직 참여	- '귀농·귀촌 협의회' 등 귀농인 단체, 여성 농업인 단체, 각종 동호회 등에 참여
학습	- 귀농 교육, 영농 교육, 농산물 가공 및 농촌관광 분야 창업 교육, 기타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에 참여
문화·여가	- 문화여가 서비스 시설에의 접근이 어려움 - 여성 귀농인에게 중요한 욕구 - 지역사회 단체(예: 여성농업인센터, 동호회) 활동을 통해 욕구 충족
지역공동체 안에서 주민과의 일상적 상호작용	- 일상생활 태도에 대한 문화적 선입견이 작용(예: 친환경농업, 여성 귀농인의 영농 참여 등) - 영농 기술, 농지 임차 및 구매 기회, 농기계, 지원 정책 사업 관련 정보 등을 얻는 중요한 사회 자본(social capital)으로 기능 - 농업·농촌에 대한 선(先) 경험이 있을수록(예: 농촌 출신, U턴 귀농인), 일상적 관계에서 문화적 선입견 작용의 문제를 용이하게 완화하는 경향

2. 관점 정리

2.1. 귀농·귀촌 개념

우리나라의 경우 귀농·귀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IMF 구제 금융 사태로 촉발된 도시에서의 대량실직사태는 도시근로자의 농촌이주 현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귀농·귀촌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귀농·귀촌 현상과 용어의 적절성에 관한 이론적인 논의는 많지 않은 상태에서 2009년 구 농림수산부의 귀농·귀촌 종합대책[6]이 발표된 이후 귀농·귀촌이라는 용어는 행정 문서와 연구 등에서 폭넓게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의 귀농·귀촌개념과 유사한 역도시화, 땅으로 돌아가기, 일본의 U, I, J 턴의 개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역도시화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적인 관점에서 출발한다. 도시 발전단계의 한 과정으로서 도시 중심부로부터 도시 외곽으로의 인구 이동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다. 역도시화의 요인으로서는 농촌의 흡입요인보다는 (중심)도시의 압출요인을 강조한다. 이런 측면에서 역도시화는 우리의 귀농·귀촌과는 그 개념이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현상만으로 볼 때 귀농·귀촌과 역도시화는 비슷한 점이 많다. 제3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나라 귀농·귀촌통계에는 동부에서 읍면부로의 인구이동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을 예로 들면 중심도시인 동부에서 경기도 읍면부로의 인구이동이 귀농·귀촌에 포함되는데 이는 역도시화기 나타내는 인구이동과 같다.

서구의 땅으로 돌아가기(back-to-the-land)는 우리의 귀농과 매우 유사한 개념이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땅으로 돌아가기는 반문명과

---

6 2009년 당시 구 농림수산부가 귀농·귀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귀농인을 통한 농업인력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귀촌인를 통한 농촌지역 활력 증진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생태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귀농·귀촌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U, I, J 턴은 대도시에서 전원생활이 가능한 지방으로의 인구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적으로 우리나라의 귀농·귀촌과 유사한 편이다. 하지만 일본의 U, I, J 턴은 지방 중소도시를 도착지로 포함하고 있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우리의 귀농·귀촌은 도시민의 농촌지향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는 일본의 U, I, J 턴과 개념적으로는 유사하다. 하지만 현상적인 측면에서는 서구의 역도시화에 해당하며 서구의 땅으로 돌아가기(back-to-the-land)를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귀농·귀촌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귀농·귀촌자의 다양한 속성에 기인한다. 통일된 개념으로 귀농·귀촌자 모두를 묶기에는 귀농·귀촌에는 너무 많은 개개인의 삶의 양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귀농·귀촌지의 공간적 특성도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 귀농·귀촌은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적인 요소만을 추려내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형식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귀농·귀촌은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농업을 영위하거나 전원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자로 폭넓게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와 농촌의 정의인데 이는 구분의 편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동부를 도시, 읍면부를 농촌으로 할 수밖에 없다. 또한 농업의 영위와 농촌생활의 향유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농업의 영위를 생계형과 취미형으로 구분할 경우 그 대상자가 달라진다. 또한 많은 귀농·귀촌인은 생계를 위해 농업을 영위하고 싶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아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귀농과 귀촌을 구분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 송인하(2013)가 밝힌 것처럼 귀농과 귀촌을 구분하지 않으며 도시에서 생활을 하던 사람이 농촌으로 이주한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개념이 유용하다.[7]

---

7 귀농과 귀촌을 포괄하여 개념 정의하거나 귀농·귀촌을 구분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대다수의 귀농·귀촌자가 농촌 생활양식과 농촌경관

통계청에서는 통계 작성을 위하여 귀농과 귀촌을 구분하고 있다. 통계청(2012)에 의하면 귀농인은 '통계작성 기준일 현재(매년 11월 1일) 1년 전 주소가 동(洞)지역이고 현주소가 읍·면(邑·面)지역인 자 중에서 농업경영체, 축산업등록명부,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신규등록한 자'[8]로 정의하고 있다. 귀촌인은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단 회사원, 교사 등 별도 직업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통계작성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귀촌인으로 분류된 사람 가운데는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농인으로 분류된 사람 가운데 취미농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귀농과 귀촌을 일부러 구분하지 않고 귀농·귀촌이라 통합하여 표현한다. 다만 통계청에서 발표한 귀농·귀촌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등에 한정하여 귀농과 귀촌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2.2. 귀농·귀촌요인

이 연구에서는 귀농·귀촌 요인을 설명하는 틀로 압출-흡입 모형과 Hosszu(2009)가 밝힌 구조 요인을 결합한다. Hosszu의 구조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제현실과 고용 문제는 도시의 압출요인과 농촌의 흡인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즉,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도시에서의 경제활동기회가 감소하고 반작용으로 농촌에서의 새로운 고용기회를 찾아 귀농하려는 수요가 증가한다. 여기에 도시 및 농촌에 대한 가치관 등 개인의 행태나 정년 등의 연령 요인이 가미되어 실질적인 귀농·귀

을 향유하면서 소규모 영농을 하고 있다는 점, 귀농·귀촌의 동기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설명하기도 한다. 현실에서는 영농이 제1의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귀농인으로 분류되거나, 영농을 제1의 목적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주한 지역에서의 농토 확보 여부가 불투명하여 귀촌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박문호 외 2012).

8 1,000평방미터의 농지(시설하우스의 경우 300평방미터)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자.

촌이 발생한다.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귀농·귀촌 요인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먼저 그림에서 가장 위에 위치한 구조요인이 귀농·귀촌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9] 여기에서 구조요인은 Hosszu(2009)가 말한 요소 외에 인구 구조를 포함한다. 즉, 베이비부머의 대량 은퇴는 연령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구조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구조요인은 귀농·귀촌가구 수 및 향후 전망에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볼 수 있다.

귀농·귀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시의 압출요인과 농촌의 흡입요인이다. 이 요인은 전통적인 인구이동 이론 압출-흡입요인을 역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두 요인은 별도로 작용하지만 구조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점에서 그림의 중간에 위치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즉 정책요인은 귀농·귀촌에 영향을 미친다. Hosszu(2009)는 이를 구조요인의 한 요소로 분류하지만 개인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별도의 요인으로 분류한다.

구조요인과 도시의 압출요인, 농촌의 흡입요인, 정책요인은 외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요인에 반응하는 것은 개인의 행태와 연령별 특징에 따라 달라진다. 인구이동 이론에서 설명한 개인의사결정요인이다. 이들 요인은 그림의 하위 부분에 위치한다.

종합하면 귀농·귀촌은 우리나라의 경제 및 인구 사회 구조 속에서 큰 틀이 결정되고, 여기에 도시의 압출요인과 농촌의 흡입요인, 정책요인이 작용하며, 그것이 개인의 행태와 연령별 특성에 기초하는 개인의사결정요인이 결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섯 가지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2>.

---

9 국내의 많은 선행연구에서 실시한 귀농·귀촌 동기 조사 질문에서 가장 많이 응답한 경제적 이유나 사업실패 요인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요인도 구조 요인이라는 개념 속에서 설명될 수 있다.

그림 2-2. 귀농·귀촌 요인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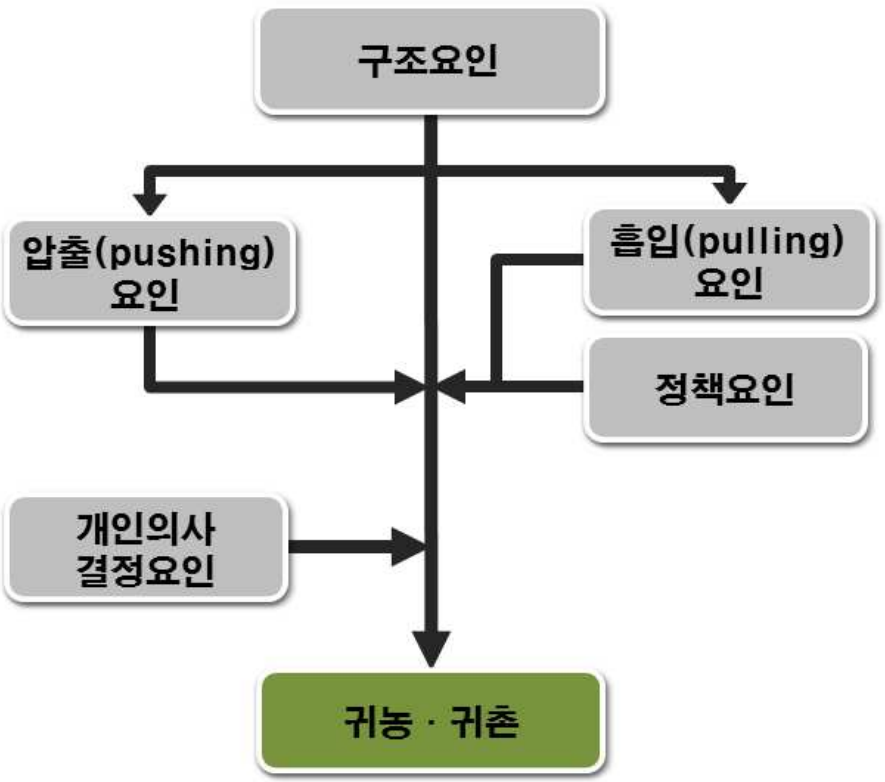


표 2-3. 귀농·귀촌 요인과 세부요소

요 인	세부요소
구조요인	경제성장 둔화, 인구구조 변화, 은퇴시기 및 사회보장 정도, 정주패턴 변화, 교통통신 발달
압출요인	높은 생활비, 긴 통근시간, 과도한 업무, 경쟁적인 일상생활, 은퇴 후의 무료한 삶
흡입요인	안전 먹거리 자가 생산, 생태적인 삶, 농업 관련 사업 기회 증대, 사회적 일자리 기회 증대, 저렴한 생활비, 수려한 풍광
정책요인	정부의 정책, 지자체의 각종 유인 조치
개인의사결정요인	여유로운 생활 선호, 도시생활 스트레스 탈출, 생태적인 삶, 자녀 교육관 변화, 연령, 은퇴

2.3. 귀농·귀촌의 사회경제적 영향

귀농·귀촌이 농촌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이론적으로 확립된 견해는 없는 편이다. 서구의 선행 연구에서는 도시민의 농촌유입이 농촌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를 통해 정리하고 있다. 선행연구 결과 등에서는 도시민의 농촌유입이 농촌 사회경제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도시민의 농촌이주가 농촌의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한다. 농촌 이주자 들은 집과 토지 구입을 비롯한 초기 자금 투자 등을 통해서 농촌경제에 기여한다.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은 농촌의 중심지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이는 다시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농촌 이주자들은 기존 주민에 비해 고급 기술과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인력이 많아 농촌지역에서의 창업활동과 그에 따른 고용 창출에 기여한다. 농촌이주자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면 지역의 인프라 구축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 증대와 주택, 교통, 소매점 인프라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신규 농촌 전

입자는 고학력 비율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들은 지역에 혁신 역량 강화와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통해 기존 지역 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농촌이주자들은 기존 주민과 다른 생활양식 등을 지역사회에 소개함으로써 지역을 보다 열린사회로 변모시키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정리한다. 먼저 귀농·귀촌이 농촌의 사회·경제 현상에 변화를 촉발하는 요인을 추출한다. 변화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귀농·귀촌자의 농촌 유입과 그 들이 지역에서 행하는 활동이다. 지역에서 행하는 활동은 크게 지역농업 활동, 농업 외 경제활동, 사회 활동으로 정리한다. 변화 요인에 의한 결과로서 인구 변화, 지역농업 변화, 지역경제 변화, 지역사회 변화로 나눈다.

제3장 귀농·귀촌과 농촌 인구 변화

1. 귀농·귀촌 통계 분석

1.1. 귀농·귀촌자 수

농식품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귀농·귀촌 가구는 2001년 880가구에서 2011년 10,503가구, 2012년 27,008가구, 2013년 32,424가구(56,267명)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표 3-1>.

특히 귀농·귀촌 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10] 귀농·귀촌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 시작한 2011년부터는 귀농·귀촌가구 수가 1만 가구를 넘었으며 2012년에는 전년도인 2011년도에 비해 2.5배 증가하였다. 2013년에는 2012년에 비해 5,416가구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10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귀농·귀촌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귀촌 종합대책이다. 이 대책에서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교육과 멘토링사업과 귀농인의 집조성사업, 귀농인에 대한 농업창업자금 지원, 주택구입 및 수리비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다(박시현 외 2011).

귀농의 경우 2013년은 2012년에 비해 297가구가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귀촌은 동 기간 5,713가구로 증가하고 있다. 2개 연도의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2013년은 2012년에 비해 귀농 현상이 약간 주춤한 사이에 귀촌은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표 3-1>.[11]

표 3-1. 연도별 귀농·귀촌가구 수

단위: 가구

구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89,514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10,503	27,008	32,424
귀농	-	-	-	-	-	-	-	-	-	-	-	10,075	11,220	10,923
귀촌	-	-	-	-	-	-	-	-	-	-	-	428	15,788	21,501
광역시 이상	1,061	1	1	5	22	35	5	0	0	26	20	124	408	414
경기	17,934	57	18	44	19	28	57	89	126	102	69	224	7,671	9,430
강원	11,248	151	26	156	227	102	134	121	141	232	312	2,167	3,758	3,721
충북	10,700	25	43	56	141	68	172	196	142	270	272	582	3,815	4,918
충남	5,865	28	74	46	137	237	184	157	227	335	324	727	1,533	1,856
전북	9,665	127	90	145	166	73	250	467	385	883	611	1,247	2,228	2,993
전남	8,787	77	67	51	37	89	249	257	289	549	768	1,802	2,046	2,506
경북	13,323	115	218	86	334	359	378	772	485	1,118	1,112	1,755	3,095	3,496
경남	9,639	243	210	265	203	242	267	277	373	525	535	1,760	2,121	2,618
제주	1,292	56	22	31	16	7	58	48	50	40	44	115	333	472

주: 귀촌가구 수가 집계되어 공식통계로 발표되기 시작한 연도는 2012년도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귀농·귀촌인 통계 및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자료.

지역별로 귀농·귀촌 가구가 많은 지역은 2013년의 경우 경기(9,430가구), 충북(4,918), 강원(3,721), 경북(3,496), 전북(2,993) 순이다.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일수록 귀농·귀촌가구 수가 많다<표 3-1>.

귀농과 귀촌을 분리하여 살펴보면 귀농·귀촌의 추이 및 지역별 특성이 보다 분명해진다. 귀농가구는 2010년 5,405가구에서 2011년에는 10,075가

11 귀농자와 귀촌자가 농업인으로의 등록 여부에 따라 구별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농지가격 상승 등으로 여건이 미흡하여 농업인 등록을 하지 못하는 귀촌자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구로 1.9배 가까이 증가한 이래 2012년에는 11,220가구, 2013년에는 10,923가구로 10,000가구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표 3-2>.

지역별로는 2013년 통계 기준으로 경북(2,087)이 가장 많고, 다음이 전남(1,825), 경남(1,3480), 전북(1,211), 충남(1,177) 순이다<표 3-2>. 귀농가구의 지역 분포는 지역의 규모 및 농업 자원의 정도에 비례하고 있다.

표 3-2. 시도별 귀농가구 추이

단위: 가구,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2010~2013년)
전국	5,405 (100.0)	10,075 (100.0)	11,220 (100.0)	10,923 (100.0)	37,623 (100.0)
부산	19 (0.4)	33 (0.3)	29 (0.3)	22 (0.2)	103 (0.3)
대구	22 (0.4)	60 (0.6)	80 (0.7)	62 (0.6)	224 (0.6)
인천	86 (1.6)	79 (0.8)	89 (0.8)	87 (0.8)	341 (0.9)
울산	47 (0.9)	74 (0.7)	55 (0.5)	78 (0.7)	254 (0.7)
세종	-	-	93 (0.8)	80 (0.7)	173 (0.5)
경기	588 (10.9)	1,105 (11.0)	1,027 (9.2)	931 (8.5)	3,651 (9.7)
강원	480 (8.9)	807 (8.0)	972 (8.7)	875 (8.0)	3,134 (8.3)
충북	415 (7.7)	745 (7.4)	918 (8.2)	872 (8.0)	2,950 (7.8)
충남	489 (9.0)	1,110 (11.0)	1,214 (10.8)	1,177 (10.8)	3,990 (10.6)
전북	631 (11.7)	1,078 (10.7)	1,238 (11.0)	1,211 (11.1)	4,158 (11.1)
전남	768 (14.2)	1,600 (15.9)	1,733 (15.4)	1,825 (16.7)	5,926 (15.8)
경북	1,052 (19.5)	1,840 (18.3)	2,080 (18.5)	2,087 (19.1)	7,059 (18.8)
경남	681 (12.6)	1,291(12.8)	1,434 (12.8)	1,348 (12.3)	4,754 (12.6)

귀촌은 2012년 15,788가구에서 2013년 21,501가구로 증가하고 있다<표 3-3>. 귀촌지역의 비율은 2012년에 경기 42.1%, 충북 18.8%, 강원 17.7%이며, 2013년에는 경기도 39.5%, 충북 18.8%, 강원 13.2% 순이다. 2012년

과 2013년을 비교하면 경기, 강원에 집중되었던 귀촌가구가 점차 타 시도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3. 시도별 귀촌가구 비교

단위: 가구, (%)

	귀촌가구 수	
	2012년	2013년
전국	15,788	21,501
부산	-	26
대구	2	-
인천	13	43 (0.2)
대전	9	12
울산	33 (0.2)	-
세종	5	4
경기	6,644 (42.1)	8,499 (39.5)
강원	2,786 (17.7)	2,846 (13.2)
충북	2,897 (18.4)	4,046 (18.8)
충남	319 (2.0)	679 (3.2)
전북	990 (6.3)	1,782 (8.3)
전남	313 (2.0)	681 (3.2)
경북	1,015 (6.4)	1,409 (6.6)
경남	687 (4.4)	1,270 (5.9)
제주	75 (0.5)	204 (1.0)

자료: 통계청(각 연도). 귀농·귀촌인 통계.

1.2. 귀농·귀촌 전 거주지

귀농 전 거주지의 비율은 연도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2013년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출신이 전체 귀농자의 47.6%를 차지하고 있다<표 3-4>. 이는 국민 전체의 지역별 거주 비율과 거의 일치하는데 귀농·귀촌자의 출발지가 수도권의 도시지역에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대도시 지역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4. 귀농 전 거주 지역별 귀농가구 수

단위: 가구,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전국인구 분포 (2010년)
전국	5,405 (100.0)	10,075 (100.0)	11,220 (100.0)	10,923 (100.0)	37,623 (100.0)	(100.0)
서울	1,089 (20.1)	2,014 (20.0)	2,316 (20.6)	2,230 (20.4)	7,649 (20.3)	(20.1)
부산	399 (7.4)	727 (7.2)	827 (7.4)	832 (7.6)	2,785 (7.4)	(7.1)
대구	370 (6.8)	712 (7.1)	783 (7.0)	794 (7.3)	2,659 (7.1)	(5.1)
인천	319 (5.9)	552 (5.5)	618 (5.5)	596 (5.5)	2,085 (5.5)	(5.5)
광주	281 (5.2)	554 (5.5)	642 (5.7)	642 (5.9)	2,119 (5.6)	(3.1)
대전	196 (3.6)	416 (4.1)	511 (4.6)	448 (4.1)	1,571 (4.2)	(3.1)
울산	110 (2.0)	190 (1.9)	213 (1.9)	223 (2.0)	736 (2.0)	(2.2)
세종	-	-	-	5 (0.0)	5 (0.0)	
경기	1,206 (22.3)	2,190 (21.7)	2,445 (21.8)	2,368 (21.7)	8,209 (21.8)	(23.3)
강원	129 (2.4)	231 (2.3)	265 (2.4)	271 (2.5)	896 (2.4)	(3.1)
충북	130 (2.4)	192 (1.9)	232 (2.1)	236 (2.2)	790 (2.1)	(3.1)
충남	91 (1.7)	215 (2.1)	213 (1.9)	215 (2.0)	734 (2.0)	(4.2)
전북	266 (4.9)	534 (5.3)	531 (4.7)	499 (4.6)	1,830 (4.9)	(3.7)
전남	133 (2.5)	363 (3.6)	332 (3.0)	305 (2.8)	1,133 (3.0)	(3.6)
경북	260 (4.8)	440 (4.4)	507 (4.5)	500 (4.6)	1,707 (4.5)	(5.4)
경남	343 (6.3)	608 (6.0)	655 (5.8)	652 (6.0)	2,258 (6.0)	(6.5)
제주	83 (1.5)	137 (1.4)	130 (1.2)	107 (1.0)	457 (1.2)	(1.1)

전 거주지별로 귀농 지역을 살펴보면 수도권 거주자는 전국 모든 곳으로 귀농하고 있으나, 그 비율 면에서는 수도권에 가까운 경기도(17.0%)가 가장 높으며, 다음이 충남(14.6%), 전남(14.5%) 순이다<표 3-5>. 수도권을 제

외한 나머지 지역은 같은 권역 내의 농촌지역으로 귀농하는 경향이 보인다. 예를 들면, 광주·전남권역에서 귀농하는 사람의 92%는 전남으로 귀농하고, 대구·경북에서 귀농하는 사람의 79.8%가 경북으로, 부산·울산·경남 권역에서 귀농하는 이 중 57.2%가 경남으로 귀농하고 있다. 수도권 거주자는 원거리 귀농을, 기타 지역은 근거리 귀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5. 출발지 및 도착지별 귀농가구(2013년)

단위: 가구, (%)

출발지 / 도착지	전국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전·충남·세종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
전국 (비율)	10,923 (100.0)	5,194 (100.0)	271 (100.0)	236 (100.0)	668 (100.0)	499 (100.0)	947 (100.0)	1,294 (100.0)	1,707 (100.0)	107 (100.0)
부산	22	1			0		0	3	18	
대구	62	4			0		1	51	6	
인천	87	85			0		0	1	1	
울산	78	4		1	0	1	0	1	71	
세종	80	44		8	24	1	1	1	1	
경기	931 (8.5)	883 (17.0)	11	8	13	2	2	6	4	2
강원	875	610 (11.7)	206 (76.0)	13 (5.5)	8	1	2	9	26	
충북	872	513 (9.9)	11	163 (69.1)	126 (18.9)	3	1	24	31	
충남	1,177 (10.8)	757 (14.6)	5	12	347 (51.9)	7	4	18	26	1
전북	1,211 (11.1)	582 (11.2)	6	4	64 (9.6)	441 (88.4)	51 (5.4)	12	49	2
전남	1,825 (16.7)	755 (14.5)	6	11	29	32 (6.4)	871 (92.0)	18	100 (5.9)	3
경북	2,087 (19.1)	610 (11.7)	22 (8.1)	11	27	1	5	1,033 (79.8)	376 (22.0)	2

귀촌가구의 출발 지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61.6%를 차지하고 있다<표 3-6>. 이는 귀농과 비교할 때 수도권 거주자의 귀촌 경향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이한 점은 귀촌지로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경기도의 경우 2013년에 귀촌한 8,499가구 가운데 수도권에서 온 귀촌가구가 7,169가구로 84.3%를 차지하지만, 강원(303가구), 대전·충남·세종(297가구), 대구·경북(173가구), 부산·울산·경남(171가구) 등지에서의 귀촌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통계로 표시되는 경기도의 귀촌가구 중에는 전원생활 추구 외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표 3-6. 귀촌 전 거주 지역별 귀촌 지역(2013년)

단위: 가구, (%)

출발지 / 도착지	합계	수도권	강원	충북	대전/충남/세종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
전국	21,501 (100.0)	13,240 (100.0)	950 (100.0)	1,349 (100.0)	1,373 (100.0)	832 (100.0)	760 (100.0)	1,306 (100.0)	1,584 (100.0)	107 (100.0)
부산	26	0	-	-	0	-	0	2	24	-
인천	43	40	-	-	1	-	0	0	2	-
대전	12	0	-	-	12	-	0	0	0	-
세종	4	4	-	-	0	-	0	0	0	-
경기	8,499 (39.5)	7,169 (54.1)	303 (31.9)	192 (14.2)	297 (21.6)	64 (7.7)	117 (15.4)	173 (13.2)	171 (10.8)	13 (12.1)
강원	2,846 (13.2)	1,974 (14.9)	521 (54.8)	70 (5.2)	79 (5.8)	8	27	77 (5.9)	85 (5.4)	5
충북	4,046 (18.8)	1,894 (14.3)	70 (7.4)	1,004 (74.4)	604 (44.0)	43 (5.2)	41 (5.4)	202 (15.5)	179 (11.3)	9 (8.4)
충남	679	453	2	9	174 (12.7)	12	5	9	14	1
전북	1,782 (8.3)	693 (5.2)	11	22	118 (8.6)	674 (81.0)	178 (23.4)	17	62	7 (6.5)

1.3. 귀농·귀촌가구주 연령

2013년 귀농자의 평균 연령은 53.1세이다. 세대별로는 50대가 39.3%로 가장 많고, 40대 23%, 60대 20.9%, 30대 이하 12.0%로 나타났다<표 3-7>.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귀촌이 많은 경기도와 귀농이 많은 전라남도, 경상북도를 비교하면 경기도의 경우 60대 이후가 많으며, 전라남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30대 이전과 40대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표 3-7>. 경상북도는 전국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전라남도의 경우 농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열악한 젊은 층의 귀농 비율이 높고, 경기도의 경우 경제력을 어느 정도 갖춘 60대 이후 전원생활 희망자가 귀농을 겸하여 이동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3-7. 연령별 귀농가구

단위: 명, (%)

	전국		경기		전남		경북	
기간	2013년	2010~2013년	2013년	2010~2013년	2013년	2010~2013년	2013년	2010~2013년
합계	10,923 (100.0)	37,623 (100.0)	931 (100.0)	3,651 (100.0)	1,825 (100.0)	5,926 (100.0)	2,087 (100.0)	7,059 (100.0)
30대 이하	1,253 (11.5)	4,508 (12.0)	108 (11.6)	441 (12.1)	243 (13.3)	850 (14.3)	228 (10.9)	770 (10.9)
40대	2,510 (23.0)	9,312 (24.8)	200 (21.5)	823 (22.5)	475 (26.0)	1,607 (27.1)	484 (23.2)	1,774 (25.1)
50대	4,289 (39.3)	14,205 (37.8)	361 (38.8)	1,355 (37.1)	646 (35.4)	2,043 (34.5)	832 (39.9)	2,780 (39.4)

귀촌자의 연령은 귀농자와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2013년의 경우 50대가 25.3%로 가장 많고, 40대 22.1%, 60대가 20.7%로 나타난다<표 3-8>. 2012년에 비하여 2013년에는 40대와 50대의 비중이 높아졌다.

표 3-8. 연령별 귀촌가구

단위: 가구, (%)

구분	2012년	2013년
합계	15,788 (100.0)	21,501 (100.0)
30대 이하	3,369 (21.3)	3,807 (17.7)
40대	3,302 (20.9)	4,748 (22.1)
50대	4,001 (25.3)	6,131 (28.5)
60대	3,007 (19.0)	4,447 (20.7)
70대 이상	2,109 (13.4)	2,368 (11.0)

자료: 통계청(각 연도). 귀농·귀촌인 통계.

1.4. 귀농·귀촌 상위 시군

2013년도 귀농·귀촌가구가 많은 시군은 경기도 일대와 강원도 홍천군, 충북 영동군, 진천군, 음성군 등이다. 이들 지역은 주로 귀촌가구가 많은 지역이다<표 3-9>. 반면 2013년도에 귀농가구가 많은 시군은 고창군(194가구), 상주시(184가구), 신안군(141가구), 해남군(149가구), 밀양시(139가구), 양평군(138가구), 고흥군(137가구), 영천시(137가구) 순이다<표 3-9>.

표 3-9. 귀농·귀촌가구가 많은 상위 20개 시군(2013년)

단위: 가구

	행정구역	귀농·귀촌 가구 수	행정구역	귀농 가구 수	행정구역	귀촌가구 수
1	가평군	1,483	고창군	194	가평군	1,436
2	파주시	1,227	상주시	184	파주시	1,166
3	양주시	1,100	신안군	141	양주시	1,076
4	화성시	1,055	해남군	139	화성시	969
5	남양주시	936	밀양시	139	남양주시	886
6	홍천군	925	양평군	138	포천시	821
7	포천시	898	고흥군	137	홍천군	799
8	영동군	756	영천시	137	진천군	673
9	양평군	730	제주시	135	영동군	638
10	진천군	715	서귀포시	133	양평군	592
11	고창군	689	의성군	132	음성군	566
12	음성군	650	남원시	130	용인시	511
13	용인시	542	나주시	129	고창군	495
14	청원군	534	청도군	129	청원군	456
15	안성시	455	김천시	128	안성시	375
16	횡성군	449	창녕군	127	보은군	363
17	충주시	447	홍천군	126	강릉시	362
18	보은군	447	예천군	124	충주시	357
19	완주군	414	성주군	120	횡성군	341
20	강릉시	412	영동군	118	영월군	334

자료: 통계청(2013). 귀농·귀촌인 통계.

앞의 <표 3-9>에서 살펴본 귀촌이 많은 상위 지역의 공통된 특성은 서울과의 거리이다. 서울과의 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다음으로 자연환경, 지가 수준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지역은 귀농보다는 은퇴 후의 전원생활 추구형 귀촌인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귀농의 경우 서울과의 거리, 농업여건, 지자체의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도에 귀농인구가 가장 많았던 전북 고창과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경북 상주의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3시간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과 농업여건이 양호하다는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창군은 평당 4만~5만 원 선에서 농지 구입이 가능하며, 농지의 공급

능력이 충분하고, 복분자·포도 등 다양한 특화품목 재배가 활발한 지역이다. 상주의 경우 지가수준은 약간 높지만 다양한 품목이 재배되고 있으며, 작목반을 통한 판매활동이 용이하고, 재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다. 2013년에 전남의 신안군(141가구), 해남군(149가구), 고흥군(137가구) 등으로의 귀농가구가 많은 이유는 이들 지역의 지가가 저렴하며, 농지가 풍부하고, 다양한 작목 재배가 가능하다는 농업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영천(137가구)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가가 높지만 지역 내에 농산물 도매시장이 자리 잡고 있어 농산물의 판매 여건이 양호하다.

<표 3-9>에서 귀농이 많은 상위 시군 가운데는 지자체 차원의 귀농·귀촌 노력이 활발한 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지자체의 노력은 시장이나 군수의 의지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고창군과 상주시의 전임 지자체장은 귀농·귀촌을 지자체 정책의 제1순위로 설정할 만큼 귀농·귀촌에 대한 의지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 두 지역은 귀농·귀촌만을 전담하는 행정조직의 설치되어 있다.[12] 행정조직의 파트너로서 민간 차원에서 운영되는 귀농귀촌협의회 또는 도시민 유치지원센터 역시 귀농·귀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귀농자가 많은 고창, 상주, 신안, 고흥, 영천, 서귀포 등에는 민간 조직인 귀농귀촌협의회 내지는 도시민 유치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13]

---

12 대부분의 기초 지자체에는 귀농·귀촌 지원조직이 있지만, 1-2명의 담당자가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귀농·귀촌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귀농·귀촌이 활발한 고창군과 상주시, 서귀포시의 경우 귀농·귀촌만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에서 2-3명의 인원이 귀농·귀촌을 담당하고 있다.

13 고창군의 경우 군청에 민간 협의회를 지원하는 귀농·귀촌 T/F팀이 있으며, 별도로 민간 조직인 귀농귀촌협의회가 있다. 귀농귀촌협의회 내에서 각 읍면별 14개 지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협의회 내에서 작목반 교육과 동시에 작목별 멘토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 도시 농촌 인구이동 분석

앞에서 살펴본 귀농·귀촌 통계자료는 동부에서 읍면부로의 이주자 중에서 통계청이 정한 귀농·귀촌자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별한 것이다.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이동자 모두가 귀농·귀촌자는 아니겠지만 귀농·귀촌 현상은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이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자료에 기초하여 2013년까지의 도시 농촌 인구이동 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귀농·귀촌통계자료와 비교해 본다.

2.1. 분석자료 및 지역구분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세대별 원자료에 기초한다. 대상 연도는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다. 원자료에서 동부에서 동부로, 읍면부에서 읍면부로의 인구 이동을 제외하고 동부에서 읍면부로, 읍면부에서 동부로의 전입신고 자료만을 분석한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세부 지역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동부를 서울대도시권과 광역도시, 일반시 및 복합시로 구분하였다. 서울대도시권은 서울과 인천, 그리고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의 위성도시(경기도의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안성, 평택, 오산을 제외한 도시)이며, 읍면부는 수도권, 광역시 및 주변 나머지 지역으로 구분하였다<표 3-10>.

표 3-10. 동부와 읍면부의 지역 구분

지역구분		해당지역
동부	서울대도시권 동부	서울, 인천, 구리, 남양주, 하남, 광주, 성남, 용인, 과천, 의왕, 군포, 수원, 화성, 시흥, 안산, 안양, 광명, 부천, 김포, 고양, 의정부, 양주
	광역시 동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일반시 복합시 동부	기타 지역
읍면부	수도권 읍부	인천, 경기, 충청(천안, 아산, 당진)
	수도권 면부	
	광역시 및 주변 읍부	기장, 김해, 양산, 경주, 울주, 함양, 달성, 경산, 칠곡, 군위, 고령, 성주, 영천 화순, 장성, 담양, 나주, 대덕, 청원, 옥천, 보은, 금산, 세종(연기), 공주, 계룡
	광역시 및 주변 면부	
	시 읍부	기타 지역
	시 면부	기타 지역
	군 읍부	기타 지역
	군 면부	기타 지역

2.2. 분석결과

2.2.1. 향촌이도 현상 지속

분석 결과 2010년 이후 전국 차원에서 향촌이도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0년에 비해 이동인구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2012년 감소하다가 2013년에 다시 증가 경향을 보였다<표 3-11>.

표 3-11. 연도별 향촌·향도 인구이동 추이

단위: 명, (%)

구분	향촌인구이동			향도인구이동			향촌-향도
	동→읍면	동→읍	동→면	읍면→동	읍→동	면→동	
2005	924,190	441,672	482,518	924,301	422,631	501,670	-111
	(10.5%)	(5%)	(5.5%)	(10.5%)	(4.8%)	(5.7%)	
2010	926,277	451,297	474,980	830,034	378,937	451,097	96,243
	(11.3%)	(5.5%)	(5.8%)	(10.1%)	(4.6%)	(5.5%)	
2011	872,032	402,778	469,254	803,017	372,830	430,187	69,015
	(10.7%)	(5%)	(5.8%)	(9.9%)	(4.6%)	(5.3%)	
2012	795,618	365,297	430,321	765,772	352,806	412,966	29,846
	(10.6%)	(4.9%)	(5.7%)	(10.2%)	(4.7%)	(5.5%)	
2013	790,992	355,077	435,915	726,610	339,565	387,045	64382
	(10.7%)	(4.8%)	(5.9%)	(9.8%)	(4.6%)	(5.2%)	

주 1) 향촌은 동부에서 읍면부로의 인구이동을, 향도는 그 반대의 인구이동을 지칭. 향촌-향도의 수치가 +일 경우 향촌이도 인구이동이라고 정의.
2) ( ) 안의 백분율은 당해 연도 전국 인구이동 총량 가운데 해당되는 유형의 인구이동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주민등록 전입신고 자료.

2.2.2. 군의 면부에서도 향촌이도 현상 발생

향촌이도 현상을 지역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수도권 읍면부와 광역시 주변 읍면부에서 향촌이도 현상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대표적인 농촌지역이라 할 수 있는 일반시 및 군의 면부에서도 향촌이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표 3-12>.

대표적인 농촌지역이라 할 수 있는 군 면부로의 인구이동만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는 향촌이도 현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도권 동부에서 군 면부로의 인구이동이 향촌이도 현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시의 동부와 군의 면부 간 인구이동도 2012년까지는 향도이촌 현상이 이어졌지만, 2013년부터는 비록 40명에 불과하기는 하나 향촌이도 현상으로 바뀌고 있다<표 3-13>.

표 3-12. 지역구분별 향촌·향도 인구이동 추이

단위: 명, (%)

구분		동↔읍면	동↔수도권 읍부	동↔수도권 면부	동↔광역시 주변 읍부	동↔광역시 주변 면부	동↔시 읍부	동↔시 면부	동↔군 읍부	동↔군 면부
2005	향촌	924,190	206,495	135,407	79,350	109,903	60,527	106,494	95,300	130,714
		(10.5%)	(2.3%)	(1.5%)	(0.9%)	(1.2%)	(0.7%)	(1.2%)	(1.1%)	(1.5%)
	향도	924,301	155,681	124,944	88,189	106,801	61,636	120,002	117,125	149,923
		(10.5%)	(1.8%)	(1.4%)	(1%)	(1.2%)	(0.7%)	(1.4%)	(1.3%)	(1.7%)
	향촌이도	-111	50,814	10,463	-8,839	3,102	-1,109	-13,508	-21,825	-19,209
2010	향촌	926,277	221,475	120,868	90,114	105,862	57,964	123,301	81,744	124,949
		(11.3%)	(2.7%)	(1.5%)	(1.1%)	(1.3%)	(0.7%)	(1.5%)	(1%)	(1.5%)
	향도	830,034	147,425	110,984	82,264	94,186	60,874	118,279	88,374	127,648
		(9.4%)	(1.7%)	(1.3%)	(0.9%)	(1.1%)	(0.7%)	(1.4%)	(1.1%)	(1.6%)
	향촌이도	96,243	74,050	9,884	7,850	11,676	-2,910	5,022	-6,630	-2,699
2011	향촌	872,032	175,849	120,352	84,064	103,929	59,242	123,503	83,623	121,470
		(10.7%)	(2.2%)	(1.5%)	(1%)	(1.3%)	(0.7%)	(1.5%)	(1%)	(1.5%)
	향도	803,017	144,513	105,231	81,343	91,150	59,609	117,943	87,365	115,863
		(9.1%)	(1.6%)	(1.2%)	(0.9%)	(1%)	(0.7%)	(1.5%)	(1.1%)	(1.4%)
	향촌이도	69,015	31,336	15,121	2,721	12,779	-367	5,560	-3,742	5,607
2012	향촌	795,618	143,237	106,902	78,512	89,139	54,226	110,758	80,961	113,116
		(10.6%)	(1.9%)	(1.4%)	(1%)	(1.2%)	(0.7%)	(1.5%)	(1.1%)	(1.5%)
	향도	765,772	130,692	99,943	73,367	80,829	57,607	110,395	83,045	111,643
		(8.7%)	(1.5%)	(1.1%)	(0.8%)	(0.9%)	(0.8%)	(1.5%)	(1.1%)	(1.5%)
	향촌이도	29,846	12,545	6,959	5,145	8,310	-3,381	363	-2,084	1,473
2013	향촌	790,992	135,064	108,895	81,864	102,147	54,563	113,865	83,586	111,008
		(10.7%)	(1.8%)	(1.5%)	(1.1%)	(1.4%)	(0.7%)	(1.5%)	(1.1%)	(1.5%)
	향도	726,610	128,738	100,179	75,727	80,297	55,485	104,346	79,615	102,223
		(9.8%)	(1.7%)	(1.4%)	(1.0%)	(1.1%)	(0.7%)	(1.4%)	(1.1%)	(1.4%)
	향촌이도	64,382	6,326	8,716	6,137	21,850	-922	9,519	3,971	8,785

표 3-13. 동부와 군 면부 간 인구이동

단위: 명

구분		동 ↔ 군 면부			
		합계	수도권 동부 ↔ 군 면부	광역시 동부 ↔ 군 면부	일반시 동부 ↔ 군 면부
2005	향촌	130,714	40,932	35,263	54,519
	향도	149,923	48,174	37,298	64,451
	향촌이도	-19,209	-7,242	-2,035	-9,932
2010	향촌	124,949	42,571	30,296	52,082
	향도	127,648	38,931	31,719	56,998
	향촌이도	-2,699	3,640	-1,423	-4,916
2011	향촌	121,470	42,362	30,482	48,626
	향도	115,863	34,796	29,438	51,629
	향촌이도	5,607	7,566	1,044	-3,003
2012	향촌	113,116	40,581	27,962	44,573
	향도	111,643	34,486	28,117	49,040
	향촌이도	1,473	6,095	-155	-4,467
2013	향촌	111,008	39,338	28,002	43,668
	향도	102,223	31,963	26,632	43,628
	향촌이도	8,785	7,375	1,370	40

자료: 통계청(각 연도). 주민등록 전입신고 자료.

2.2.3. 50대 이후의 향촌인구 증가

연령대에 따른 동부와 군 면부 간 인구이동 특성을 살펴보면, 20대와 30대는 여전히 향도 인구이동이 많지만 그 숫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전체 인구이동에서 차지하는 20대와 30대의 인구이동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표 3-14>.

40대와 50대는 2005년 향촌인구 이동이 많은데 점차 그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50대의 경우 2013년 향촌인구는 19,200명인 데 반해 향도인구는 11,809명으로 7,391명의 향촌이동 인구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50대는 최근으로 올수록 향촌이도 인구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인구이동에서 차지하는 40대와 50대의 인구이동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표 3-14. 연령별 동부와 군 면부 간 인구이동

단위: 명, (%)

구분	2005년		2010년		2012		2013년	
	동부→ 군 면부 (향촌)	군면부→ 동부 (향도)	동부→ 군 면부 (향촌)	군면부→ 동부 (향도)	동부→ 군 면부 (향촌)	군면부→ 동부 (향도)	동부→ 군 면부 (향촌)	군면부→ 동부 (향도)
0~9	14,851	17,007	9,895	11,157	8,202	9,241	7,751	8,343
	(11.4%)	(11.3%)	(7.9%)	(8.7%)	(7.3%)	(8.3%)	(7%)	(8.2%)
10~19	11,452	13,588	11,904	11,805	10,307	10,471	10,312	9,210
	(8.8%)	(9.1%)	(9.5%)	(9.2%)	(9.1%)	(9.4%)	(9.3%)	(9%)
20~29	30,956	48,130	24,158	33,239	19,952	27,911	18,795	24,738
	(23.7%)	(32.1%)	(19.3%)	(26%)	(17.6%)	(25%)	(16.9%)	(24.2%)
30~39	23,673	25,357	21,989	22,969	19,194	20,250	18,639	18,786
	(18.1%)	(16.9%)	(17.6%)	(18%)	(17%)	(18.1%)	(16.8%)	(18.4%)
40~49	19,337	15,941	20,754	16,930	17,970	14,662	17,721	13,560
	(14.8%)	(10.6%)	(16.6%)	(13.3%)	(15.9%)	(13.1%)	(16%)	(13.3%)
50~59	12,276	9,671	17,311	13,091	18,442	12,493	19,200	11,809
	(9.4%)	(6.5%)	(13.9%)	(10.3%)	(16.3%)	(11.2%)	(17.3%)	(11.6%)
60 이상	18,169	20,229	18,938	18,457	19,049	16,615	18,590	15,777
	(13.9%)	(13.5%)	(15.2%)	(14.5%)	(16.8%)	(14.9%)	(16.7%)	(15.4%)
전체	130,714	149,923	124,949	127,648	113,116	111,643	111,008	102,22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통계청(각 연도). 주민등록 전입신고 자료.

2.2.4. 향촌인구 많은 시군

연도별로 향촌인구가 많은 상위 15개 시군은 주로 수도권과 광역시 주변 시군이다. 이는 우리나라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이동이 주로 도시의 외연적 확산에 기인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상위 15개 시군으로의 향촌인구이동 비율이 전체 향촌인구 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9%에서 2013년 34%로 점차 감소 경향을 띠고 있다. 이는 향촌 현상이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표 3-15>.

표 3-15. 향촌인구(동부->읍면부)가 많은 상위 15개 시군(연도별)

단위: 명

2005년		2010년		2013년	
시군명	향촌인구수	시군명	향촌인구수	시군명	향촌인구수
용인시	54,228	남양주	64,384	남양주	36,693
화성시	52,674	파주시	54,049	부산기장군	25,512
남양주	36,019	화성시	28,432	광주시	21,995
파주시	25,959	김해시	22,088	화성시	20,913
김해시	23,767	광주시	20,644	아산시	19,345
광주시	20,579	부산기장군	20,264	양산시	17,295
천안시	18,175	울산울주군	20,073	울산울주군	16,301
평택시	18,118	김포시	19,421	파주시	15,173
포천시	17,948	아산시	19,091	청원군	15,075
대구달성군	17,044	청원군	17,183	평택시	14,839
아산시	16,337	안성시	15,907	대구달성군	13,785
울산울주군	16,267	대구달성군	15,344	용인시	13,445
양산시	14,750	평택시	15,022	김해시	12,844
안성시	13,939	용인시	14,600	안성시	12,119
포항시	13,195	포항시	13,628	김포시	11,254
15시군 합계	358,999	15시군 합계	360,130	15시군 합계	266,588
비중(%)	38.8	비중(%)	38.9	비중(%)	33.8
전체시군	924,190	전체시군	926,277	전체시군	789,349

자료: 통계청(각 연도). 주민등록 전입신고 자료.

수도권 및 광역시 동부로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광역시 주변 시군을 제외한 읍면부로의 인구이동이 많은 상위 15개 시군의 공통적인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 전입인구가 많은 제주시, 원자력발전소가 입지하여 전입 전출이 활발한 영광군, 수도권의 영향을 받은 음성군, 충북도청이 이전한 홍성군, 공업도시 포항시 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수도권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고 뚜렷한 인구 유입 소재가 없는 고창군 등의 경우 귀농·귀촌에 의한 인구이동이 미친 영향을 일부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표 3-16>.

표 3-16. 수도권/광역시 동부에서 기타 시군 읍면부(수도권, 광역시 주변 제외)로 향촌인구가 많은 상위 15개 시군(연도별)

단위: 명

2005년		2010년		2013년	
시군명	향촌인구수	시군명	향촌인구수	시군명	향촌인구수
합천군	5,288	포항시	4,296	제주시	3,552
거제시	5,032	음성군	3,713	영광군	3,507
논산시	4,551	서산시	3,626	음성군	3,497
포항시	4,499	논산시	3,585	홍성군	3,426
홍성군	4,278	해남군	3,312	포항시	3,382
서산시	3,829	영동군	3,266	영동군	3,252
함평군	3,588	고창군	3,049	논산시	3,162
해남군	3,454	영광군	3,001	서산시	3,113
영암군	3,337	영암군	2,999	홍천군	3,042
음성군	3,260	홍천군	2,885	장흥군	2,975
예산군	3,145	철원군	2,881	해남군	2,840
태안군	3,060	무안군	2,829	고창군	2,839
고흥군	3,047	홍성군	2,819	무안군	2,755
영광군	3,013	원주시	2,781	예산군	2,556
영동군	2,793	강진군	2,746	태안군	2,460
전체 시군	182,134	전체 시군	177,901	전체 시군	168,373

자료: 통계청(각 연도). 주민등록 전입신고 자료.

한편 수도권과 광역시, 광역시 주변 시군을 제외한 군 지역 면부로의 인구이동이 많은 상위 15개 시군 가운데는 최근 귀농·귀촌이 활발한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뚜렷한 경향치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2012년 이후를 보면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과 같이 귀농·귀촌이 활발한 지역과 수도권에 가까운 음성군, 홍천군, 평창군, 지역 규모가 큰 해남군 등이 자리하고 있다<표 3-17>.

표 3-17. 수도권/광역시 동부에서 군 지역 면부로 인구이동이 많은 상위 15개 시군(수도권, 광역시 주변 군 제외)(연도별)

단위: 명

2005년		2010년		2012년		2013년	
군명	면부 전입인구	군명	면부 전입인구	군명	면부 전입인구	군명	면부 전입인구
합천군	6,784	무안군	6,960	완주군	4,830	완주군	5,081
완주군	6,619	완주군	5,596	음성군	3,751	음성군	3,435
신안군	3,585	신안군	4,198	함안군	3,374	신안군	3,113
음성군	3,518	음성군	3,664	고창군	2,964	함안군	2,874
무안군	3,495	함안군	3,608	신안군	2,958	해남군	2,759
해남군	3,360	고창군	3,209	해남군	2,919	고창군	2,755
함안군	3,096	해남군	3,157	부안군	2,876	홍천군	2,573
함평군	3,093	하동군	2,995	평창군	2,676	평창군	2,556
고흥군	3,036	고흥군	2,639	홍천군	2,445	부안군	2,500
고창군	2,682	평창군	2,630	하동군	2,431	합천군	2,494
평창군	2,676	부안군	2,552	합천군	2,409	하동군	2,327
순창군	2,641	산청군	2,440	고흥군	2,380	진천군	2,257
부안군	2,635	합천군	2,406	진천군	2,367	부여군	2,252
부여군	2,584	부여군	2,360	인제군	2,269	창녕군	2,223
하동군	2,564	진천군	2,355	횡성군	2,261	고흥군	2,200
전체합계	130,714	전체합계	124,949	전체합계	113,116	전체합계	111,008

자료: 통계청(각 연도). 주민등록 전입신고 자료.

3. 귀농·귀촌과 인구이동 분석 종합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이동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2010년을 기점으로, 동부에서 읍면부로 전입하는 인구가 읍면부에서 동부로 전입하는 인구를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동부에서 읍면부로의 인구이동 현상은 근교도시화 현상(대도시권 내 인구이동)과 역도시화 현상이 혼합된 형태이지만 아직까지는 근교도시화 현상이 우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부에서 읍면부로의 인구이동 상위 15개 시군이 수도권과 광역시 주변 시군에 속하며, 이 지역이 차지하는 인구이동 수가 동부에서 읍면부로의 인구이동 수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통해 유추된다. 동부에서 읍면부로 이동한 인구의 상당수는 읍면부 내 신규개발지 등의 도시계획구역으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리 향도이촌이 아닌 향촌이도의 인구이동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3년도 자료를 보면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촌이도 인구이동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통적인 농촌이라 할 수 있는 일반 군부 면지역에서 향촌이도 인구이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군부의 향촌이도 현상은 수도권 동부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촌이도 현상은 농촌지역의 사회적 인구 증가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8>은 각 지역별 순이동인구(전입자 수-전출자 수)를 나타내는데, 서울대도시권의 동부와 광역시 동부에서는 순이동인구가 줄고 있는 반면에 광역시 주변 읍면부와 일반시 읍면부에서는 순이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도시에서의 사회적 인구는 감소 경향인 반면 농촌지역에서의

---

14 국토교통부의 2013년도 도시계획현황통계에 의하면 2013년 도시화율은 91.5%로 2012년도 91.04%에 비해 오히려 0.54% 증가하였다. 이는 신규 개발지가 도시 지역으로 편입된 결과로 판단된다.

사회적 인구는 증가 경향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농촌지역이라 할 수 있는 군 면부의 경우 2005년 - 24,503명에서 2012년 - 2,812명으로 전출 초과였지만 2013년에는 4,403명으로 전입 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향촌이도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

표 3-18. 지역별 순이동인구(전입-전출)

단위: 명

	2005년	2010년	2012년	2013년
수도권 동부	56,079	-71,592	-28,698	-26,386
광역시 동부	-67,305	-56,680	-21,847	-39,020
일반시 동부	27,444	32,029	20,699	1,248
수도권 읍면부	47,152	81,940	19,892	13,700
광역시 읍면부	-14,890	14,583	9,769	26,956
일반시 읍부	713	-184	-2,661	-1,226
일반시 면부	-6,849	6,903	3,262	11,264
군 읍부	-17,783	4,160	2,396	5,254
군 면부	-24,503	-11,151	-2,812	4,403

자료: 통계청(각 연도). 주민등록 전입신고 자료.

향촌이도의 인구이동은 귀농·귀촌과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동부에서 대표적인 농촌지역인 군 면부로의 인구이동이 귀농·귀촌의 주 연령대인 50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귀농·귀촌 현상이 도시와 농촌의 인구이동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지역의 사회적 인구증가나 전체 인구증가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 즉, 지역의 사회적 인구는 도시와 농촌 간의 인구이동 외에 도시와 도시, 농촌과 농촌 간 인구이동에 영향을 받으며, 지역의 인구증가는 사회적인 인구증가보다는 출생률과 사망률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 3-19>는 수도권인 경기도를 제외하고 귀농·귀촌가구가 많은 상위 15개 군의 인구이동과 인구증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3개 시군(충북 청원, 충주, 강원 강릉시)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군에서 사회적 인구 및 전체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충북, 강원을 제외한 지역에서 귀농·귀촌가구가 많은 상위 15개 시군만을 별도로 분석해 보면 귀농·귀촌자 수와 순인구이동, 그리고 인구증가와는 상관관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귀농·귀촌가구가 많은 상위 3개 군과 전통적으로 귀농·귀촌이 활발한 지역으로 알려진 서귀포시, 봉화군, 부안군 등에서 전체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0>.

표 3-19. 귀농·귀촌가구가 많은 상위 15개 시군(2013년, 경기 제외) 순인구이동 및 인구증감(주민등록 기준)

단위: 가구, 명

	행정구역 (시군)	귀농귀촌 가구 수 (2013)	순인구이동			인구증감		
			2010	2012	2013	2010	2012	2013
1	홍천군(강원)	925	-210	10	1,097	287	-172	911
2	영동군(충북)	756	-80	331	170	97	42	-124
3	진천군(충북)	715	17	324	1,055	638	407	1,148
4	고창군(전북)	689	560	766	459	759	375	82
5	음성군(충북)	650	281	1,271	448	1,377	1,336	525
6	청원군(충북)	534	1,378	2,220	-626	3,161	-3,589	222
7	횡성군(강원)	449	-38	419	545	133	255	322
8	충주시(충북)	447	247	-27	-313	1,868	14	-332
9	보은군(충북)	447	-25	-18	176	111	-279	-120
10	완주군(전북)	414	340	1,328	669	1,234	1,504	814
11	강릉시(강원)	412	-1,217	12	-942	1,039	170	-935
12	평창군(강원)	405	-310	181	152	-12	50	39
13	영월군(강원)	398	-274	175	212	142	-44	-5
14	단양군(충북)	381	-251	-159	81	-25	-342	-82
15	함양군(경남)	368	410	-62	239	571	-367	-22

자료: 통계청 귀농·귀촌인 통계 자료, 인구이동통계 및 주민등록인구현황.

표 3-20. 귀농·귀촌가구가 많은 상위 15개 시군(2013년, 경기/충북/강원 제외) 순인구이동 및 인구증감(주민등록 기준)

단위: 가구, 명

	행정구역 (시군)	귀농귀촌 가구 수 (2013)	순인구이동			인구증감		
			2010	2012	2013	2010	2012	2013
1	고창군(전북)	689	560	766	459	759	375	82
2	완주군(전북)	414	340	1,328	669	1,234	1,504	814
3	함양군(경남)	368	410	-62	239	571	-367	-22
4	상주시(경북)	349	-967	-77	-282	-601	-503	-836
5	의성군(경북)	296	-499	-178	-356	-277	-701	-979
6	김제시(전북)	288	-1,121	-428	-729	-424	-794	-1,099
7	남원시(전북)	285	-367	-285	-350	100	-455	-540
8	창녕군(경남)	283	306	878	860	462	476	481
9	영주시(경북)	263	-90	-435	-649	617	-601	-922
10	서귀포시(제주)	258	-330	472	1,453	1,431	691	1,584
11	해남군(전남)	248	-1,808	-104	-408	-1,569	-196	-466
12	봉화군(경북)	241	18	-71	134	270	-258	-40
13	부안군(전북)	240	-376	83	672	-66	-211	295
14	하동군(경남)	240	-541	-2,849	-283	-501	-3,169	-629
15	김천시(경북)	234	-642	40	-647	218	-681	245

자료: 통계청 귀농·귀촌인 통계 자료, 인구이동통계 및 주민등록인구현황.

이상의 논의에 기초할 때 귀농·귀촌은 향촌이도 인구이동 현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며, 농촌의 인구감소 추세를 완화해 주고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자 수에서 2013년에 32.1%를 차지하는 50대에서 향촌이도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귀농·귀촌과 향촌이도 현상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귀농·귀촌 실태 조사

제4장

1. 조사 개요

전국 통계에서 드러나지 않는 귀농·귀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주요 목적은 귀농·귀촌 요인 및 농촌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설문조사는 지역조사와 온라인 조사로 나뉘어 이루어 졌다.

지역조사는 5개의 시군을 선정하여 각 지역별 20여 명씩 총 100여 명의 귀농·귀촌자와 각 지역별로 5명 내외의 이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5개의 시군은 귀농·귀촌이 많으면서 특징적인 귀농·귀촌 시책을 시행하거나, 기타 지역적 특성이 비교적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충남 서천, 전북 고창·순창, 전남 강진, 경북 상주 등이다<표 4-1>.

표 4-1. 설문조사 지역의 특징

지역	지역 특성	귀농·귀촌 성과	선정 주요 이유
서천	어메니티 자원 풍부 높은 지가 수도작 위주 특화작목미발달	생태적 귀농· 귀촌자 다수 (귀농 67, 귀촌 23)	귀촌자의 다양성 파악
고창	기후 양호, 풍광 수려 농지가 저렴, 풍부한 농지 재배품목 다양	2013년 전국 1위 귀농 지역 (귀농 376, 귀촌 495)	귀농·귀촌지역 선호 요인 파악
순창	농지 가격 저렴 과소지, 풍광 수려 귀농지원센터 설치(귀농운동본부 운영)	인구 비례 전북 1위 귀농·귀촌지역 (귀농 63, 귀촌 120)	과소지의 귀농·귀촌 실태 파악
강진	원격지 농촌 산과 해안 등 풍광 수려, 과소로 농지자원 풍부 농지가격 평당 4만 원	전국 최초 귀농·귀촌 조례 제정, 귀농자 비율 높음 (귀농 71, 귀촌 25)	원격지 농업지역 귀농 선호 파악
상주	전국 중간 지점, 풍광 수려, 농지 가격 상승, 농업 자원 풍부, 작목반활동 양호	2013년 전국 제2 귀농 지역 (귀농 184, 귀촌 165)	농업지역의 귀농·귀촌 실태 파악

주: ( ) 안의 숫자는 2013년도 귀농·귀촌 가구 수.

귀농·귀촌자 조사항목은 개인속성, 귀농·귀촌 동기 및 지역 선택 요인, 귀농·귀촌 비용 및 경제 상황, 지역에서의 사회적 활동, 애로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표 4-2>.

이장 조사는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귀농·귀촌자와 지역민과의 공동 활동, 귀농·귀촌자의 지역사회 기여 여부 등을 조사한다.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별도로 귀농·귀촌인 대상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일부 지역 조사가 가지는 한계와 샘플 수의 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표 4-2. 귀농·귀촌자 설문조사 내용

조사 항목	주요 내용	분석 방향
개인 속성	연령, 가족 수, 전거주지, 전직업, 귀농·귀촌시기	속성별 교차 분석
귀농·귀촌 동기 및 지역 선택	귀농·귀촌 동기(도시의 압출요인, 농촌의 흡입요인, 건강 등 기타 요인) 지역선택요인(지연, 농업여건, 자연환경, 지자체의 귀농·귀촌 시책, 지역민의 도움 등)	귀농·귀촌 요인 분석
귀농·귀촌 비용 및 경제 상황	귀농·귀촌 비용, 농지가격 변화 귀농지에서의 경제 활동 농업 확대 의향	귀농·귀촌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활동	지역사회에서의 각종 모임활동 지역민과의 공동체 활동	
애로 사항	귀농·귀촌 후 어려움 장래 불안 요소 역귀농·귀촌계획 등 지역의 귀농·귀촌전망	귀농·귀촌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귀농·귀촌의 지속 가능성 전망

2. 조사 결과

2.1. 응답자 개요

응답자의 특징은 다음의 <표 4-3>과 같다. 표에서 응답자의 연령은 50대가 46%이다. 이는 정부 통계에서 발표한 2013년 50대의 귀농·귀촌자(귀농자는 39.3%, 귀촌자 28.5%) 비율과 비교할 때 높은 수치이다. 반면에 30대는 4.6%로 정부 통계상의 귀농 11.5%, 귀촌 17.7%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이는 조사 대상 샘플 선정 및 온라인 응답 시 지역 활동이나 온라인을 통한 교류가 왕성한 50대가 선정되거나 응답할 비율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귀농·귀촌 전 거주지는 정부 통계에 비해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는 실제 귀농·귀촌자와 정부 통계상의 귀농·귀촌자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 통계는 동부에서 읍면부로의 이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귀농·귀촌자의 전 거주지가 인구 거주 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농촌에서 귀농·귀촌자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수도권에서 이주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4-3. 설문조사 응답자 일반 특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역조사	온라인조사
응답자수		266	96	170
성별 (결측값=2)	남성	221(83.7)	68(72.3)	153(90.0)
	여성	43(16.3)	26(27.7)	17(10.0)
연령 (결측값=3)	30대 이하	12 (4.6)	8 (8.8)	4 (2.3)
	40대	66(25.1)	34(37.4)	32(18.6)
	50대	121(46.0)	36(39.6)	85(49.4)
	60대 이상	64(24.3)	13(14.3)	51(29.6)
가족 수 (결측값=8)	1인가구	24 (9.3)	12(13.8)	12 (7.0)
	2인가구	89(34.5)	30(34.5)	59(34.5)
	3인가구	43(16.7)	13(14.9)	30(17.5)
	4인가구	76(29.4)	22(25.3)	54(31.6)
	5인 이상 가구	26(10.1)	10(11.4)	16 (9.4)
귀농·귀촌 연차 (결측값=1)	1년차	58(21.8)	25(26.6)	33(19.3)
	2년차	46(17.3)	16(17.0)	30(17.5)
	3년차	46(17.3)	12(12.8)	34(19.9)
	4~5년차	54(20.3)	21(22.3)	33(19.3)
	6년차 이상	61(23.3)	20(21.3)	41(24.0)
귀농·귀촌 전 거주지 (결측값=4)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80(68.7)	75(80.6)	105(62.1)
	광역시(인천 제외)	48(18.3)	8(8.6)	40(23.7)

2.2. 귀농·귀촌 동기

귀농·귀촌 동기에 대해서는 농촌이 좋아서(4.19), 도시생활이 싫어서(3.5), 영농을 위해(3.44), 건강을 위해서(3.42)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표 4-4>. 경제적인 어려움(2.56)이나 농업 외의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하여(2.55)는 상대적으로 중간 정도의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교육(1.77)이나 가정사(1.81) 때문이라는 응답은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표 4-4>.

표 4-4. 귀농·귀촌 실행 동기(지역별)

	전체	서천	고창	순창	강진	상주	온라인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2.56	2.29	2.74	1.84	2.17	2.27	2.71
영농을 위해	3.44	2.47	3.46	4.21	3.4	3.82	3.44
농업 외 경제활동 위해	2.55	3.29	2.76	2.42	2.72	2.36	2.45
도시생활이 싫어서	3.5	3.18	3.43	4	3.75	3.67	3.44
농촌이 좋아서	4.19	4.22	4	4.47	4.26	4.36	4.16
건강을 위해(쾌적한 환경, 먹거리 등)	3.42	3.35	3.26	4.06	3.29	3.75	3.37
자녀교육을 위해	1.77	1.44	2.09	2.24	1.76	3	1.61
가정사(결혼, 출산, 사별 등)	1.81	2.0	2	1.61	1.94	1.45	1.8

주: 각 항목의 값은 리커드 척도상의 수치임. 응답자는 1에서 5까지의 숫자를 기입하였으며, 1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경우, 5는 매우 중요한 동기였던 경우에 해당함.

연령별로 귀농·귀촌 실행 동기를 비교해 본 결과, 농촌이 좋아서, 도시생활이 싫어서, 영농을 위해서라는 응답의 순서에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단지 연령이 낮을수록 영농 동기가 크게 작용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인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5>.

표 4-5. 귀농·귀촌 실행 동기(연령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지역	온라인	전체	지역	온라인	전체	지역	온라인	전체	지역	온라인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1.73	1.63	2.0	2.07	1.84	2.3	2.71	2.71	2.72	2.93	2.67	3.0
영농을 위해서	3.82	4.0	3.33	3.52	3.61	3.44	3.41	3.17	3.52	3.34	3.5	3.3
농업 외 경제활동을 위해	2.55	2.63	2.33	2.59	2.8	2.38	2.59	2.79	2.5	2.41	2.42	2.41
도시생활이 싫어서	3.73	3.88	3.33	3.58	3.58	3.59	3.57	3.77	3.48	3.28	3.25	3.28
농촌이 좋아서	3.91	4.13	3.33	4.25	4.31	4.17	4.17	4.18	4.17	4.19	4.23	4.18
건강을 위해(쾌적한 환경, 먹거리 등)	3.17	3.38	2.75	3.43	3.65	3.17	3.4	3.47	3.37	3.49	3.25	3.55
자녀교육을 위해	2.4	2.43	2.33	2.46	2.5	2.41	1.59	1.85	1.47	1.23	1.18	1.24
가족사의 변화(결혼, 출산, 사별 등)	1.6	1.75	1.0	1.92	1.9	1.93	1.72	1.84	1.68	1.96	1.9	1.98

주: 각 항목의 값은 리커드 척도상의 수치임. 응답자는 1에서 5까지의 숫자를 기입하였으며, 1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경우, 5는 매우 중요한 동기였던 경우에 해당함.

귀농·귀촌 동기에서 도시 압출요인만을 별도로 살펴보면, 환경의 열악함(3.60), 교통 혼잡과 인구 밀집(3.54), 비싼 생활비(2.96), 소득 창출 기회의 부족(2.67), 인간관계(2.64), 교육환경의 열악(2.39) 순으로 그 중요도가 나타났다<표 4-6>. 비싼 생활비와 소득 창출 기회 부족이라는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환경이나 교통, 인구 밀집과 같은 물리적인 도시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연령별로는 60대와 30대 이하가 비싼 생활비에 반응하는 정도가 높았고, 50대와 60대가 경제적 어려움에 반응하는 정도가 높았다<표 4-6>.

표 4-6. 도시 압출요인(연령별)

	전체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지역	온라인	전체	지역	온라인	전체	지역	온라인	전체	지역	온라인
비싼 생활비	2.96	2.91	3.00	2.67	2.79	2.42	3.16	2.97	2.97	2.96	3.10	2.83	3.17
소득 창출 어려움	2.67	2.36	2.00	3.33	2.35	2.00	2.70	2.84	2.88	2.83	2.71	2.58	2.74
환경 열악	3.60	3.18	3.00	3.67	3.51	3.32	3.70	3.57	3.77	3.49	3.77	3.27	3.88
교통 혼잡 및 인구 밀집	3.54	3.55	3.50	3.67	3.47	3.50	3.43	3.65	3.97	3.53	3.35	3.00	3.44
교육환경 열악	2.39	3.18	3.25	3.00	2.77	2.65	2.90	2.39	2.79	2.23	1.75	1.67	1.77
인간관계	2.64	2.92	3.00	2.75	2.92	2.90	2.93	2.63	2.97	2.48	2.32	2.67	2.23

주: 각 항목의 값은 리커드 척도상의 수치임. 응답자는 1에서 5까지의 숫자를 기입하였으며, 1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경우, 5는 매우 중요한 동기였던 경우에 해당함.

2.3. 귀농·귀촌지 결정

귀농·귀촌지에 대한 연고 여부를 질문한 결과, 지역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귀농·귀촌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27.1%), 다음이 귀농·귀촌 준비 시점부터 알기 시작했다는 경우(25.2%), 고향 혹은 부모님 연고지(21.4%)라는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표 4-7>. 약 50% 이상의 귀농·귀촌자들은 사전 연고가 없이 귀농·귀촌지의 선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귀농·귀촌 형태가 U턴 보다는 I턴과 J턴 형태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고창, 강진의 경우 고향 혹은 부모님 거주지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서천의 경우 귀농·귀촌 준비 시점부터 알기 시작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표 4-7>. 고창과 강진은 전통적인 농업지역으로, 부모의 농업기반을 승계하기 위한 귀농·귀촌이 많았음을 유추할 수 있고, 서천군의 경우 '어메니티 서천'과 생태마을조성 등으로 유명해지면서 귀농·귀촌 예비자의 잦은 방문 경험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4-7. 귀농·귀촌지 연고 여부(지역별)

단위: 명, (%)

	전체	서천	고창	순창	강진	상주	온라인
고향 혹은 부모님 거주	56 (21.4)	2 (12.5)	12 (50.0)	2 (11.1)	6 (30.0)	2 (16.7)	32 (18.6)
친척 혹은 지인 거주지	33 (12.6)	1 (6.3)	3 12.5)	1 (5.6)	3 (15.0)	1 (8.3)	24 (14.0)
평소 잘 아는 지역	36 (13.7)	2 (12.5)	4 (16.7)	2 (11.1)	3 (15.0)	1 (8.3)	24 (14.0)
귀농·귀촌 준비 시점부터 알기 시작	66 (25.2)	9 (56.3)	1 (4.2)	7 38.9)	3 (15.0)	2 (16.7)	44 (25.6)
지역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귀농·귀촌	71 (27.1)	2 (12.5)	4 (16.7)	6 (33.3)	5 (25.0)	6 (50.0)	48 (27.9)

연령별로는 40대와 60대에서 고향이나 부모님 거주 지역에 귀농·귀촌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표 4-8>. 반면에 50대는 사전 연고가 없이 귀농·귀촌 준비 시점 혹은 귀농·귀촌에 즈음하여 알게 된 지역으로 귀농·귀촌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50대가 귀농·귀촌지 선택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유로운 입장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8. 귀농·귀촌지 연고 여부(연령별)

단위: 명, (%)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전체	지역	온라인	전체	지역	온라인	전체	지역	온라인
고향 혹은 부모님 거주	3 (25.0)	23 (34.8)	11 (32.4)	12 (37.5)	15 (12.5)	8 (22.9)	7 (8.2)	14 (23.0)	3 (30.0)	11 (21.6)
친척 혹은 지인 거주	2 (16.7)	4 (6.1)	1 (2.9)	3 (9.4)	18 (15.0)	3 (8.6)	15 (17.6)	9 (14.8)	3 (30.0)	6 (11.8)

귀농·귀촌지를 결정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선호하는 자연여건(3.91), 낮은 농지가격 및 농지 확보의 용이성(3.55), 농사기술 습득여건(2.88), 적절한 주거비 및 주거지 확보 여건(2.85), 지역민의 호의(2.79)' 순으로 나타났다<표 4-9>. 교육환경(1.83)이나 전 거주지와의 접근성(2.26)은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공공의 재정지원(2.54)과 재정외적 지원(2.65)은 지역민의 호의 보다는 낮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지 결정에서 자연환경과 농업여건, 주거지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공공의 지원은 중요한 요인이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조사나 온라인조사에서 큰 차이가 없다. 단지 순창의 경우 낮은 농지가격 및 농지 확보의 용이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서천과 순창에서는 지역민의 호의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고려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9>.

표 4-9. 귀농·귀촌지 결정 요인(지역별)

	전체	서천	고창	순창	강진	상주	온라인
낮은 농지가격 및 농지 확보 용이	3.55	3.53	3.05	3.59	3.94	3.10	3.59
농사기술 습득여건	2.88	2.38	3.18	3.18	3.59	3.09	2.76
일자리 찾기의 용이성	2.32	2.06	2.91	2.24	2.41	2.60	2.24
적절한 주거비 주거지 확보의 용이성	2.85	2.94	3.00	3.28	3.00	3.20	2.73
선호하는 자연 여건	3.91	4.00	3.87	3.56	4.15	3.90	3.92
양호한 서비스 여건	2.50	2.29	2.70	2.33	2.82	2.40	2.48
교육환경	1.83	2.17	2.09	2.29	1.83	2.50	1.74
전 거주지와의 접근성	2.26	2.38	1.82	1.65	2.06	2.00	2.41

귀농자(현재 농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귀촌자(현재 농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별 귀농·귀촌지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귀농인이 귀촌인보다 낮은 농지가격 및 농지 확보의 용이성과 농사기술 습득여건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귀촌인은 귀농인보다 적절한 주거비 및 주거지 확보의 용이성을 높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0>.

표 4-10. 귀농·귀촌지 결정 요인(귀농·귀촌인 구분별)

	전체	귀농인	귀촌인
낮은 농지가격 및 농지확보용이	3.55	3.54	3.49
농사기술 습득여건	2.88	2.96	2.56
일자리 찾기의 용이성	2.32	2.24	2.56
적절한 주거비 및 주거지 확보의 용이성	2.85	2.75	3.19
선호하는 자연 여건	3.91	3.85	4.07
양호한 서비스 여건	2.50	2.47	2.56
교육환경	1.83	1.85	1.76
전 거주지와의 접근성	2.26	2.27	2.19
지역민의 호의	2.79	2.80	2.75
공공의 재정 지원	2.54	2.53	2.57
공공의 재정외 분야 지원	2.65	2.63	2.67

주: 각 항목의 값은 리커드 척도상의 수치임. 응답자는 1에서 5까지의 숫자를 기입하였으며, 1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경우, 5는 매우 중요한 동기였던 경우에 해당함.

2.4. 귀농·귀촌자의 경제 활동

귀농·귀촌 초기 비용은 1억 6,61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역별로는 주거비용이 7,35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영농기반 조성비용 6,820만 원, 초기 생활비 1,830만 원, 기타 1,730만 원이다<표 4-11>.

귀농·귀촌 초기 비용은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조사 결과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어서 강진, 서천, 고창 순이다. 강진군의 경우 영농기반 조성비용이 높은 이유는 설문 대상자의 영농규모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주시가 가장 적게 나타난 것은 의외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상주시의 설문대상자가 비교적 젊고, 영농규모가 작은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천군의 경우 주거비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서천의 지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1. 귀농·귀촌 초기 비용

단위: 백만 원

		주거비용	영농기반 조성비용	생활비	기타	총액
지역별	전체	73.5	68.2	18.3	17.3	166.1
	서천	106.4	50.5	23.3	30	154.1
	고창	46.6	60.5	11.5	11	117.2
	순창	51	33.1	10.2	13.2	94.7
	강진	46.5	92	37.9	88.3	173
	상주	17.9	33.8	12.9	3.6	62.6
	온라인	81.1	67.4	18	15.5	175.4
연령별	30대 이하	26.4	30.2	6.5	2.4	73.3
	40대	51.3	56.6	19.7	18.5	135
	50대	73.6	73.2	21.3	18.4	172
	60대 이상	97.7	59	11.1	16	174

주: 각 지출 항목의 합은 총액과 일치하지 않음. 응답 수용 여부 판단 시, 각 항목의 합이 총액을 넘지 않으며 그 차이가 경미한 경우 초기 비용 산출에 포함하였음을 밝힘.

연령대가 높을수록 귀농·귀촌 비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거비용의 차이에 기인한다. 30대의 주거비용은 2,640만 원, 40대는 5,130만 원, 50대는 7,360만 원, 60대는 9,770만 원이다<표 4-11>. 특히 온라인 조사에서 60대 이상의 주거비용은 1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온라인 응답자가 지가가 비교적 높은 경기·강원을 포함한 전국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귀농·귀촌자의 경제활동을 살펴보면 전업농이 79명으로 29.9%, 겸업농이 124명으로 47%, 농업 외 경제활동 종사자가 26명으로 9.9%, 무직/기타가 35명으로 13.3%에 해당한다.[15]

경제활동 규모와 경제활동별 연 소득은 지역 조사에 한하여 진행되었다. 전업농의 평균 영농규모는 3,595평이고, 연간 농업 소득은 3,240만 원으로 나타났다<표 4-12>. 겸업농가의 경우, 영농규모는 2,152평이고, 연간 농업 소득은 1,260만 원이며, 농업 외 수익은 2,610만 원으로, 겸업농가의 총 소득은 전업농의 소득을 상회하고 있다.

농업 외 경제활동은 지역사회 활동가(귀농인 협의회, 강사 및 카페 운영, 농촌지역 활동가, 마을 사무장 등) 4명, 건축업 3명, 기타 서비스업(영양사, 재가방문) 2명, 장류 가공업 1명, 기타(직장생활, 일용직) 2명 등으로 이들의 평균 소득은 연 2,530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4-12. 귀농·귀촌자의 경제 활동 및 소득

	영농 규모(평)	연간 소득(백만 원)	
전업농(n=37)	3,595	32.4	
겸업(n=36)	2,152	12.6	38.7
	영농 외 활동	26.1	
농업 외 경제활동(n=12)		25.3	

영농활동을 하는 귀농·귀촌가구 전체의 평균 영농규모는 3,048평이며, 영농 소득은 연간 1,980만 원으로 나타났다<표 4-13>. 영농규모는 강진군이 4,856평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상주시의 3,383평이며, 서천군이 1,094평으로 가장 적다. 연간 영농소득은 상주시가 4,310만 원으로 가장 높으며, 강진군은 2,330만 원이고, 서천군이 680만 원으로 가장 낮다.

상주시가 강진군에 비해 영농규모가 적지만 영농소득이 높은 것은, 상주시의 귀농·귀촌자가 포도, 복숭아 등 과수재배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반면, 강진군에서는 벼와 밭작물 재배가 활발한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라 추측된다.

---

15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귀농자와 귀촌자의 비율 (2012년 41.5% : 58.4%, 2013년 33.7% : 66.3%)과 매우 상이한 것으로 통계에서 귀촌자로 분류된 사람가운데 상당수는 실제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표 4-13. 지역별 영농규모 및 영농소득

단위: 평, 백만 원

	영농규모	연 영농소득
전체(n=62)	3,048	19.8
서천(n=9)	1,094	6.8
고창(n=17)	2,797	11.6
순창(n=14)	2,396	14.4
강진(n=16)	4,856	23.3
상주(n=6)	3,383	43.1

향후 영농 규모 확대 의사를 질문한 결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가 50.7%로 전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37.3%였다. 지역별로는 강진, 순창, 온라인, 고창이 높았다. 현 상태 유지는 상주와 온라인, 서천이 높았다. 서천과 상주에서는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의사도 각기 18.8%, 12.5%에 달하고 있다.

표 4-14. 영농 규모 확대 의사(지역별)

단위: 명, (%)

	전체	서천	고창	순창	강진	상주	온라인
규모 확대	114 (50.7)	3 (18.8)	11 (50.0)	10 (52.6)	13 (65.0)	1 (12.5)	76 (54.3)
현상 유지	84 (37.3)	7 (43.8)	10 (12.5)	3 (15.8)	5 (15.0)	6 (75.0)	53 (37.9)
규모 축소	14 (6.2)	3 (18.8)	0 (0)	1 (5.3)	0 (0)	1 (12.5)	9 (6.4)
조만간 농업 중단	2 (0.9)	1 (6.3)	0 (0)	0 (0)	0 (0)	0 (0)	1 (0.7)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의 영농 규모 확대 의지가 가장 높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규모 확대 의지가 낮아지고 있다<표 4-15>.

표 4-15. 영농 규모 확대 의사(연령별)

단위: 명, (%)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전체	지역	온라인	전체	지역	온라인	전체	지역	온라인
규모 확대	7 (63.6)	33 (61.1)	17 (58.6)	16 (64.0)	58 (55.8)	16 (47.1)	42 (60.0)	16 (30.2)	1 (9.1)	15 (35.7)
현상 유지	0 (0)	15 (27.8)	8 (27.6)	7 (28.0)	37 (35.6)	13 (38.2)	24 (34.3)	31 (58.5)	9 (81.8)	22 (52.4)
규모 축소	1 (9.1)	2 (3.7)	1 (3.4)	1 (4.0)	3 (2.9)	0 (0)	3 (4.3)	6 (11.3)	1 (9.1)	5 (11.9)
조만간 농업 중단	0 (0)	1 (1.9)	0 (0)	1 (4.0)	1 (1.0)	1 (2.9)	0 (0)	0 (0)	0 (0)	0 (0)
기타	3 (27.3)	3 (5.6)	3 (10.3)	0 (0)	5 (4.8)	4 (11.8)	1 (1.4)	0 (0)	0 (0)	0 (0)

귀농·귀촌 연차별로는 2년 차에서 규모 확대 의지가 가장 높고, 연차가 높아질수록 확대 의지는 점차 줄어든다. 특히 4-5년 차와 6년 차 이상에서는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응답도 8.2%와 11.3%로 나타났다<표 4-16>.

표 4-16. 영농 규모 확대 의사(귀농·귀촌 연차별)

단위: 명, (%)

	1년차	2년차	3년차	4~5년차	6년차 이상
규모 확대	26 (56.5)	24 (64.9)	23 (57.5)	23 (46.9)	18 (34.0)
현상 유지	12 (26.1)	11 (29.7)	16 (40.0)	20 (40.8)	25 (47.2)

영농 규모별로는 1,000평에서 3,000평 미만의 귀농·귀촌가구에서 규모 확대 의사가 높았으며, 전업농과 겸업농 간 영농 규모 확대 의사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17>.

표 4-17. 영농 규모 확대 의사(영농규모 및 전업/겸업별)

단위: 명, (%)

	영농규모			전겸업	
	1,000평 미만	1,000~3,000평 미만	3,000평 이상	전업농	겸업농
규모 확대	8 (42.1)	18 (64.3)	11 (44.0)	43 (55.8)	64 (52.4)
현상 유지	11 (57.9)	7 (25.0)	12 (48.0)	32 (41.6)	48 (38.7)
규모 축소	0 (0)	2 (7.1)	2 (8.0)	2 (2.6)	10 (8.1)
조만간 농업 중단	0 (0)	1 (3.6)	0 (0)	0 (0)	1 (0.8)
기타	0 (0)	0 (0)	0 (0)	0 (0)	0 (0)

농업 규모 확대 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 판로 확대 어려움(11명), 비싼 농지 가격(9명), 비싼 농기계 가격(8명), 농지 확보의 어려움(8명), 영농기계 설치 부담(2명), 농업인력 부족(1명), 농업 기술 습득 어려움(1명) 등을 꼽았다.

2.5. 귀농·귀촌자의 사회 활동

설문에 응한 귀농·귀촌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정도는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마을회의 및 행사의 참여 정도가 높지만, 시군 단위 귀농귀촌협의회 활동이 활발한 서천, 고창, 상주의 경우 시군단위 귀농·귀촌인 모임의 참여 정도가 높다<표 4-18>. 강진의 경우 기타모임과 영농조합 등의 경제 모임의 참여 정도가 높다.

표 4-18. 귀농·귀촌자의 사회활동 참여도(지역별)

	전체	서천	고창	순창	강진	상주	온라인
마을회의 및 행사	3.48	3.88	2.86	3.58	3.86	3.33	3.47
경제모임(영농조합, 작목반, 협동조합 등)	2.99	3.43	2.77	2.78	3.83	2.82	2.92
귀농·귀촌인모임(시/군 단위)	2.95	4.19	4.05	3.72	3.55	3.33	2.50
귀농·귀촌인모임(읍/면/마을 단위)	2.76	3.93	3.43	3.19	3.82	2.83	2.40
귀농·귀촌인모임(전국 단위)	2.21	2.67	2.35	2.47	2.28	2.25	2.11
시/군 단위 지역주민 모임	3.01	3.64	3.09	3.47	3.24	3.00	2.87
기타모임(교육수료생 모임, 농민회, 농업대학원, 동호회 등)	3.07	4.17	3.67	4.20	5.00	1.67	2.93

주: 각 항목의 값은 리커드 척도상의 수치임. 응답자는 1에서 5까지의 숫자를 기입하였으며, 1은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경우, 5는 자주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함.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의 지역 사회활동 참여 정도가 낮은 가운데, 30대와 40대는 마을회의 및 행사나 교육수료생, 동호회 등이 포함된 기타 모임의 참여 정도가 높다<표 4-19>. 50대와 60대 이상의 귀농·귀촌인 모임 참여 정도가 많았는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지역 조사의 경우에 두드러진다. 상대적으로 온라인 조사 응답자의 귀농·귀촌인 모임 참여 정도는 낮았다.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전반적으로 마을주민들과 친하게 지내는 정도가 높은 가운데, 귀농·귀촌인 모임이 활발한 서천과 순창, 강진, 상주에서 귀농·귀촌인과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표 4-20>. 특이한 것은 귀농·귀촌자의 수가 많고 지역 사회에서의 영향력이 비교적 큰 고창에서 차후 지역리더가 되고자 하는 의향이 높았다.

전체로 지역주민의 텃세가 심한 편이라고 느끼는 정도와 마을 주민과의 거리를 두는 정도는 낮았지만, 온라인 조사에서는 지역조사보다 그 정도가 높다. 귀농·귀촌협의회 등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는 지역에서 지역주민과의 관계도 좋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표 4-19. 귀농·귀촌자의 사회활동 참여도(연령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지역	온라인	전체	지역	온라인	전체	지역	온라인	전체	지역	온라인
마을회의 및 행사	2.92	2.88	3.00	3.52	3.52	3.52	3.40	3.46	3.38	3.64	3.70	3.63
경제모임(영농조합, 작목반, 협동조합 등)	2.50	2.38	2.75	3.03	3.13	2.93	2.86	3.00	2.81	3.24	4.00	3.10
귀농·귀촌인 모임(시/군 단위)	2.45	2.71	2.00	3.05	3.67	2.37	3.03	4.03	2.60	2.77	4.20	2.48
귀농·귀촌인 모임(읍/면/마을 단위)	2.45	2.71	2.00	2.74	3.19	2.27	2.83	3.61	2.51	2.67	4.44	2.33
귀농·귀촌인 모임(전국 단위)	1.64	1.71	1.50	2.25	2.37	2.13	2.21	2.61	2.03	2.34	2.78	2.26
시/군 단위 지역주민 모임	2.80	2.83	2.75	3.23	3.38	3.07	2.94	3.19	2.84	2.92	3.50	2.80
기타모임(교육수료생 모임, 농민회, 농업대학원, 동호회 등)	3.20	4.50	2.33	3.39	3.75	3.23	3.01	3.50	2.96	2.86	4.25	2.73

주: 각 항목의 값은 리커드 척도상의 수치임. 응답자는 1에서 5까지의 숫자를 기입하였으며, 1은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경우, 5는 자주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함.

표 4-20. 주민과의 관계(지역별)

	전체	서천	고창	순창	강진	상주	온라인
귀농귀촌인과 친하게 지냄	3.69	4.33	3.70	4.32	4.00	3.83	3.51
마을주민들과 친하게 지냄	3.88	4.00	3.91	4.16	4.00	3.83	3.82
가능한 마을주민과 거리를 둠	2.03	2.00	1.76	1.78	1.58	2.08	2.14
지역주민 텃세가 심한 편임	2.77	2.29	2.38	2.42	2.00	2.18	3.03
차후 지역리더가 되고자 희망함	2.85	2.65	3.05	2.67	2.95	2.27	2.89

2.6. 귀농·귀촌의 애로 사항 및 향후 전망

귀농·귀촌자의 애로사항을 경제적인 측면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수입의 감소가 가장 힘들다고 응답한 경우가 28.7%로 가장 많았다<표 4-21>. 이어 생활의 불편(18.2%), 문화/여가 생활 미흡(15.4%), 기존 주민과 삶의 방식 차이(11.7%), 장래에 대한 불안(9.1%), 주거 여건 열악(7.3%)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수입의 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는 낮아지고 있다<표 4-21>.

표 4-21. 생활하면서 힘든 부분(연령별)

항목	전체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수입의 감소	142 (28.7)	9 (39.1)	39 (32.2)	65 (28.3)	29 (24.6)
생활의 불편(식품/생필품 구매 어려움 및 의료서비스 열악)	90 (18.2)	1 (4.3)	16 (13.2)	40 (17.4)	26 (22.0)
문화/여가 생활 미흡	76 (15.4)	2 (8.7)	13 (10.7)	32 (13.9)	25 (21.2)
텃세 등 기존 주민과 삶의 방식 차이	58 (11.7)	1 (4.3)	18 (14.9)	34 (14.8)	15 (12.7)
장래에 대한 불안	45 (9.1)	5 (21.7)	10 (8.3)	20 (8.7)	10 (8.5)
주거 여건 열악	36 (7.3)	3 (13.0)	8 (6.6)	18 (7.8)	7 (5.9)
가족 등 도시에서의 삶의 방식과의 단절	20 (4.0)	0 (0)	4 (3.3)	11 (4.8)	5 (4.2)
자녀 교육 어려움	17	1	11	4	0

기타 애로 및 건의 사항은 다음의 <표 4-22>와 같다. 이들 건의는 주로 온라인 조사 응답자로부터 나온 것으로 지역조사 응답자와는 다른 귀농·귀촌자의 고충을 짐작케 한다.

표 4-22. 애로 및 건의 사항

	애로 및 건의 사항
경제활동	-노동력 확보, 직거래(판로) 지원, 실질적 체험 필요 -젊은 사람이 살기에 농업 이외의 일자리 및 교통, 의료서비스 부족 -지가상승, 지역주민과 불화,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귀농·귀촌에 반대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림 지역이라 하더라도 제조업이 허가를 하여 2차 생산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 -안정적인 소득작물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교육시스템 유지 -개인의 재능과 전 직장 전문분야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 -귀촌인은 밭이나 논이 300평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불합리 -유휴지를 사고자 하나 소유권이 복잡하여 살 수 없음
지역활동	-지역주민 텃새에 대한 지자체의 개선 노력 필요 -지자체 공무원의 귀농·귀촌자에 대한 협조 부족 -농업기술센터 이외에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없음 -주위 환경은 좋으나 병의원 이용 문화적인 이용 등 불편 -지역에 전담하여 도와줄 멘토 등이 필요 -지역정보와 귀촌지 주민들과 원만한 화합을 지원하는 체계 부족 -현 주민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교육 등 필요 -현재 지자체에서 귀농·귀촌인을 끌어들여 주민 수를 늘리는 데 급급함 -지자체에서 지속가능한 귀농·귀촌인 간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노력 필요
정책건의	-귀농정착 자금의 무이자 전환 및 50%는 보조 전환 -생각보다 많은 혜택이 있지만 받기가 쉽지 않음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에 도움이 되는 기관이 없음 -주택마련과 관련한 현실적인 지원 또는 도움 -이장이나 또래 등 지역주민과의 멘토 연결/인큐베이팅 지원자 위주의 체험 교육이 많이 필요 -거주할 빈집 등을 모니터링해서 귀농, 귀촌 상담 시 바로 연결해 줄 수 있도록 네트워크 형성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절실 -교육기관은 많으나 꼭 필요한 교육이 아쉬움

현 거주지에서의 귀농·귀촌 인구 전망에 대해서는, 60.5%가 향후 현 거주지의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았으며, 33.1%가 현상 유지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 4-23>. 하지만 지역조사와 온라인 조사 결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조사는 강진 71.4%에서부터 상주 91.7%까지 귀농·귀촌자의 증가를 전망하고 있지만, 온라인 조사에서는 48.2%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조사에서 귀농·귀촌자가 감소할 것이다는 응답도 8.8%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온라인조사의 응답자가 귀농·귀촌자가 많아 지역에서의 수용 떨어진 경기도 강원도를 포함하여 전국에 골고루 분포하는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표 4-23. 현 거주지의 귀농·귀촌 인구 전망(지역별)

단위: 명, (%)

	전체	서천	고창	순창	강진	상주	온라인
증가	159 (60.5)	15 (83.3)	19 (82.6)	17 (89.5)	15 (71.4)	11 (91.7)	82 (48.2)
현상 유지	87 (33.1)	3 (16.7)	4 (17.4)	2 (10.5)	6 (28.6)	1 (8.3)	71 (41.8)
감소	15 (5.7)	0 (0)	0 (0)	0 (0)	0 (0)	0 (0)	15 (8.8)
기타	2 (0.8)	0 (0)	0 (0)	0 (0)	0 (0)	0 (0)	2 (1.2)
합계	263 (100.0)	18 (100.0)	23 (100.0)	19 (100.0)	21 (100.0)	12 (100.0)	170 (100.0)

3. 귀농·귀촌 실태 종합

앞에서 귀농·귀촌통계조사 분석 결과와 귀농·귀촌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정성적으로 파악한 실태 등에 기초하여 귀농·귀촌의 실태를 다음과 같이 종합하여 정리한다.

3.1. 귀농·귀촌 현상 확대

전국 통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귀농·귀촌은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인구 이동은 향도이촌에서 향촌이도 현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귀농·귀촌 현상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귀농·귀촌자의 연령층이 확대되고 있다. 여전히 50대가 귀농·귀촌의 중심이지만 40대와 30대 귀농·귀촌자도 적지 않다. 특히 농업여건이 좋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30대와 40대의 전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표 4-24>는 일부 지역의 연령별 귀농·귀촌자를 세대별로 살펴본 것이다. 표에서 전라북도와 강진군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40대 이하 인구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24. 사례 지역의 연령별 귀농·귀촌 현황

단위: 가구, %

구 분	세대수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70대 이상
전라북도 2013년	2,993	598	763	901	530	201
비율	100	20	25.5	30.1	17.7	6.7
강진군 2014년	87	15	25	24	15	8
비율	100	17.2	28.7	27.6	17.2	9.2
상주시 2013년	500	70	118	179	98	35
비율	100	14.0	23.6	35.8	19.6	7.0
제주도2014년6기 귀농귀촌교육이수자	297	66	108	88	32	3
비율	100	22.2	36.4	29.6	10.8	1.0
전국 2013년도	32424	5060	7258	10420	6735	2951
비율	100	15.6	22.4	32.1	20.7	9.2

자료: 통계청 귀농·귀촌인 통계 및 각 지자체 내부자료.

3.2. U턴 보다는 I·J턴 귀농·귀촌

귀농·귀촌자들은, 고향이나 부모님이 사는 곳으로 귀농·귀촌하는 소위 U턴보다는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귀농·귀촌하는 소위 J·I턴 귀농·귀촌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귀농·귀촌자가 많은 50대에서 귀농·귀촌지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귀농·귀촌이 부모의 영농기반과 주거 기반을 물려받은 경우보다는 자연환경, 농업여건, 주거여건이 좋은 곳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J·I턴 귀농·귀촌은 농업 기반이 어느 정도 요구되는 평야지 농촌지역보다는 과수 특작이 강한 중산간지 농업지역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평야지 농업지역은 부모의 농업기반을 승계하는 승계형 귀농·귀촌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유추할 수 있다.

3.3. 소규모 영농과 다양한 경제활동

통계청의 통계에서 나타나는 귀농·귀촌자 경제활동과는 달리 설문조사에서는 귀농·귀촌자중에서 90% 이상은 경제활동에 종사하며 특히 77% 이상은 농업 관련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에 의지하면서 은퇴 후의 조용한 노후를 즐기기 위한 이른바 순수 귀촌자의 비율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귀농· 귀촌자의 농업 여건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 표는 전체 농가와 귀농 농가의 경지면적과 평균연령을 비교한 것이다. <표 4-25>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가구원수는 전체 농가가 2.53명인데 비해 귀농 농가는 1.75명으로 더 적으며, 경지면적의 경우 전체 농가가 평균 1.50ha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귀농 농가는 0.5ha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전체 농업인은 65.4세인데 비해 귀농인 평균 연령은 52.8세로 젊은 편이다.

표 4-25. 귀농 농가와 전체 농가의 농업환경 비교

	전체 농가 (2012)	귀농 농가		
		2011	2012	2013
가구원수(명)	2.53	1.73	1.75	1.72
경지면적(ha)	1.50	-	0.50	0.46
평균연령(세)	65.4	52.4	52.8	53.1

자료: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및 귀농귀촌인 통계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농업소득만 가지고는 생활비 충당이 어려운 귀농·귀촌가구가 많기 때문에 귀농·귀촌가구는 기존 주민에 비해 다양한 경제활동을 수행한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농업 외 경제활동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4-26>과 같다.

표 4-26. 귀농·귀촌자의 농업 외 경제 활동(지역조사)

지역	농업 외 경제 활동
서천	사무직, 바리스타강사, 조경기능사, 영양사, 재가방문요양, 장류가공업, 농가맛집, 온라인판매
고창	건축업, 인터넷쇼핑몰, 유통업, 프리랜서, 세탁업, 전기업, 시간제 판매직, 자영업
순창	유통업, 사무장, 친환경학교급식, 일용직
강진	건축업, 천연염색, 원예, 음식점
상주	건축업, 카페운영, 강사, 농촌지역 활동가, 장류가공업, 사무장, 목공강사

3.4. 귀농·귀촌가구의 소득 편차

귀농·귀촌자 설문조사에서는 농업과 농업외 활동을 겸하는 겸업농의 소득이 평균 3,870만원으로 높고, 전업농의 경우 평균 3,240만원, 농업외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는 평균 2,530만원으로 나타났지만 소득 편차는 이 들의 다양한 삶의 형태 만큼이나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표 4-27>은 상주시 산간지역의 귀농·귀촌자 4가구에 대한 소득과 지출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표 4-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귀농 이후 약 5,000평의 농지도 장만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는 귀농가구가 있는가 하면, 반면 독신이면서 자연인 가까운 삶을 영위하는 귀농자도 존재한다.

귀농·귀촌자들의 경우, 전체적으로 귀농·귀촌지에서의 소득보다는 지출이 많은 경우가 많다. 지출은 세대별로 다양한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차량유지비와 통신비의 지출이 높은 편이다. 소득이 적은 귀농·귀촌자들의 난방비의 경우, 화목보일러 설치를 통해 지출 규모 중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한다.

표 4-27. 귀농·귀촌 4가구 수입 지출 비교(1년 기준)

가구구분			A (4인 가족)	B (4인 가족)	C (4인 가족)	D (독신)
가구특성			40대 중반 4인 가족 귀농 15년차	30대 중반 4인 가족 귀농 4년차	40대 초 4인 가족 귀농 4년차	40대 초반 독신 귀농 8년차
수입	총액		5,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구조		논 1,400평 포도 3,000평 복숭아 600평	논 2,000평 밭 1,500평 하우스(토마토) 3동	논 1,000평 밭 1,000평 버섯직거래, 비누가공	야생차 재배
지출	기본지출	총지출	1,000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차량유지비	400~4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트럭+경차	더블캠트럭	트럭+경차	대중교통
		통신비	150만원	92만원	76만원	20만원
			휴대폰, 유선, 인터넷	휴대폰, 유선, 인터넷	휴대폰, 유선, 인터넷	공중전화
		전기	50~70만 원	40만 원	24만 원	X
			가정용태양광발전	가정용	가정용	전기 안 씀
		난방비	연 35만 원	연 67만 원	X	X
			화목보일러 태양열온수	연탄 1500장	화목보일러	화목보일러
		보험연금	100만원	100만원	48만원	X
		기타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80만원
	기타생활비		1,000만원	700만원	200만원	100만원
	농업경영비		1,500만원	500만원	200만원	
	농업재투자		1,000만원	500만원		

3.5. 원격지로의 귀농·귀촌 확대

귀농·귀촌자들이 귀농·귀촌지역을 결정할 때는 지리 요인과 농업 요인, 지자체의 노력과 귀농·귀촌 비용에 영향을 받는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은 여전히 귀농·귀촌지를 결정할 때 중요 요인이다. 하지만 귀농·귀촌 수요 증대에 따른 지가 상승 및 가용 용지의 제한 등으로 그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가와 공급 가능 농지, 판로 등의 농업여건은 귀농·귀촌지를 결정짓는 또 다른 중요 요인이다. 고창과 상주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귀농·귀촌지로 자리 잡은 것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동일한 조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농업 요건이 좋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전남의 신안군, 해남군, 고흥군 등에 귀농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의 지가가 저렴하며, 농지가 풍부하고, 다양한 작목 재배가 가능하다는 농업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귀농·귀촌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귀농·귀촌 선호지역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확대될 것임을 시사한다.

3.6. 지자체의 귀농·귀촌 노력의 효과와 한계

공공 지원이 귀농·귀촌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귀농·귀촌 설문조사에서는 공공의 재정 및 재정 외 지원은 선호하는 자연 여건, 낮은 농지가격 및 농지확보의 용이성, 농사기술 습득여건, 적절한 주거비 및 주거지 확보 여건, 지역민의 호의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표 4-9>. 오히려 많은 온라인 응답자 들은 지자체 공무원의 귀농·귀촌자에 대한 협조 부족과 귀농·귀촌인 간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는 지자체가 귀농·귀촌인을 끌어들여 주민 수를 늘리는 데 급급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귀농·귀촌담당 공무원들의 미숙과 귀농·귀촌협의회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귀농·귀촌이 활발한 지역은 지자체의 귀농·귀촌 노력이 활발한 지역이다. 지자체의 노력은 시장이나 군수의 의지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고창군과 상주시의 전임 지자체장은 귀농·귀촌을 지자체 정책의 제1순위로 설정할 만큼 귀농·귀촌에 대한 의지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귀농·귀촌만을 전담하는 행정조직의 설치나 전담자 지정 여부가 귀농·귀촌에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기초 지자체에는 귀농·귀촌 지원조직이 있지만, 1-2명의 담당자가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귀농·귀촌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귀농·귀촌이 활발한 고창군과 상주시, 서귀포시의 경우 귀농·귀촌만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에서 2-3명의 인원이 귀농·귀촌을 담당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특별한 정책이 귀농·귀농을 촉진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고창군 둥지 사업의 경우, 일부 이주 예정자는 매달 10만원의 월세로 2~3년간 임시거처에서 머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주 실패의 부담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농촌생활을 경험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귀농·귀촌이 이루어진다.

제5장 귀농·귀촌 요인과 영향

1. 귀농·귀촌 요인

여기에서는 제2장에서 검토한 이론 및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설정한 관점에 기초하여 귀농·귀촌요인을 살펴본다. 제2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귀농·귀촌요인을 구조요인, 도시의 압출요인과 농촌의 흡입요인, 정책요인, 개인의사결정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1. 구조요인

1.1.1. 경제 상황

구조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요인이다. 경제요인은 도시에서의 직접적인 소득 감소와 고용 기회 상실 및 장래의 경제적 불안 등을 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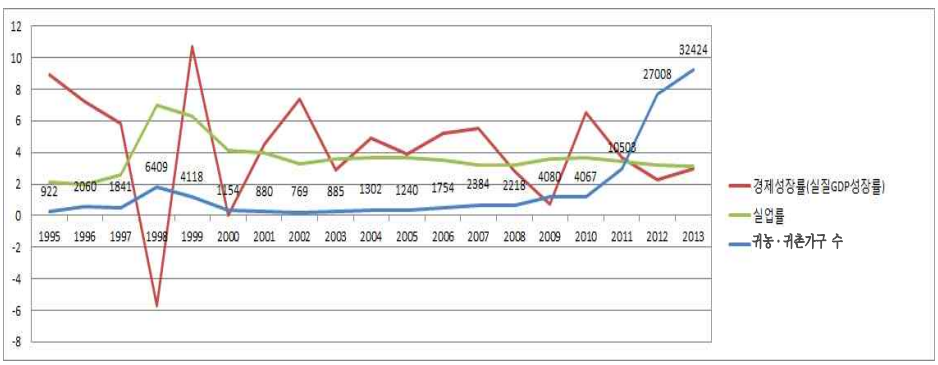
경제요인과 귀농·귀촌과의 관계는 다음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 <그림 5-1>은 귀농·귀촌자 수와 경제성장률, 그리고 실업률을 비교한 표이다.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귀농·귀촌자 수는 경제성장률에 어느 정도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극명한 것은 IMF 경제 위기 시 경제성장률이 -6.9%로 하락할 때 귀농 인구는 6,409명으로 증가하였다가 1999

년과 2000년에 경제성장률이 8%대로 회복됨에 따라 귀농가구 수는 2001년에 880가구로 감소하였다.

2000년대 초에 경제성장률이 회복되었다가 2006년 5.2%를 전환점으로 경제성장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그에 반비례하여 귀농·귀촌가구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률이 2010년에는 6.3%, 2011년 3.7%, 2012년에는 2.3%, 2013년 2.8%로 낮아지고 있는데, 그에 반비례하여 귀농·귀촌가구 수는 조금씩 증가하다다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진 2012년에 귀농·귀촌가구 수는 전년대비 157% 상승하여 27,008가구를 기록하고 있다<그림 5-1>. 귀농·귀촌자 수는 다른 요인에도 영향을 받겠지만 경제상황과 관련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실업률의 경우 IMF 경제 위기 시 실업률 상승과 귀농·귀촌가구와의 역비례관계가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안정되어 있음을 볼 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다<그림 5-1>.

그림 5-1. 귀농·귀촌자 수와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



귀농·귀촌이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행한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귀농·귀촌 요인 관련 선행 설문 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귀농·귀촌 동기 질문에 대한 응답자 중 가장 큰 비율이 경제적인 이유를 귀농·귀촌 이유로 꼽고 있다.

1.1.2. 인구 구조

귀농·귀촌자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 5-1>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자 수와 귀농·귀촌자 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귀농·귀촌가구는 2010년 4,067가구에서 2011년부터 10,503가구, 2012년에는 27,008가구, 2013년에는 32,424가구에 달하고 있다.

2010년은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시점으로, 2011년부터 그 중 약 9,000명은 재취업을 하지 않고 실직자로 남을 것으로 예측되었다(정호성 외 2010). 베이비부머의 취업자 감소분은 매년 급속도로 증대하여 2012년에는 18,000명, 2013년에는 40,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정호성 외 2010). 이러한 수치를 50대 귀농·귀촌자 가구와 대비하면 2011년부터 귀농·귀촌자 수가 급증한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표 5-1>.

표 5-1. 귀농·귀촌자가구 수와 베이비부머의 취업자 감소

년도	귀농·귀촌 가구 (50대 귀농·귀촌 가구)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 감소분	비고
2010	4,067(1,854)	-	베이비부머 정년연령 도달
2011	10,503(3,764)	9,000명	추정치
2012	27,008(8,299)	18,000명	추정치
2013	32,424(10,420)	40,000명	추정치

주 : 2010년에 1955년생이 기업의 일반적 정년연령인 만 55세에 도달

자료 : 귀농·귀촌 가구는 통계청 발표 자료. 단 2010년과 2011년에는 귀농자와 귀촌자를 구분하지 않음.
베이비부머취업자 감소분은 정호성 외(2010) 추정.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가 은퇴연령에 진입한 이후 일자리를 잃을 확률은 55세, 60세, 65세의 경우 각각 6.6%, 13.9%, 25.3%로 예상하여 추정.

베이비부머가 귀농·귀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은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김창현 외(2011)의 연구에 의하면 베이비부머는 50% 이상이 농촌을 고향으로 하고 있지만 평균 3억 안팎의 부동산 자산과

200만 원에 못 미치는 예상 연금 수준, 그리고 은퇴 후에도 상당수준의 소득창출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표 5-2>. 이들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한 농촌이주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다. 조사에 의하면 66.3%가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하고 싶으며 그 중에서 85.8%가 향후 10년 이내에 농촌으로 이주하고 싶다고 응답한다(김창현 외 2011).

표 5-2. 베이비부머의 특징과 귀농·귀촌

항목	특징
대상	1963-1955년 출생. 712만 5,347명. 전체 국민의 14.6%를 차지 전체의 82.8%가 도시 거주. 본격적인 은퇴기에 직면
경제적 특징	평균자산: 3억 3,775만 원(부동산 76.3%, 금융자산 15.9%) 월평균 생활비: 283만 7,000원 은퇴 후 필요최소자금: 3억 6,000만 원 예상연금소득: 200만 원 미만 공적연금 미가입: 35.8%
노후 준비	은퇴시점: 62.3세, 은퇴생활비 : 211만 원 은퇴 후 생활비 충당계획: 무계획 9.0. 상당히 미흡 41.9, 아직 시작 못함 16.9%, 차질없이 준비 14.2, 다소 차질 11.3. 문제없음 6.7 은퇴준비 미흡 이유: 자녀교육 61, 은퇴준비부족 45.2, 내집마련 34.8, 투자실패 33.5. 은퇴 후 걱정거리 : 경제 64.3, 건강 13.9, 스트레스 10, 시간활용 7.4 55~64세 인구에서 향후 취업 희망자: 72.2%, 주된 취업이유 생활비에 보태기 위함
귀농귀촌	막연한 농촌이주 희망: 66.3% 실제 이주 결행자 소수: 도시의 부동산 처분, 가계부채, 가족반대, 변화에 대한 두려움

한편 청년층의 귀농·귀촌 현상도 인구 구조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청년층의 귀농·귀촌은 이른바 에코 세대의 인구 구조와 그들의 행태와 관련된다. 에코세대는 1979년부터 1992년 출생자로 베이비부머가 낳은 자녀로

정의한다(통계청 2012). 이들은 전체 인구에서 19.9%를 차지한다<표 5-3>.

이들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기 원하는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다른 세대에 비해 강하다. 이들을 둘러싼 사회 구조는 청년실업이란 용어로 대표되는 고용기회의 감소와 도시 생활비의 증가이다. 이들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농촌에서의 사회적 일자리에 취업하는 귀촌 형태이거나, 가업승계형 귀농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20대와 30대의 귀농·귀촌은 2009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수행 외(2012)는 그 요인으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도시 일자리 감소, 흡입 요인으로는 억대 부농 사례의 등장, 스마트농업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재조명 등을 꼽고 있다.

표 5-3. 에코세대의 특징과 귀농·귀촌

항목	특징
대상	1979~1992년 출생자로 베이비붐 세대의 여성이 낳은 자녀 954만 명. 전체인구의 19.9%
특징	높은 교육수준: 대학교(4년제)이상 비율 48.9%(베이비붐 세대의 2.4배). 일자리 미스 매치의 요인으로 작용 대부분 임금근로자로(전체의 89.9%)로 전문직 및 사무직 종사자 수 많음(54.1%) 도시에서의 취업과 주거마련 어려움: 청년실업률 8-9%, 42.5%가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 자유로운 삶의 방식 선호
귀농귀촌	귀농보다는 귀촌 선택,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도움 가업 승계형 귀농자 증가

자료: 통계청(2012) 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1.2. 도시의 압출요인

귀농·귀촌은 도시의 압출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도시의 압출요인을 보다 세분화하면 도시형 일자리의 감소, 비싼 주거비 및 생활비, 긴 통근시간,

잦은 야근과 과도한 업무, 경쟁적인 일상생활, 심신의 피로, 피상적인 대인관계, 은퇴 후 도시에서의 무료한 삶 등이다. 도시의 압출요인은 구조 요인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일부는 중첩되어 나타난다.

사례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 압출요인 가운데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교통 혼잡이나 밀집 등 열악한 도시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과도한 생활비 및 거주비, 피상적인 인간관계 등으로 나타났다.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도시의 압출요인 가운데 소득의 감소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귀농·귀촌자와의 심층인터뷰 등에서 나타나는 귀농·귀촌 요인을 통해 소득과 생활비 등 경제적인 측면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2011)의 사회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도시거주의 경우 평균 238만 원이 소요되는 반면 농어촌거주자는 188만 원으로 농촌에서의 생활비가 도시에서의 생활비보다 27%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연령대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은퇴 후 거주지역과 개인의 생활패턴에 따라 농촌의 생활비는 최대 40% 가량 줄일 수 있다(공도윤 2014). 사례조사에서 도시의 압출요인은 농촌의 흡입요인보다는 그 중요성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1.3. 농촌의 흡입요인

귀농·귀촌은 농촌의 흡입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농촌의 흡입요인은 생태가치에서 비롯되는 요인과 경제적인 요인으로 구별된다. 생태가치 요인에는 안전 먹거리의 자가 생산, 생태적인 삶의 추구, 건강, 수려한 풍광 등이 해당된다. 경제적 요인에는 농업의 가능성, 농업 관련 사업 기회 증대, 사회적 일자리 기회 증대, 저렴한 생활비 등이 해당된다.

앞 장에서 살펴본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귀농·귀촌 동기에 대해 물은 결과 농촌이 좋아서 이주했다는 경우가 도시 생활이 싫어서 이주했다는 경

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영농을 위해, 건강을 위해서라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농촌의 흡입요인이 도시의 압출요인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수행되었던 많은 귀농·귀촌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와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부표 참조).[16] 하지만 이 연구에서 행한 조사 및 선행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농촌의 흡입요인 가운데는 도시의 압출요인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구조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4장의 실태조사에서는 농촌생활이 좋아서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50대, 60대 이후의 응답자가 더 많으며 이들은 또한 경제생활이 어려워서라는 응답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은 편이다. 정년 및 조기 은퇴, 불황으로 인한 도시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등이 혼합되어 농촌이 좋아서라는 응답으로 표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제4장에서 살펴본 실태조사에서는 귀농·귀촌자의 86.8%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7%가 영농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 판로 확대, 비싼 농지 및 농기계 가격 등을 들고 있다. 이들은 생태적인 관점에서 농촌에서 산다기보다는 매우 현실적이며 경제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판단된다.

농촌의 흡입요인은 귀농·귀촌 자체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써 어디로 귀농·귀촌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귀농·귀촌지를 결정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선호하는 자연 여건이 5점 척도에서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귀농인(3.85)보다는 귀촌인(4.07)에게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6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문조사를 통해 비슷한 형태로 귀농·귀촌요인을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홍성권(2013)은 괴산군 귀농·귀촌인 1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귀농·귀촌요인으로 농촌생활이 좋아서(38.9%), 도시생활 불편(12.1%), 추구하는 가치를 좇아(12.1%), 은퇴 후 여가생활(9.3%), 도시보다 적은 지출(6.2%), 자신/가족건강(5.6%), 기타(15.8%)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1.4. 정책요인

귀농·귀촌은 정책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정책요인에는 중앙정부의 정책,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관련 단체의 홍보, 그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 등이 해당된다.

정책요인은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하지만, 어떤 개인이 귀농·귀촌을 결정하는 데는 제한적인 영향을 발휘한다. 다만 정책요인 중에서도 지자체의 노력은 귀농·귀촌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것도 다른 요인에 비해 그 영향력이 낮다.

제4장의 귀농·귀촌자 설문조사에서 귀농·귀촌지를 결정하는 요인 중 공공의 재정 지원과 재정 외적인 지원은 중하위 정도로 고려 정도가 더 낮았다. 재정 외적인 지원보다는 재정 지원에 대한 고려의 정도가 더 낮았다. 특히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소리가 높았다. 이는 귀농·귀촌 결정 시 정부의 정책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니며 그 효과도 높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귀농·귀촌이 활발한 지역은 귀농귀촌지원센터나 귀농귀촌협의회와 같이 행정 및 민간 차원의 귀농·귀촌 지원 조직이 발달한 지역이다. 지원조직을 통해 지역의 귀농·귀촌 정보가 체계적으로 홍보가 되고, 조직을 통해서 선배 귀농·귀촌인이 후배 귀농·귀촌인을 유치하는 선순환구조가 작동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고창은 군청에 민간 귀농·귀촌협의회를 지원하는 귀농귀촌 T/F팀이 있으며, 별도로 민간 조직인 귀농귀촌협의회가 있다. 귀농귀촌협의회 내에서 각 읍면별 14개 지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협의회 내에서 작목반 교육과 동시에 작목별 멘토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예비자에게 매달 10만 원의 월세로 2~3년간 임시거처에서 머물 수 있는 둥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귀농·귀촌 정책 관련 노력이 보다 세밀해지고 구체적일 때 귀농·귀촌자의 유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5. 개인의사 결정요인

개인의사 결정요인은 귀농·귀촌자 개인의 속성과 관련되는 것이다. 귀농·귀촌자들은 외부 여건을 자신의 개인 속성에 비추어 판단하고 귀농·귀촌을 결정한다. 개인의사 결정요인은 크게 개인의 행태와 연령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행태요인은 개인의 성장 배경, 삶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연령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성장기를 농촌에서 보낸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 귀농·귀촌에 대한 태도(긍정적 혹은 부정적)가 달라질 수 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정신적인 여유로움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귀농·귀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생태적인 삶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자녀교육을 위해서 귀농·귀촌하는 경우도 있다.

연령요인은 귀농·귀촌이 연령에 따라 달리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귀농·귀촌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조건이 같다 해도 30대의 청년층과 60대의 노년층의 반응이 다르다.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령대에 따라 귀농과 귀촌 형태 및 선호하는 지역이 다르다. 예를 들면, 60대 이후의 은퇴 고령층은 도시의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 자연 환경이 좋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농촌지역을 선호한다. 반면 40대 이하의 젊은 귀농·귀촌인은 귀농·귀촌 비용이 적으면서 농업여건이 좋은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2. 귀농·귀촌이 농촌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서는 제2장에서 검토한 이론 및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설정한 관점에 기초하여 귀농·귀촌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 분석한 귀농·귀촌과 농촌의 인구변화 요약과 함께 지역농업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2.1. 농촌의 인구 변화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귀농·귀촌은 농촌 인구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변화는 인구수와 인구구조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귀농·귀촌이 많은 상위 시군은 수도권의 외연적 확장에 영향을 받은 경기, 충북, 강원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전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기, 충북, 강원을 제외한 지역에서 귀농·귀촌가구가 많은 상위 15개 시군과 귀농·귀촌지역의 인구 증대와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귀촌가구가 많은 상위 지역의 사회적 인구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상위 2개 군인 고창과 완주에서는 지역의 전체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귀농·귀촌은 지역의 인구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자의 평균 연령은 53세로, 과소 농촌지역의 평균 연령보다 낮다. 제3장에서 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젊은 귀농·귀촌자들이 농촌마을에 유입됨으로써 마을에 활기가 돌고 고령 마을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2.2. 지역농업의 변화

귀농·귀촌자는 지역농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귀농·귀촌자가 지역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농업 구성원의 변화, 지역농업 혁신 역량 강화, 농업자원 가치 변화 등이 있다.

2.2.1. 지역농업 구성원 변화

국회 예산 정책처의 추계에 의하면 전체 농업인구 가운데 귀농·귀촌자의 비율이 2000년 1.4%에서 2010년 3.2%, 2013년 9.0%[17](국회예산정책처 2014)로 점차 증가함에 따라 지역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창군과 같이 귀농·귀촌가구가 많은 지역에서 전체 가구 중 귀농·귀촌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9.7%이다<표 5-4>. 전체 농가에서 귀농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9%로 더 높다.

표 5-4. 고창군 귀농·귀촌가구와 전체 가구 비교(2013년)

구 분	가구수	40대 이하 비율(50대 이하)
전체 가구	28,412(100.0%)	48.7(65.1)
귀농·귀촌가구 ('07-'13)	2,743(9.7%)	56.4(81.9)
전체 농가수	9,688(100.0%)	34.5(52.6)
귀농 가구수 ('07-'13)	1,633(16.9 %)	

자료: 고창군 내부 자료(2014), 고창군 통계연보(2013), 안행부 주민등록인구현황.

17 2011년부터 귀농·귀촌인 통계가 발표되고 있으나 귀농·귀촌가구의 정착률이나 소득 증감 등에 대한 통계는 작성되고 있지 않다.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는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가 귀농한 세대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역귀농 세대는 2008년 귀농귀촌인의 6.5%, 2009년 5.4%) 자료를 바탕으로 역귀농·귀촌(탈농업탈농촌) 비율을 6%로 산정하여 누적 귀농·귀촌가구 수를 추계하였다. 그 결과 2013년 누적 귀농·귀촌가구는 10만 2,943가구로 전체 농가구 수의 약 9%를 차지한다고 추정하였다.

귀농·귀촌은 농업인구 고령화를 완화시킨다.[18] 기존 농가의 평균연령은 65.4세인 데 비해 귀농 농가는 53.1세로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다. 특히 농업이 발달한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젊은 귀농·귀촌인이 많아서 농업경영자의 평균 연령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표 5-4>에서 고창 전체 가구 중 4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48.7%이고, 농업인 가운데 40대 이하가 34.5%인 데 반해, 귀농·귀촌자의 40대 이하는 56.4%에 달한다.

귀농·귀촌인이 규모화된 전업농으로 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편이다. 소수의 귀농자를 제외하고 귀농자 대부분의 농지규모는 소규모(2012, 2013년 귀농자 중 1.0ha 이상 영농규모는 10% 미만)이다. 호남평야처럼 대규모 논농사 지역은 농지 및 기계 구입 등 초기 비용 대비 소득이 높지 않아 귀농하기가 쉽지 않고, 귀농하였다 해도 규모화된 전업농으로 성장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귀농인이 쌀 전업농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노동력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과수·특작 지대에서는 귀농자가 지역농업의 후계인력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 5-5>는 상주시 귀농·귀촌인의 거주지를 일반농촌지역과 산간지역으로 분류한 것이다. 전체 가구 수에서 귀농·귀촌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농촌지역에서 2.4%인 데 반해 중산간지역은 7.9%로 귀농·귀촌자들이 일반농촌지역보다 중산간지역에 많이 몰리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중산간지역의 귀농·귀촌자들은 일반 농촌지역에 비해 과수 재배 비율이 높으며 40대 이하의 연령층이 높다. 일반 농촌지역에 부모의 농업기반을 물려받는 승계농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젊은 귀농·귀촌자들은 적은 비용으로 단기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중산간지대의 과수 특작지대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18 노재선 외(2013)의 귀농 인구 유입에 따른 농업인구 고령화 변화를 예측하였다. 노재선의 연구에서는 3년간(2010~2012) 지역 간 인구이동 방향과 2012년 귀농·귀촌데이터를 기준한 것으로 예측 결과의 신뢰성은 높지 않지만 귀농·귀촌으로 6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의 비율이 지금보다 낮아진다고 예측하였다.

수 있다. 40대 이하의 귀농·귀촌인 가운데 정착에 성공한 사람들은 농업 후계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5-5. 상주시 지역별 귀농·귀촌인 특징(2012~2013년)

구 분	전체가구	귀농귀촌 가구(%)*	주요 작목 및 분야	연령대 비율
일반 농촌 지역	18,762	457 (2.4%)	경종(35.9%) 기타(38.8%)** 과수(17.5%)	40대 이하: 37.2% 50~60대: 56.7% 70대 이상: 6.1%
산간 지역	5,811	458 (7.9%)	기타(45.7%) 과수(42.7%) 경종(10.5%)	40대 이하: 45.5% 50~60대: 46.8% 70대 이상: 7.9%

주 1) 상주시 귀농·귀촌 담당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산간지로 구분한 모동면, 모서면, 화동면, 화서면, 화북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일반 농촌 지역(동 지역 제외)으로 분류.
2) 귀농귀촌가구(%)는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3) 기타는 작목재배를 하지 않은 귀촌자가 주로 해당.
자료: 상주시 내부 자료(2014).

2.2.2. 지역농업 역량 강화

귀농·귀촌자는 지역농업의 새로운 리더이자 변화를 이끌어 갈 세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농업 지대, 재배 작목, 기존 지역농업 주체 세력의 역량 등에 따라 지역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젊은 귀농·귀촌자들은 기존의 농가 경영주보다 새로운 농법을 시도하는 데 거부감이 덜 하며 도시에서의 경험을 살린 마케팅 노력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편이다. 이들은 지역 내 귀농·귀촌인 모임 등을 통해 활발한 네트워킹 활동을 전개하고 농업기술교육에도 열심히 참가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상주시의 중화지역에는 젊은 귀농·귀촌자로 구성된 유기농 공부방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임이 전국 각지에서 이뤄지고 있다.

상주시 중화지역 유기농 공부방
-상주시 서북지역으로 포도 주산지인 모동면, 모서면, 화서면, 화동면 거주 15가구 귀농인으로 구성
-2014년 봄에 시작하여 월 2회 모임 활동. 모임에는 영농기술(주로 유기농포도재배), 생활정보, 기타 귀농·귀촌과 관련된 정보 교류 및 친목 활동이 이뤄짐
-회원들의 연령은 30대에서 60대(평균 40대 중반). 귀농·귀촌 연 수 도 1년 미만에서 10년 이상. 영농규모는 300평 미만에서 4,000평까지 다양
-시군단위 기술센터에서 영농기술교육을 받고 그 과정에서 귀농·귀촌자들 간의 교류활동이 있지만, 실제 영농과 생활 현장에 유익한 정보들은 면단위 소그룹 모임을 통해 교류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결성
-귀농·귀촌자들의 관심사항이 점차 전문화됨에 따라 귀농·귀촌자라는 공통사항만 가지고는 모임이 오래 지속될 수 없음
-흑돼지 사육 공부방과 주택건축공부방을 결성할 예정

<표 5-6>은 5개 지역 대상 설문조사 결과, 귀농·귀촌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임과 참여 횟수를 보여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귀농·귀촌인의 29.0%는 작목반 모임을, 27.9%는 귀농·귀촌인의 모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자주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의 모임에서 영농기술 교육 및 정보 교류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귀농·귀촌자들 가운데 과반수 이상은 활발하게 영농 목적의 교류활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귀농·귀촌자들이 지역농업의 리더와 혁신의 창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표 5-6.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 모임

연령대	귀농 귀촌인 모임	청년회 등 지역모임	작목반 등 경제모임	문화(노래, 시 등)	기타(교회, 친구, 등)	전체
응답자 전체	50 (27.9)	35 (19.6)	52 (29.1)	13 (7.3)	29 (16.2)	179 (100.0)
30대	2	3	2	0	2	9
40대	13	12	10	5	11	51
50대	23	11	25	7	12	78
60대 이상	10	9	15	1	4	39
월 평균 참여횟수	1.43	1.37	1.33	2.16	1.72	1.48

주: 응답자 전체 수와 각 연령대별 응답자 수의 합의 차이는 연령을 응답하지 않은 2명의 사례로 인해서이다.
자료: 자체 설문조사.

귀농·귀촌인 가운데 농업의 6차 산업화의 추진 주체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다. 3장에서 살펴보았지만 농업 생산에만 의지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귀농·귀촌가구에게는 기존 농가보다 농업의 6차 산업화의 필요성이 높다. 이들은 도시와의 네트워킹과 마케팅 능력을 바탕으로 농업 농촌의 6차 산업화 추진 주체로 등장한다. 특히 농촌관광 분야에 리더로 활동하는 상당수는 귀농·귀촌자라 할 수 있다.

귀농·귀촌자의 6차 산업화는 농지 가격 등의 이유로 귀농·귀촌인의 영농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활발하게 진행된다. 예를 들어, 서천군 귀농귀촌협의회에 등록된 400여 명의 귀농·귀촌자 중 대규모로 논농사와 과수재배를 하는 10여 가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6차 산업화 내지는 비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표 5-7>.

표 5-7. 귀농·귀촌자 종사 분야(서천군)

농업 관련 활동	기타 활동
논농사/밭농사/과수원운영/장류제조/화훼/조경수/가족농원/주말농장/매실제조/한산모시가공/천연비누효소제조/소곡주제조/모시송편/토마토시설하우스재배/한우사육/포도농장/토종닭염소사육/곤충영농/복숭아재배/산야초효소단식원운영/민박/농가맛집	목공/흙집교육/방앗간운영/자활센터교육/생활목공/생태해설사/귀농홍보/도자기제조/생태건축/생태안내사/카페운영/마을사무장/단식원운영/사회적기업/서툰농부들협동조합/목수인테리어/화가/잡목제거지원/만화가/물듬이공예/집수리설비/식당/아이돌보미

2.2.3. 농지가격 상승

농지가격 상승이 반드시 귀농·귀촌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귀농·귀촌자에 의한 농지수요는 농지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5-8>은 사례 지역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귀농·귀촌 당시와 현재의 농지가격 비교이다.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3-5년 전과 비교해서 농지가격은 적게는 30% 많게는 150% 상승하였다.

표 5-8. 귀농·귀촌 당시와 현재의 농지 가격 비교

단위: 원

지역	비교시점	2014년	비고
서천(n=10)	6만 8천	9만 9천	설문조사 평균치
고창(n=14)	3만 7천	5만 1천	
순창(n=12)	4만 5천	5만 1천	
강진(n=13)	2만 8천	3만 7천	

농지가격 상승은 경제 기반이 열악한 귀농 희망자들에게 귀농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영천시와 같이 농지 가격이 평당 20만 원 이상으로 상승한 지역에서는 귀농·귀촌 현상이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19]

또한 농지 가격 상승은 귀농·귀촌자의 농지규모 확대를 어렵게 한다.[20] 상주에서 10년 전에 귀농한 P씨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 2003년 전에 귀농한 상주의 P씨의 말에 의하면, 귀농 당시 포도밭을 평당 2만-3만 원에 구입하였지만 지금은 평당 8만-9만 원 정도에 거래된다. 10년 전에는 젊은 귀농자에게 고령의 마을 주민이 위탁 영농을 의뢰하거나 농지 구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농지가격도 비교적 낮아서 본인이 열심히만 하면 10년 후에는 마을의 많은 농지를 위탁받거나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귀농·귀촌자가 증가하고 농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지가격도 상승하여 기대했던 만큼의 영농규모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농지 가격 상승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전남 남부지역에서 귀농자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수도권 농촌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투자의 한 형태로 귀농·귀촌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

19 영천시 귀농·귀촌 담당자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2014년의 귀농·귀촌자 수는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는 농지가격 상승에 일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한다.

20 설문에서 응답자의 37%는 장래 영농규모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2.3. 지역경제 변화

2.3.1. 지역경제 활성화

제4장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귀농·귀촌 비용은 초기 생활비를 포함해서 평균 1억 6,61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통계청 조사를 분석해 귀농의 실제 초기 투자비는 농지구입 6,602만 원, 주택구입 4,071만 원, 시설·농기계구입 4,130만 원, 기타사업 1,970만 원으로 최소 1억 6,233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공도윤 2014).

최근에는 농지가격과 건축비용 상승으로 귀농·귀촌하기 위해서는 약 2억-3억 원 정도의 초기 자본이 필요(이는 귀농·귀촌자 개개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큼)하다는 견해도 있다.

귀농·귀촌자들의 초기에 지출하는 비용의 일부는 도시로 유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지역 내에서 순환됨으로써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된다. 특히 귀농·귀촌자의 주택신축은 지역의 건설경기와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귀농·귀촌자들은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에도 기여한다. 농촌의 일손 부족은 귀농·귀촌자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한다. 농업 경영자와 귀농·귀촌인 간 상생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귀농·귀촌자들은 문화소비에 대한 욕구가 기존 주민보다 높은 편이다. 이들은 기존 주민에 비해 보다 활발한 교류 활동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의 소비 행위는 지역의 서비스산업이나 상업을 촉진한다.

보통 귀농·귀촌자가 몰리는 지역은 귀농·귀촌 상담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또한 이들 지역은 귀농·귀촌을 위한 도시민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귀농·귀촌 희망자와 예비 귀농·귀촌자들의 지역 방문은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된다.

종합적으로, 귀농·귀촌은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김경덕 외(2012)의

연구에 의하면 귀농·귀촌인 1인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지역총생산액을 2,194만 원, 지역임금소득을 258만 원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한다.

2.3.2. 지방재정 기여

귀농·귀촌자의 유입은 지방교부세의 증액과 지방세 증대로 인해 지방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인구가 가장 중요한 측정항목이기 때문이다.

<표 5-9>에서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14개 측정 항목 중, (공무원) 인건비와 기초생활비, 장애인 복지비를 제외한 11개 항목에서 인구통계 또는 인구관련 통계(농업인 수, 사업체종사자 수)와 인구수에 영향을 받는 통계(자동차대수)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표 5-9. 인구 통계에 기초한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항목	측정 항목
일반행정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안전관리비**
문화환경비	**문화관광비, 환경보호비, 보건비**
사회복지비	기초생활비, 노인복지비(고령자 수), *영유아·청소년 복지비,(영유아·청소년 수),* 장애인 복지비, **일반사회복지비**
경제개발비	농림수산비(농업인 수), 지역경제비(사업체종사자 수), *도로개량비·도로교통비(자동차대수),* **지역개발비**

주: 볼드체는 직접 관련, 이탤릭체는 간접 관련.
자료: 행정자치부 2013년도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

2.4. 지역 사회의 변화

2.4.1. 혼주화의 촉진

귀농·귀촌은 농촌사회를 혼주화된 열린 사회로 바꾸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거주와 그들이 행하는 다양한 경제활동, 이로 인한 활기찬 지역 사회 분위기는 농촌 사회를 보다 유연한 열린 사회로 변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인의 사회적 특성은 매우 다르다. 또한 귀농·귀촌인들 내에서도 귀농·귀촌 동기, 목적, 농촌에서의 생활 등에서 하나로 묶을 수 없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한정된 공간 내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농촌사회가 빨리 변해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철규 외(2011)의 연구에서 유형 분류한 '대안가치 추구형'의 귀농·귀촌자들처럼 생태적 삶, 농촌발전,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사람들의 농촌 유입은 농촌사회를 성숙한 시민사회로 탈바꿈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아직 일부 지역에 한정되지만 귀농·귀촌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 지역사회에서의 귀농·귀촌자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21] 지역의 여론 형성과 지역 정치에서 귀농·귀촌자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

21 고창군의 경우 귀농·귀촌회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는 군청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각종 사회단체에 일원이 되었으며 협의회장은 농업인회의소 이사가 된다.

2.4.2.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귀농·귀촌인의 농촌 마을 유입은 정적이고 폐쇄적인 농촌마을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 귀농·귀촌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과 기획력, 마케팅 능력을 활용하여 마을 사업에 참여하고 리더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기존 마을 공동체의 작동원리는 보다 기능적이고 목적 지향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행정 보조자로서 마을 이장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귀농·귀촌자들이 마을 이장을 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창군의 경우 약 500여 명의 마을 이장 가운데 60여 명이 귀농·귀촌자로 구성되고 있다. 이들은 토박이 이장보다 젊고 고학력자인 경우가 많다.

귀농·귀촌인이 마을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마을 조직을 체계화시킨 마을도 대두하고 있다.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마을은 전통적인 조직형태의 마을회를 조합방식으로 바꾸어 귀농·귀촌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운영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마을회 사례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는 3개의 행정리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회가 조직되어 있다. 마을회는 일종의 조합으로 마을회에 가입한 주민들은 구좌(1구좌 10,000원)를 소유한다. 구좌는 상속(자녀 중 1인)이 가능하며, 마을회에서 탈퇴 시 구좌에 해당하는 자본 평가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마을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마을회원의 2/3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가입 당시 산정한 마을회 자본 평가액의 회원 지분에 해당하는 가입비(구좌로 계산)를 납부하여야 한다(2014년 8월 현재 마을회는 10억여 원의 자본 보유). 마을회에 가입하면 영농조합법인의 회원이 되며 영농조합법인명의로 추진하는 마을 단위 공동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마을회의 가입은 마을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고령 등의 이유로 마을사업의 참여가 어렵거나 마을에 비거주자, 주민과의 사이가 좋지 않은 귀농·귀촌인은 마을회 가입이 어렵다. 2014년 8월 현재 마을회의 회원은 96명(처음에는 120명으로 시작. 사망, 이사, 고령 등으로 점차 줄어듦)이며 이중 60명 정도가 마을 토박이이고 나머지는 귀농·귀촌자로 구성된다. 조합 방식의 마을회의 존재로 귀농·귀촌자가 마을 공동체에 편입되기가 용이하다.

2.4.3. 내생적 지역 발전 주체 가능성

농촌에는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 등 귀농·귀촌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혹은 그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활동 조직이 탄생하고 있다. 이들 조직을 통해서 귀농·귀촌자와 기존 주민과의 협업이 강화되고 있다.

지역발전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귀농·귀촌인이 가지는 기획력, 정보화 능력, 조직력, 외부와의 교류 능력은 지방 행정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마을 사업과 같은 지역단위 공동사업 추진의 파트너로서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귀농·귀촌인의 전문성과 혁신에 바탕을 둔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결합하여 농촌형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일자리 같은 대안경제의 실험이 가능하다(이해진·김철규 2013). 또한 귀농·귀촌인이 복지, 교육, 문화, 건강 분야의 사회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주체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성주인 외 2012).

2.4.4.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변화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귀농·귀촌자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는 5개 지역의 마을 이장 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귀농·귀촌자와 마을 주민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이들이 잘 어울리는 편이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많이 도와준다고 응답하고 있다. 귀농·귀촌자들이 마을 주민에 비해 젊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고령화된 마을 주민들이 귀농·귀촌자들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농·귀촌자로 인해 마을이 어떻게 달라졌느냐에 대한 질문에 많은 응답자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옴으로써 마을에 활력에 생기고 일손부족 문제를 완화해 주었다고 대답하고 있다.

귀농·귀촌자가 마을 이장 등 향후 마을 중심 세력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응답자는 마을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귀농·귀촌자에 대한 마을 주민의 인식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귀농·귀촌자의 정착에 대해서 일부 응답자는 잠시 살다가 여건이 맞지 않으면 쉽게 떠날 수도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표 5-10>.

표 5-10. 마을 이장의 귀농·귀촌인에 대한 인식

인식	주민과의 어울림	좋은 점(복수)	나쁜 점
-긍정적(10) -중립적(1) -부정적(2)	-잘 어울림(8) -보통 어울림(3) -어울리지 못함(2)	-고령화개선을 통한 활기 증가(8) -인구 증가(4) -일손부족해소 등 주민필요 충족(3)	-잘 화합하지 못하여 생기는 갈등(4)

주: ( )는 응답자 수. 총 13명의 이장이 응답.

온라인 조사 응답자 중 일부는 기존 마을 주민이 텃세를 부린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들의 거주지는 주로 경기, 강원, 충북 등으로 지가가 비교적 높은 지역이다. 귀농·귀촌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보다 비싼 가격으로 토지를 구입한 경우다. 귀농·귀촌 후 토지이용 등을 둘러싸고 지역민과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결론 및 정책 방향

제6장

1. 결론

1.1. 연구 결과

이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의 요인을 분석하고 귀농·귀촌이 농촌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택한 귀농·귀촌자 개개인의 행태적 관점보다는 귀농·귀촌의 사회적 현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이 농촌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귀농·귀촌 관련 이론으로 인구 이동 요인과 역도시화의 개념, 선진국 도시민의 농촌지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귀농·귀촌 용어를 통합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귀농·귀촌이었으며 요인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분석틀을 정리하였다.

귀농·귀촌 통계자료를 통해 귀농·귀촌의 전국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세대별 자료 분석을 통해 도시 농촌 간의 인구 이동실태를 살펴보고 귀농·귀촌과의 연관성을 파악하였다. 통계 분석에서 나타나지 않은 귀농·귀촌 실태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귀농·귀촌 현상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점

차 젊은 층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귀농·귀촌이 향도이촌형 인구이동에서 향촌이도형 인구이동으로 바뀌는데 영향을 미치며 농촌의 인구 구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귀농·귀촌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선호하는 귀농·귀촌 지역이 농지가격이 저렴한 원격지로 확대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귀농·귀촌 요인으로 구조 요인, 도시의 압출요인, 농촌의 흡입요인, 정책요인과 이들 요인에 반응하는 개인의 행태요인을 설정하였다. 먼저, 귀농·귀촌은 구조요인인 경제 상황과 인구 구조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귀농·귀촌자 수와 경제성장률, 실업률을 비교한 결과 귀농·귀촌자 수는 경제성장률과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가구는 2011년부터 1만 가구 이상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 연령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청년층의 귀농·귀촌 현상도 에코 세대의 인구 구조와 삶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귀농·귀촌은 도시의 압출요인보다는 농촌의 흡입요인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이는 도시의 압출요인 가운데 경제적인 상황이 구조요인에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농촌의 흡입요인은 귀농·귀촌 자체를 결정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어디로 귀농·귀촌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정책요인은 귀농·귀촌 자체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어디로 귀농·귀촌할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 요인과 흡입요인, 압출요인, 정책 요인은 귀농·귀촌자 개개인의 행태에 따라 달리 반응한다. 최근에는 경쟁이 덜한 곳에서 생태적인 삶을 영위하겠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이것이 귀농·귀촌자 수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이 농촌의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귀농·귀촌자의 농촌 유입과 그들이 지역에서 행하는 지역농업 활동, 농업 외 경제활동, 사회 활동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인구 변화, 지역 농업 변화, 지역 경제 변화, 지역사회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행한 2013년까지의 동부(도시)와 읍면부(농촌) 간 인구이동 분석 결과에서 귀농·귀촌은 농촌의 인구감소 추세를 완화해 주고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귀농·귀촌자는 지역농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은 농업인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노동력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작목에서는 지역 농업의 후계자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귀농·귀촌자들의 역량과 농촌에서의 활동은 지역농업의 새로운 리더이자 변화를 이끌어 갈 세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귀농·귀촌자에 의한 농지수요는 농지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농지가격 상승은 경제 기반이 열악한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귀농·귀촌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며 상대적으로 농지가격이 저렴한 원격지로 귀농·귀촌 현상이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귀농·귀촌 초기 비용은 1억 6,61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지출하는 돈은 대부분 지역 내에 순환됨으로써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다. 귀농·귀촌자의 유입은 지방교부세의 증액과 지방세 증대를 통해 지방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귀농·귀촌은 농촌사회를 혼주화된 열린 사회로 바꾸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 한정되지만 귀농·귀촌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 지역사회에서의 귀농·귀촌자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지역의 여론 형성과 지역 정치에서 귀농·귀촌자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귀농·귀촌인이 농촌 마을에 유입됨으로써 정적이고 폐쇄적인 농촌마을 공동체의 변화를 촉진한다. 행정 보조자로서 마을 이장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귀농·귀촌자들이 마을 이장을 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귀농·귀촌인이 마을 공동체 구성원이 되어 마을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마을공동조직이 조합 조직으로 바뀌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인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귀농·귀촌자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귀농·귀촌자들이 마을 주민에 비해 젊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고령화된 마을 주민들이

귀농·귀촌자들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장 조사에서 대체적으로 귀농·귀촌인들이 마을에 활력을 가져오고 마을 주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장래 귀농·귀촌인이 마을의 지도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장도 많았다.

1.2. 예상되는 과제

이 연구의 결론에 즈음하여 먼저 귀농·귀촌 현상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예상해 보고 그에 따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예상은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농촌의 수용력)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기관이 발표한 한국경제전망은 공통적으로 성장률의 둔화를 전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2031년경 한국의 잠재 성장률 전망치는 1%에 불과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5년까지 3%대를 유지하다가 그 후 2%대로 하락하며 2040년부터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왔던 노동과 자본투입량의 감소에 기인한다. 한편 민간소비지출도 추세적으로 하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2).

한진희 등은 한국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06~2010년 기간 중 연평균 4.6%에서 2021~2030년 2.7%, 2041~2050년 1.4%로 장기적으로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한진희 외 2007).

귀농·귀촌이 경제성장률과는 반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귀농·귀촌 수요가 여전히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특히 민간소비 지출의 감소는 귀농·귀촌자의 약 절반을 구성하는 자영업자의 귀농·귀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여지가 높다.

50대의 귀농·귀촌 수요는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높은 상관관계에 있다. 베이비부머는 우리 사회의 취업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높은 고용률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2011년부터 베이비부머의 은퇴 시기가 도래하고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이들의 실직 확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표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63만 명 정도 취업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정호성 외 2010).

표 6-1. 베이비부머 취업자 감소 전망

단위: 만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상취업자 수	382	380	376	370	363	355	345	335	324	313
취업자 감소분	0.9	1.8	4.0	5.7	7.1	8.3	9.3	10.2	10.9	11.5

자료 : 정호성 외(2010).

특히 베이비부머는 이전 세대에 비해 전체 취업자의 23.4%인 170만 명(2013년 기준)이 상용근로자로서, 베이비부머가 60세에 도달하는 2015년부터 상용근로자 비율이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다(정호성 외 2010). 베이비부머의 노후 준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베이비부머는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다. 직장에서 퇴직한 베이비부머 모두가 귀농·귀촌하지는 않겠지만, 귀농·귀촌에 대한 잠재 수요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포스트 붐 세대(1964-1978년생)와 에코세대에서도 귀농·귀촌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트 붐 세대들은 IMF 경제위기를 경험한 자로서 직장에서의 조기 은퇴에 대한 불안감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아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다. 청년실업문제로 대표되는 에코세대의 경제 여건 역시 귀농·귀촌 수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통계청 2012).

귀농·귀촌 수요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은 귀농·귀촌자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기존 귀농·귀촌자들의 60%는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서 귀농·귀촌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귀농·귀촌 수요 증대가 예견되는 상황과 달리 농촌의 귀농·귀촌 수용력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귀농·귀촌자가 증가함

에 따라 농촌의 지가 상승과 주거 마련 비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제4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지역에서는 지가 상승이 귀농·귀촌의 제약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귀농·귀촌 초기 비용으로는 1억 6,61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귀농·귀촌 연차에 따라 귀농·귀촌 비용이 점차 상승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귀농·귀촌 비용 상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귀농·귀촌의 수용력은 농업의 장래 전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젊은 층 귀농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구조요인과 도시의 압출요인 외에 농업 및 농촌에서의 경제 활동 기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과 농촌경제활동에 대한 장기전망은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자세하게 논할 수는 없지만, 체감에 바탕을 둔 귀농·귀촌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농업 소득에 의존하는 귀농·귀촌가구의 수입구조는 점차 악화되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이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한정된 농업자원을 다수의 귀농·귀촌자가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한국 사회의 거시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귀농·귀촌 수요는 증가하겠지만, 농촌 사정으로 인한 귀농·귀촌 비용의 증가와 농업의 장래 불확실성은 귀농·귀촌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귀농·귀촌의 정책 방향이 귀농·귀촌의 촉진보다는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쪽으로 바뀌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 정책 방향

지금까지의 귀농·귀촌 정책은 귀농·귀촌인 유치를 촉진하는 쪽에 두어졌다고 할 수 있다. <표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귀농·귀촌자 교육,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귀농·귀촌 창업박람회, 귀농인 농업창업 보육센터,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등의 사업은 귀농·귀촌을 촉진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귀농·귀촌한 사람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은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농식품부), 선도농가 실습지원(농진청), 농산업 인턴지원(고용부)

사업 등이 있다. 농식품부의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농업이차보전사업으로 사업 내용만을 보면 귀농·귀촌자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귀농·귀촌인의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는 선도농가 실습지원과 농산업 인턴지원 사업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표 6-2. 귀농·귀촌 정책 현황

구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	주요 내용
농업이차보전사업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농식품부)	600억 원	700억 원	○최대 2.4억 원 융자 지원(농업기반 2억 원, 주택구입·신축 4천만 원) -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사업	귀농귀촌 교육 (농식품부)	21.1억 원 -2,000명	24.5억 원 -2,350명	○현장 실습 및 맞춤형 귀농교육운영 - 1주~3개월 과정 - 교육비 70~80% 국고지원
	도시민농촌유치 지원 (농식품부)	35.8억 원 -35개 시군	40.9억 원 -40개 시군	○지자체의 도시민 농촌유치활동 프로그램 지원 - 시군당 3년간 6억 지원 (국고 50%, 지자체 50%) ○사업 평가, 홍보 등
	귀농귀촌창업 박람회 (농식품부)	5억 원	4억 원	○귀농귀촌 종합정보 제공 및 체험의 장 마련
	귀농인 농업 창업 보육센터 (농식품부)		10억 원 -1개소	○귀농인을 위한 임시주거, 창업인큐베이팅 (국고 50%, 지자체 50%)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 (농식품부)	80억 원 -2개 시군	80억 원 -2개 시군	○(예비)귀농인의성공적인 농업 창업 지원을 위한 One-stop 지원센터 (국고 50%, 지자체 50%)
귀농귀촌정착지원사업	선도농가 실습 지원(농진청)		16.8억 원 -104개 시군 -560명	○선도농업인 농장에서 영농기술 습득 - 실습지원 5개월 이내(120만 원 지급, 국고 50% 지자체 50%) - 5년 이내 귀농인(신규농업인)

귀농·귀촌 정책은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 확산, 농촌주민의 귀농·귀촌자에 대한 인식 전환, 귀농·귀촌자와 기존 주민 간의 갈등 완화, 귀농·귀촌 초기 과정에서의 어려움 해소 등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각종 홍보 및 교육 등으로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현실 인식도 객관화되었다. 반면 귀농·귀촌 비용이 상승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자가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는 데는 지금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향후 귀농·귀촌 정책 기조로서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청장년층 귀농·귀촌자가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서 이들이 농업 후계자와 지역 인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50대 중반 이후 은퇴 귀농·귀촌자가 적은 비용으로 귀농·귀촌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청장년층 귀농·귀촌정책은 농업후계인력과 농업구조조정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반면, 50대 이후 귀농·귀촌자는 국토의 분산정주라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서 다음을 제안한다.

2.1. 청장년 귀농·귀촌자 지원 정책 내실화

젊은 층 귀농자가 일정 기간(3~5년) 경제적 부담 없이 농업 연수 및 정착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현행 선도농가실습지원과 농산업인턴지원 정책과 기본 틀은 유사하지만 시행기간과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다.[22]

예를 들면 선발된 젊은 귀농자가 농업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3년 이상 부여하는 것이다. 연수 기간 동안 일정액의

22 이는 일본에서 시행하는 청년취농급부금 정책의 벤치 마킹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최근 신규취농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2012년부터 도입된 최장 5년 동안 매달 130만 원 정도를 급부하는 청년취농급부금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급부금을 지급하고 연수가 끝난 귀농자에 대한 정착을 지원한다. 초기 영농 정착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규모(1,000~2,000평)의 시설하우스를 임대하거나 공공 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를 임대하는 사업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행 담보 위주의 정책 자금 지원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능력 있고 성공가능성이 있는 귀농·귀촌자를 선별하여 이들에게 유리한 조건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내용과 연계된다. 6차 산업화 정책이 농업과 2·3차 산업의 결합이라면 도시에서의 사업경험이 있는 귀농·귀촌자가 그 주체로서 적합할 수 있다. 성공가능성이 있는 귀농·귀촌자를 선별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수 귀농·귀촌자 인증제 도입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우수 귀농·귀촌 인증자에 대한 대출 방법을 현행의 담보 대출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신용 대출 등의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2.2.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거 정책 개발

초기 귀농·귀촌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며,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귀농·귀촌 경험을 축척하는 것이다. 농촌에 주거지 마련을 위해 귀농·귀촌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뉴타운조성사업 등이 있지만 이는 주택 구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높은 초기 비용을 요구한다. 귀농·귀촌인이 저렴하게 주거지를 마련하는 데에는 농촌에 산재하는 빈집을 일정기간 임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2009년부터 농어촌 정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데, 주로 철거 비용을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고창이나 문경과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 빈집을 수리하여 재활용하는 사례가 있지만 크게 활성화 되고 있지는 않다. 그 이유는 빈집 소유자의 협조부족과 소요 비용을 100%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데서 오는 지자체의 적극성 부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농촌빈집재활용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한다면 지금 보다는 농촌의 빈집 정비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촌빈집재활용사업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관련자에게 빈집정비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다.

한편 50대 중반 이후의 도시민 가운데는 도시에 거주지를 두고 농촌을 왕래하는 2지역 거주자(5도2촌 혹은 5촌2도)도 증가하고 있다. 통계상의 분류에서 이들은 귀농·귀촌자와 구분되지만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2지역 거주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개발도 필요할 때이다. 2지역 거주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농촌 주택 구입시의 융자지원과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조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그 동안 수차례 검토된 바 있지만 도시자본의 농촌 투기를 염려하여 정책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하지만 부동산을 둘러싼 환경이 과거와 많이 달라진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3.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 내실화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평가가 존재한다. 일부 지역처럼 내실화된 귀농·귀촌정책으로 귀농·귀촌자들의 유입이 촉진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공무원의 귀농·귀촌자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귀농·귀촌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은 지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 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귀농·귀촌자가 몰리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내실화된 정책이 귀농·귀촌자의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지자체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적은 비용으로 일시적이나마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달 10만 원의 월세로 2~3년간 임시 거처에서 머물

수 있는 둥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귀농·귀촌예비자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는 빈 농가를 지자체가 임차하여 어느 정도 수리해서 다시 임대하는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귀농·귀촌인은 초기 정착시의 복잡한 행정 업무와 영농 및 생활 정보 습득의 문제를 단일 창구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한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 행정과의 파트너쉽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쉽게 정착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지자체의 행정조직에 귀농·귀촌 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이에 대응하여 귀농·귀촌인협의회와 같은 민간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귀농·귀촌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 록 1

귀농·귀촌 요인 관련 선행조사 결과

저자 (연도)	제목	설문 대상 (유효 분석 대상 수)	결과
김성학, 서정원 (2014)	산촌마을 귀농·귀촌인 정착 동기와 생활만족 요인 분석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된 9개 산촌마을 94부(87부) (5점 리커드 척도)	자신 및 가족건강(3.97), 생태적 공동체 삶(3.48), 산촌생태마을 인지(3.43), 전원생활·농촌생활(3.37), 은퇴 후 여가생활(3.36), 가족결정(2.99)
홍성권 (2013)	도시민과 귀촌인의 삶의 만족도	괴산군 귀촌인 180명(복수응답)	농촌생활이 좋아서(38.9%), 도시생활 불편(12.1%), 추구하는 가치를 쫓아(12.1%), 은퇴 후 여가생활(9.3%), 도시보다 적은 지출(6.2%), 자신/가족건강(5.6%), 기타(15.8%)
성주인, 박문호 (2013)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정책의 방향과 과제	양평, 진천, 부안, 청송의 2,026명 주민 중 타 지역에서 이주했다고 응답한 512명(110명)	경제적 이유(45.4%), 자연 속 여가생활(17.3%), 가족과 함께 하려고(11.4%), 자신/가족 건강(7.0%), 생활 편리(5.4%), 연고가 있어서(3.2%), 기타(9.2%)
이정화, 김백수 (2012)	귀농귀촌인의 현장실습 교육 운영전략 개발	전남/전북 지역 2003년 이후 귀농귀촌 이주민(복수응답)	농촌생활이 좋아서(48.3%), 자신/가족건강(41.4%), 은퇴 후 생활 위해(40.1%), 영농 종사 위해(29.4%), 가족결정(21.8%), 밝은 농업전망(17.7%), 영농승계(14.5%), 도시에서 취업실패(8.4%), 기타(3.4%)

			귀농귀촌목적	경제적 이유(33.3%), 은퇴 후 생활 위해(18.9%), 자신/가족건강(10.8%), 전원생활 위해(10.3%), 가족친지와 가까이 살려고(9.0%), 생태·공동체 가치를 좇아(8.3%), 도시생활 회의(3.7%), 기타(5.7%)
김철규 외 (2011)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 방안 연구	진안군 귀농귀촌인 357명	진안선택이유	연고가 있어서(50.7%), 좋은 자연환경(21.0%), 전에 살던 도시와 근접(8.8%), 기타(19.5%)
			귀농귀촌동기	경제적 이유(24.8%), 전원생활 위해(22.9%), 자신/가족건강(17.8%), 생태·공동체 가치를 좇아(12.7%), 가족친지와 가까이 살려고(7.3%), 은퇴 후 생활 위해(5.4%), 기타(9.1%),
성주인 외 (201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심층평가	금산, 고창, 봉화의 귀농귀촌인 146명 (복수응답)	자연환경(47.3%), 연고가 있음(36.3%), 낮은 지가(30.8), 영농요건(24.7%), 농사 외 다른 일(8.2%), 귀농귀촌지원(4.8%), 기타(17.1)	
농업인재개발원 (2011)	귀농·귀촌 교육수료생 영농정착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전국 귀농귀촌인 471명(복수응답)	정착지선택이유	연고가 있어서(30.8%), 자연환경(21.9%), 영농요건(18.7%), 낮은 지가(10.8%), 귀농귀촌 지원(10.2%), 생활편리(8.7%), 지인의 소개(8.3%), 기타(14.8%)

강대구 (2006)	최근 귀농실태와 지원대책방안 연구	전국 귀농인 480명(375명)	경제적 이유(29.0%), 인간다운 삶 추구(18.7%), 농촌생활이 좋아서(16.8%),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13.1%), 은퇴 후 생활위해(12.5%), 자신/가족건강(5.9%), 기타(4.0%)
임혜영 (1999)	귀농자의 적응과 복지에 관한 연구	전라남도 귀농자 702명(383명)(복수응답)	경제적 이유(70.2%), 고향·시골서 살려고(29.8), 부모 공양(17.8), 농업 통한 꿈 실현(12.5%), 자신/가족건강(6.3%), 도시생활 싫어서(4.2%), 기타(4.7%)
김형용 (1998)	귀농자의 실태와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전라남도 귀농자 222명	농업 장래성(41.0%), 영농승계(27.5%), 도시에서의 낮은 소득 및 도시생활 염증(14.4%), 실직(10.4%), 자신/가족건강(1.8%), 단순 생계수단(1.3%), 기타(3.6%)
신윤철 외 (1998)	귀농자의 귀농동기 및 배경특성 분석	충청남도 귀농자 235명(202명)	농업 장래성(30.2%), 도시에서의 낮은 소득 및 도시생활 염증(22.3%), 사업실패(16.8%), 영농승계(15.8%), 노후대비(5.0%), 전원생활(5.0%), 건강관리(2.5%), 기타(2.5%)
조록환 (1998)	귀농자의 생활실태 분석	IMF 이전 귀농 농가 400호(366부)(복수응답)	농촌생활 선호(66.1%), 자신/가족건강(24.3%), 농업 장래성(22.7%), 도시의 저소득(16.1%), 은퇴 후 생활 위해(15.8%), 영농승계(15.6%), 사업실패(13.1%), 기타(13.7%)
이정관 (1998)	귀농자의 영농정착과 관련된 특성	보령/당진 귀농자 163명(신윤철 외 1998 연구의 조사대상자와 상당 부분 동일한 것으로 짐작됨)	은퇴 후 생활 위해(30.1%), 도시에서의 낮은 소득 및 도시생활 염증(25.2%), 영농승계(17.8%), 사업실패(12.3%), 전원생활(6.1%), 노후대비(5.5%), 건강관리(1.8%), 기타(1.2%)

부 록 2

귀농·귀촌자 및 이장 설문조사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귀농·귀촌자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는 귀농·귀촌의 요인과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농·귀촌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는 귀농·귀촌자분들을 통해 귀농·귀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우리나라 귀농·귀촌 정책 수립을 위한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설문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 10.

문의사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담당자 : 박시현 선임연구위원 (02-3299-4343)
최용욱 연구원 (02-3299-4392)

응답자 기본 사항
연 령 : ( )세, 성별: □ 남 □ 여, 가 족 수: ( )명

1. 귀하께서는 언제 귀농·귀촌 하셨습니까? 예: 2010년

( ) 년

2. 귀농·귀촌 전에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 ) 시/도 ( ) 시/군 ( ) 읍/면

3. 귀농·귀촌 전에는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 ① 자 영 업 (분 야:)

□ ② 임금 근로자 (분 야:)

□ ③ 무 직

□ ④ 학 생

□ ⑤ 기 타

4. 귀하께서 실제로 귀농·귀촌을 실행하게 된 주요 계기는 무엇입니까?

항 목	전혀 중요하지 않았음	별로 중요하지 않았음	보통이었음	어느 정도 중요했음	매우 중요했음
	←				
정년 등으로 도시에서의 삶이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음	①	②	③	④	⑤
농업과 농업 관련 분야 종사를 위해	①	②	③	④	⑤
농사 이외의 비영농 분야 종사를 위해	①	②	③	④	⑤
도시 생활이 싫어서	①	②	③	④	⑤
농촌이 좋아서	①	②	③	④	⑤
건강 상의 이유(쾌적한 환경, 안전 먹거리 자가 생산 등)	①	②	③	④	⑤

5. 귀농·귀촌을 결심하는 데 영향을 준 도시생활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입니까?

항 목	전혀 중요하지 않았음	별로 중요하지 않았음	보통이었음	어느 정도 중요했음	매우 중요했음
	←				
비싼 거주비나 과도한 생활비	①	②	③	④	⑤
도시에서 적절한 생계수단 확보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매연, 소음, 먼지 등 환경 위해 요소(일상 건강 유지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교통 혼잡이나 과도한 인구 밀집	①	②	③	④	⑤
양육 혹은 교육 환경(과도한 경쟁, 자연/인성 교육 어려움 등) 부적절	①	②	③	④	⑤
피상적 인간관계 혹은 도시에서의 인간관계 단절	①	②	③	④	⑤
기타 중요 이유	※자세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6. 귀하는 현재 귀농·귀촌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① 고향이다(혹은 부모님의 거주지나 토지가 있다)

② 지인이나 친척이 거주하는 지역이어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③ (아는 사람은 딱히 없었으나) 한동안 종종 갈 기회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다

④ 귀농귀촌을 준비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알아 가기 시작하였다

⑤ 지역을 많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귀농·귀촌했다

7. 다음 중 귀하께서 현 거주 지역으로 귀농·귀촌을 결심하시면서 중요하게 고려하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항 목	전혀 중요하지 않았음	별로 중요하지 않았음	보통이었음	어느 정도 중요했음	매우 중요했음
	←				
부담스럽지 않은 농지가격 및 농지구입이 용이함	①	②	③	④	⑤
농사 기술 습득 여건이 좋아서	①	②	③	④	⑤
일자리를 찾기에 용이해서	①	②	③	④	⑤
빈집 등 주거 마련이 용이하며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	①	②	③	④	⑤
지역의 경관, 기후, 지형 등 선호하는 자연조건	①	②	③	④	⑤
상대적으로 양호한 서비스(의료, 복지 등) 및 생활 기반(쇼핑, 문화 생활 등)	①	②	③	④	⑤
자녀 교육 환경	①	②	③	④	⑤
전에 거주하던 곳과 멀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지역민(귀농귀촌인 단체 등 민간 포함)의 호의와 도움	①	②	③	④	⑤
지자체 재정 지원 프로그램(농지 혹은 거주지 구매 위한 융자나 보조금, 영농설비 지원, 빈집 리모델링 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지자체 실시 각종 교육 및 정보제공	①	②	③	④	⑤
기타 중요 이유	※자세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8. 귀농· 귀촌 초기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까?

총금액	주거 마련	농사 기반 마련	생 활 비	기 타
(원)	(원)	(원)	(원)	(원)

9. 귀하가 귀농·귀촌할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토지 가격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구분	귀농·귀촌 당시( ) 년	2014년 현재
농지	( )원/평	( )원/평
대지	( )원/평	( )원/평

10. 귀하의 가구에서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table>
<tr><td>□ ① 농사만을 짓고 있다</td><td colspan="2">- 영농규모 ( )평
- 주 소득작물 ( )
- 연간 농업수입 ( )원</td></tr>
<tr><td>□ ② 농사와 다른 일을 겸하고 있다</td><td>- 영농규모( )평
- 주 소득작물 ( )
- 연간 농업수입 ( )원</td><td>- 다른 일은? ( )
- 연간소득은? ( )원</td></tr>
</table>

□ ⑤ 일은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다	-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⑥ 기 타	( )

11. 귀하께서는 농업규모를 확대할 생각이십니까?

□ ① 농업 규모를 확대해 갈 생각이다	- 확대하고자 하는 규모와 확대 방법(임차 혹은 구입) 및 주요 재배작목은 무엇입니까? 규모: ( )평 주요 재배 작목: ( ) - 농업 규모 확대 시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농지가격, 농기계구입, 판로확대 등을 자유롭게 기술) ( )
□ ② 지금 정도로 현상 유지할 생각이다	-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③ 점차 농업 규모를 줄여나갈 생각이다	-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④ 가까운 장래에 농업을 그만둘 생각이다	-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2. 귀하의 한 달 소득과 지출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부족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소득	지출	부족액 해결방안
(　　)원	(　　)원	(　　)

13. 귀하께서는 다음 모임에 어느 정도 참여합니까?(해당 사항에만 표시)

항 목	전혀 참여 안 한다		보통이다		자주 참여 한다
마을 회의나 행사	①	②	③	④	⑤
영농 조합, 작목반 협동조합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경제 모임	①	②	③	④	⑤
시군 단위 귀농·귀촌인 모임	①	②	③	④	⑤
읍면 단위나 마을단위 귀농·귀촌인 모임	①	②	③	④	⑤
귀농·귀촌과 관련된 전국 단위 모임	①	②	③	④	⑤
시군 단위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모임	①	②	③	④	⑤
기 타 모 임 (　　)	①	②	③	④	⑤

14. 귀하의 귀농·귀촌 생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임은 무엇이고 자주 나가는 모임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모임	(　　) 모임	참여 빈도: (　　회/월) 또는 (　　회/년)
자주 나가는 모임	(　　) 모임	참여 빈도: (　　회/월) 또는 (　　회/년)

15. 귀하의 지역 주민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해당 사항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전혀 아니다		보통		매우 그렇다
지역의 귀농귀촌인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마을 주민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가능한 마을 주민과 거리를 두고 살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지역 주민들이 텃세가 심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마을의 이장 또는 지역 리더가 될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될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지역 주민과 같이 하는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 마을 이장, 총무, 사무장, 방과후 교사, 꾸러미 사업 공동 참여 등)

17. 귀하께서 귀농·귀촌을 하여 생활하시면서 힘든 부분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 이내 응답) (1순위:) (2순위:)

□ ① 수입의 감소 □ ② 주거 여건 열악
□ ③ 장래 불안(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 ④ 가족 등 도시에서의 삶의 방식과의 단절
□ ⑤ 텃세 등 기존 주민과의 삶의 방식 차이
□ ⑥ 생활 불편(식품/생필품 등 구매 어려움) 및 의료 서비스 수준 열악
□ ⑦ 자녀 교육 어려움 □ ⑧ 문화 및 여가 생활 미흡
□ ⑨ 기 타 ( )

18. 귀하는 앞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습니까?

□ ① 앞으로도 계속 현 거주지에서 살 예정이다	-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② 향후 도시 지역으로의 이주를 고려 중이다	-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③ 다른 농촌 지역으로의 이주를 고려 중이다	-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어느 곳으로 이주할 생각이십니까? ( )
□ ④ 기 타	( )

19.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귀농·귀촌자가 증가하리라 생각하십니까?

□ 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 ② 지금 상태를 유지하거나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 ③ 지금 살고 있는 귀농·귀촌자도 빠져나가 앞으로는 줄어들 것이다
□ ④ 기타

19-1. 향후 귀농·귀촌자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지가상승으로 인한 귀농·귀촌 비용 증가, 장래불안, 농업전망 불투명 등을 자유롭게 기술)

( )

20. 귀하는 기회가 된다면 귀농·귀촌 이전 가진 경험이나 재능을 현 거주 지역에서 활용하고픈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어느 정도 의향이 있다 □ ③ 활용 의향이 별로 없다

21. 귀농·귀촌 관련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적어 주십시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귀농·귀촌 관련 마을 이장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농업·농촌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귀농·귀촌의 요인과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귀농·귀촌자의 실태 파악을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우리나라 귀농·귀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 줄 아오나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 10

문의 사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담당 : 박시현 선임연구위원 (02-3299-4343) 최용욱 연구원 (02-3299-4392)

응답자 기본 사항	
연 락 처 : ( )	
연 령 : ( )세	성별: □ 남 □ 여
응답자 주소	( ) 시/도 ( ) 시/군/구 ( ) 읍/면/동 ( ) 리(마을)

1. 귀하의 마을에는 귀농·귀촌자가 많은 편입니까? 많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귀하의 마을주민들은 귀농·귀촌자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예: 같은 마을 사람으로, 타지 사람으로, 잠시 살다가 갈 사람으로)

3. 귀농·귀촌자는 마을 주민과 잘 어울립니까?
(예: 잘 안 어울리는 편이다. 주민과 함께 조직 활동을 같이 한다. 어떤 조직 활동?)

4. 귀하의 마을에는 귀농·귀촌자가 마을 조직에 들어오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까?
(예: 마을 공동 재산 관련, 마을 회비 관련, 주민들의 추천 또는 동의 등)

5. 귀농·귀촌자는 마을 사업에 어떻게 기여합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

6. 귀농·귀촌자와 갈등은 없습니까? 만약 발생한다면 어떤 분야에서 발생합니까?

7. 귀농·귀촌자로 인해 마을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 좋은 방향 :

- 나쁜 방향 :

8. 향후 마을 중심세력으로 귀농·귀촌자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농업인 후계자 가능성, 마을 이장 등 마을 지도자가 될 가능성, 기타)

참고 문헌

DMC Media. 2012.『베이비붐 세대 분석 보고서』.

강대구. 2006.『최근 귀농실태와 지원대책방안 연구: 2005년 농림부 정책과제 보고서』. 농림부.

강대구. 2007. “귀농동기에 따른 귀농정착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39(1): 59-98.

공도윤. 2014. “은퇴 후 귀농귀촌에 따른 생활비절감효과.”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

국회예산정책처.『2012. 2012-2060 장기재정전망 및 분석』.

김경덕·홍준표·임지은. 2012.『귀농·귀촌 사회적 편익 분석 연구』.

김성수 외. 2004. “귀농자들의 농촌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향.”『한국농촌지도학회지』11(1): 53-65. 한국농촌지도학회.

김성학·서정원. 2014. “산촌마을 귀농·귀촌인 정착 동기와 생활만족 요인 분석.”『농촌계획』20(1): 105-113. 한국농촌계획학회.

김정섭. 2014. “귀농·귀촌이 농촌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귀농인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농어촌관광학회 하계학술토론회 발표 자료.

김정섭. 2014. “귀농인의 사회·경제 활동과 함의.” 한국농촌지도학회 제3호.

김정섭·성주인·마상진. 2012.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KREI 농정포커스』제1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재홍. 1998. “귀농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농업과학연구』25(1): 138-147.

김창현 외. 2011.『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활성화 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김철규 외. 2011.『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 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연구보고서.

김형용. “귀농자의 실태와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축산경영학회지』14(1): 205-223.

노재선·정진화·전지연. 2013. “귀농과 농가 고령화: 귀농인구 유입에 따른 농촌 인구구조 변화 예측.”『농촌계획』19(4): 203-212.

농업인재개발원. 2011.『귀농·귀촌 교육수료생 영농정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마상진·정기환. 2008.『신규 취농의 진입장애 해소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상우·김동주. 2001.『수도권 집중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국토연구원.
박문호·오내원·임지은. 2012.『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추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성정·이선주·진명숙·장희영. 2012.『귀농·귀촌 여성의 농촌 정착 및 사회참여 지원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성희. 2012. “미국의 귀농·귀촌 사례.”『세계농업』 제14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시현 외. 2011.『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영천시 인구증대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신규·조경욱·조아영. 2013.『귀농·귀촌 여성의 전북지역 정착방안 연구』. 전북발전연구원.
서만용·구자인. 2005. “귀농자의 농촌정착에 관한 탐색적 연구.”『농촌관광연구』 12(2): 145-171. 한국농어촌관광학회.
성주인·김성아. 2012. “도시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농업전망 2012』 p.239-26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박문호. 2013.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정책의 방향과 과제.”『농업전망 2013』(p.809-83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외a. 2012.『농어촌 정주공간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외b. 2012.『귀촌과 지역공동체 육성 정책의 연계 추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지혜. 2011.『귀농한 가족, 귀농하지 않은 여성: 청도군 귀농가족의 적응과정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 계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손상락. 2012.『경남지역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경남발전연구원.
송인하. 2013.『생태가치 귀농인의 농촌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경제목적 귀농인과의 비교』.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윤철 외. 1998. “귀농자의 귀농동기 및 배경특성 분석.”『공주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6: 59-70.
오수호. 2011. “도시민의 농촌지향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동향: 1996~2010년의 국내 문헌을 중심으로.”『한국도시지리학회지』 14(2): 77-90.
_____. 2012. “농촌지향 이주 가구의 귀촌적응과정과 영농실태.”『한국지역지리학회지』 18(1): 101-117.

우종현. 1997. “귀향농가의 발생원인과 적응과정.”『한국지역지리학회지』. 3(1): 99-113.

유정규 외. 2011.『귀농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 지역발전위원회.

이민수. 2009. “귀농·귀촌 체계 구축을 위한 유럽사례 시사점.”『전북발전포럼』통권 제12호.

이수행·이상훈. 2012. “한국 농업의 새로운 트렌드: 귀농·귀촌.”『이슈&진단』제42호. 경기개발연구원.

이정관. 1998. “귀농자의 영농정착과 관련된 특성”. 공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화·김백수. 2012.『귀농·귀촌인의 현장실습 교육 운영전략 개발』. 농촌진흥청.

이해진·김철규. 2013. “대안가치지향 귀농귀촌인의 사회적 특성과 역할.”『농촌사회』, 23(2): 49-90.

인재개발원. 2011.『귀농·귀촌 교육수료생 영농정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임혜영. 1999. “귀농자의 적응과 복지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정균. 2011.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이후 자산여력 진단.”『CEO 리포트』. KB 경영연구소.

정호성 외. 2010.『베이비 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조록환. 1998. “귀농자의 생활실태 분석.”『도시와 빈곤』34: 42-47.

진양명숙. 2008. “젊은 도시인의 농촌 이주의 양상과 성격: 전라북도 진안군의 사례를 중심으로.”『지역사회연구』. 16(4): 105-131. 한국지역사회학회.

최은영·이성우. 2006. “미국과 영국의 역도시화 논쟁과 우리나라 인구 현상의 변화(1990~2005년).”『한국도시지리학회지』9(3): 109-123.

통계청. 2010. “통계로 본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통계청. 2011. “2011년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2011.12.14.).

통계청. 2012.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분석-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중심으로.”

한진희 외. 2007.『고령화 사회의 장기 거시경제변수 전망: 2006~2080』. KDI.

홍성권 외. 2013. “도시민과 귀촌인의 삶의 만족도.”『농촌계획』19(4): 237-248.

홍성효·송정기·김종수. 2012. “귀농귀촌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북 진안군의 사례.”『농촌사회』22(2): 49-82.

吉川光洋. 2010.『農村地域への移住者增加と歷史的変遷ーいｊターンの概念の發生と政策的對応』. 愛智江南短期大學. 地域協働.

高橋嚴. 2010. 高齡化及び人口移動に伴う地域社會の変動と今後の對策に關する學際的研究報告書. 全勞濟協會.

Berry, B.J.L. (ed.) 1976. The counterurbanization process: urban america since 1970, In Urbanization and Counterurbanization, Sage, Beverly Hills.

Bosworth G. 2010. “Commercial counterurbanisation: an emerging force in rural 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 and Planning A 42: 966-981

Bosworth G. 2008. “Entrepreneurial in-migrant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rural Eng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6: 355-369

Brown, David L. and Nina Glasgow. 2008. Rural Retirement Migration, Dordrecht, the Netherlands: Springer.

Champion, A.G. (ed.) 1989. Counterurbanization: the changing pace and nature of population deconcentration. Edward Arnold.

Dahms, F.A. and Mccomb, J. 1999. “Counterurbanization, in-teraction and functional change in a rural amenity area: a Ca-nadian example”. Journal of Rural Studies 15. 2.

Enyedi, Gy. 1988. “A varosnovekedes szakaszai”. Akademia Kiado, Budapest.

Findlay, Allan M., David Short, and Aileen Stockdale. 2000. “The Labour-Market Impact of Migration to Rural Areas.” *Applied Geography* 20(4): 333–348.

Halfacree, Keith. 2007. “BACK-TO-THE-LAND IN THE TWENTY-FIRST CENTURY–MAKING CONNECTIONS WITH RURALITY.”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98: 3-8.

Harris JR, Todaro MP. 1970. “Migration, unemployment and development: A two-sector analysis.” *American Economic Review* 60: 126-42

Hjort S, Malmberg G. 2006. “The attraction of the rural: Characteristics of Rural Migrants in Sweden.” *Scottish Geographical Journal* 122: 55-75.

Hosszu, Szilvia. 2009. “Counterurbanization.” Working Paper No. 06/2009. Danish Institute of R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King, R. 2012. “Theories and Typologies of Migration: an Overview and A Primer.” Malmo institute for studies of migration, diversity and welfare.

Laoire, C.N. 2007. ″The ‘green green grass of home’? Return migration to rural Ireland″. Journal of Rural Studies 23. pp. 332-344.

Lee E. S. 1966. “A Theory of Migration.” *Demography* 3: 47-57

Lewis W. A. 1954.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ur.”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22: 139-91

Mitchell C. 2014. “Re-thinking commercial counterurbanisation: Evidence from rural Nova Scotia, Canada.” *Journal of Rural Studies* 36: 137-148

Passaris C. 1989. “Immigration and the Evolution of Economic Theory.” *International Migration* 27: 525-42.

Permaculture Association. 2006. <http://www.permaculture.org/>

Ravenstein E. G. 1885. “The Laws of Migration.” *Journal of the Statistical Society of London* 48(2): 167-235.

Shucksmith, Mark. 1981. No Homes for Locals? London, England: Gower Ashgate.

Stockdale, A. 2006. “The role of a ‘retirement transition’ in the repopulation of rural areas.” *Population, Space and Place* 12.

Stockdale, E. and Findlay, A. 2004. “Rural in-migration: A catalyst for economic regeneration.” Global Change & Human Mobility. ICG-UK Glasgow.

Stockdale, A., Findlay, A., Short, D., 2000. “The repopulation of rural Scotland: opportunity and threat.” *Journal of Rural Studies* 16: 243-257.

Von Reichert et al. 2014. “Impacts of Return Migration.” *Rural Sociology*, 79(2): 200-226.

연구보고 R718
귀농·귀촌 요인과 농촌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4. 12.
발 행 2014. 12.
발행인 최세균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전화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쇄처 경성문화사
전화 02-786-2999 http://www.ks5944.com